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25.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 목 차 】

※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의견 요약 ····· ①

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1. 세 입 ····· 1

2. 세 출 ····· 3

가. 개 요 ····· 3

나. 예비비 ····· 3

다. 전 용 ····· 4

라. 이 용 ····· 5

마. 수입대체경비 ····· 5

바. 이 월 ····· 6

사. 불 용 ····· 7

Ⅱ.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 8

1. 개 요 ····· 8

2. 세 입 ····· 10

3. ODA 총괄 ····· 17

가. ODA 개요 ····· 17

나. 양자 무상 및 다자 ODA 현황 분석 ····· 21

다. 검토의견 ····· 26

4. 한반도 평화 조성 ····· 33

가. 개 요 ····· 33

나.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35

다.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 39

5.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44
가. 개 요 ····· 44
나.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 45
다.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 51

6.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54
가. 개 요 ····· 54
나.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55
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 59

7. 국제기구분담금 ····· 62
가. 개 요 ····· 62
나. 기타 의무분담금 ····· 63
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 65

8. 다자관계 협력 ····· 74
가. 개 요 ····· 74
나.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 75

9.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 79
가. 개 요 ····· 79
나.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 80

10. 국제개발협력 ····· 83
가. 개 요 ····· 83
나. 인도적지원(ODA) ····· 86

11.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 102
가. 개 요 ····· 102
나.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103
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 108

12.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 116

가. 개 요 ····· 116
나. 재외국민 보호 ····· 117

13. 여권업무 선진화 ····· 120
가. 개 요 ····· 120
나.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 121

14. 경제외교 ····· 125
가. 개 요 ····· 125
나.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 126

15.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 134
가. 개 요 ····· 134
나.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 135

16.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 140
가. 개 요 ····· 140
나.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 141

17. 재외공관 운영 ····· 145
가. 개 요 ····· 145
나.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 146
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 149

18. 외교행정지원 ····· 154
가. 개 요 ····· 154
나. 기관운영 기본경비 ····· 159
다.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 162
라.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 168
마.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 171

19. 한국국제협력단 ····· 174
가. 개 요 ····· 174
나. 국별 협력사업 ····· 178

다. 글로벌 프로그램 ····· 186
라. 전략적 협력강화 ····· 192
마. 인도적지원(ODA) ····· 198

20. 한·아프리카재단 ····· 209
가. 개 요 ····· 209
나. 수 입 ····· 209
다. 지 출 ····· 210
라. 검토의견 ····· 212

Ⅲ. 국제교류기금 결산 ····· 220

1. 총 괄 ····· 220

2. 검토의견 ····· 229
가. 수 입 ····· 229
나. 지 출 ····· 233

Ⅳ. 국제질병퇴치기금 결산 ····· 245

1. 총 괄 ····· 245

2. 검토의견 ····· 250

Ⅴ. 외교부 통합 재무결산 분석 ····· 253

1. 총 괄 ····· 253
2. 재정상태표 분석 ····· 254
3. 재정운영표 분석 ····· 257
4. 순자산변동표 분석 ····· 263

Ⅵ. 외교부 성과관리 분석 ····· 266

1. 총　괄 ····· 266
2. 성과체계 현황 ····· 269
3.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272

Ⅶ.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74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의견 요약】

프로그램	세부사업	주 요 검 토 내 용
세입	-	□ 관유물대여료 관리 철저 필요 □ 세출예산 증액을 고려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ODA 총괄	-	□ 인도적지원 관련 결산 시정조치 이행 미흡 □ KOICA 출연금의 미교부 지양 필요
한반도 평화 조성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집행부진 □ 내역사업 간 유사성 및 중복성 고려한 통합·조정 필요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 내역사업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 필요 □ 예산 배정 시 면밀한 검토 및 비목에 맞는 예산 집행 준수 필요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 특정 내내역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개선 필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외교행사 연계 사업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예산 반영 미흡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 행사 필수경비 미편성에 따른 예산운용계획 부실
국제기구 분담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 한국에 소재한 국제기구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2024년도 신규 편성 분담금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 필요
다자관계 협력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 2024-25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집행부진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 부처 간 예산배분 미흡으로 인한 과다 전용 및 연구비 미집행 부적절
국제개발 협력	인도적지원(ODA)	□ 인도적지원 예산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지원 부적절 □ KDRT 관련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 부진 등

프로그램	세부사업	주 요 검 토 내 용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대표성 및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성과지표 제시 필요
	공공외교 역량강화	□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정보 시정업무 관리체계 보완 필요 □ 상위 내역사업 목적과 하위 내내역사업간의 정합성 제고 필요 □ 재외공관의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관행 시정 필요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재외국민 보호	□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사업 확대 및 내실화 필요
여권업무 선진화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수입대체경비)	□ 교육·평가 사업의 동일 수탁기관 수임에 따른 공정성 우려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 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경제외교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직제를 우회한 조직운영 개선 주의 필요 등 □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부진 □ 경제외교 관련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 필요 등
외교정책 연구 및 교육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 재외공관 현장실습 관리 · 감독관 출장비 집행의 정상화를 통한 필수적 교육관리 기능 회복 필요
재외공관 운영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 정착지원금 근거 규정 마련 필요 등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력 운용 개선 필요

프로그램	세부사업	주 요 검 토 내 용
외교행정 지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 연례적 예산변경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집행계획 마련 필요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 국립외교원의 '학술지 구독' 및 '온라인 DB 구독' 계약 체결 및 집행 시 법령 및 지침 준수와 공정성·효율성 제고 필요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 청년인턴 채용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 모색 필요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 재외공관장회의 사업 예산의 현실화 필요
한국국제 협력단	국별 협력사업	□ 신규사업의 초년도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미얀마·우크라이나 대상 국별협력 사업의 집행관리 필요
	글로벌 프로그램	□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의 목표와 실적의 일치 필요 □ 학위과정연수에서의 연례적 이월액 발생 관행 시정 필요
	전략적 협력강화	□ 전략사업비 효과성 제고 필요
	인도적지원(ODA)	□ 잦은 사업 유형 변경 지양 필요 등 □ 참여 기관의 일반관리비 과다 지출 부적절
한·아프리카 재단	총괄	□ 결산보고서 상 감사의견서 미첨부에 따른 투명성·신뢰성 저해 □ 특근매식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방식 개선 필요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 필요
국제교류기금	수입	□ 기여금 요율 인하에 따른 법정부담금 및 적립금 감소 지속에 선제적·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지출 총괄	□ 조속한 지출 구조 조정 방안 마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노력 필요
	국제협력네트워킹	□ 과거 유사 사업의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IISS 코리아체어'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및 효과성 제고 필요
	문화교류협력강화	□ <거리의 서> 전시 사업 관련 동일사업 내 용역계약 분할 및 집행 부적정에 따른 계약관리 개선 필요
국제질병 퇴치기금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 환율 변동으로 인한 GAVI 지원 미흡

I.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 입

< 세입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과 목	세 입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 차 (C-A)	예산액대 수납액 비율 (C/A)
재산수입	559	440	438	-	2	△121	78.4
경상이전수입	7,203	16,393	16,099	-	294	8,896	223.5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37,200	197,853	197,853	-	-	60,653	144.2
수입대체경비 수입	132,361	154,022	154,022	-	-	21,661	116.4
합 계	**277,323**	**368,708**	**368,412**		**296**	**91,089**	**132.8**

2024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773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684억 1,200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액 대비 910억 8,900만원이 증가(132.8%)하였음.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경상이전 수입 88억 9,6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06억 5,300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 216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세입증감액조서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편성대비 증감액		증 감 사 유
	증	감	
11관 재산수입	**299**	**419**	국유재산 건물 임대 수입액 감소 및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 수입액 증가
51항 관유물대여료	-	419	
511목 토지대여료	35	-	
512목 건물대여료	-	419	
54항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64	-	
546목 기타재산이자수입	264	-	
12관 경상이전수입	**8,895**	-	국고보조금(분담금)반환 등 기타경상이전 수입액 증가
56항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38		
564목 징계부과금	38		
57항 변상금 및 위약금	18	-	
571목 변상금	4	-	
572목 위약금	14	-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8,839	-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8,839	-	
13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0,653**	-	사증 및 공증 수수료 등 영사 수입액 증가
65항 면허료 및 수수료	60,332	-	
651목 면허료 및 수수료	60,332	-	
69항 잡수입	321	-	
691목 기타잡수입	321	-	
14관 수입대체경비수입	**21,661**	-	여권 수수료 수입액 증가
65항 면허료 및 수수료	21,661	-	
651목 면허료 및 수수료	21,661	-	
합 계	**91,508**	**419**	

2. 세 출

가. 개 요

< 세출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C/A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4,029,753	4,056,957	3,911,217	97.1	96.4	1,934	143,805

※ 예산현액(4,056,957) = 당초예산액(4,029,753) + 전년도 이월액(9,004) + 수입대체초과지출승인액(18,200)

2024년도 당초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조 297억 5,3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0억 400만원 및 수입대체초과지출승인액 182억원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4조 569억 5,7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3조 9,112억 1,700만원을 집행(97.1%)하였고, 19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38억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나. 예비비

해당사항 없음.

다. 전 용

< 전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전 용 사 유	금 액
기 타	재외공관 개설 및 청사 임차료 인상	4,700
	교체여비	2,644
	재외공관 공공요금 부족	2,128
	재외공관 직원 의료비 보상	1,383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984
	신설 공관 외교정보시스템 구축	73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민간지원요원 채용	613
	정상 및 총리 해외순방행사	338
	기타	2,277
합 계		15,801

2024년도 전용액은 총 158억 100만원으로, 재외공관 개설 및 청사 임차료 인상 47억, 교체여비 26억 4,400만원, 재외공관 공공요금 21억 2,800만원 등에 전용되었음.

라. 이 용

< 이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이 용 사 유	금 액
기 타	유엔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비 부족	1,380
합 계		1,380

2024년도 이용액은 총 13억 8,000만원으로, 유엔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비 부족으로 이용되었음.

마. 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 세출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과 목	세출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초과 지출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증감액	이용·이체액	초과지출 승인액					
외교·통일	141,030	64	-	-	18,200	159,294	158,899	63	331	-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수입대체경비)	141,030	64	-	-	18,200	159,294	158,899	63	331	-

2024년도 수입대체경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1,410억 3,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400만원, 초과지출승인액 182억원이 합산되어 예산현액은 1,592억 9,400만원임.

이 중 1,588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고, 6,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3,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바. 이 월

< 이월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이월사유	금 액
미지급금 이월	계약조건에 따른 미지급금 발생 등	1,036
	연구용역 미완료로 인한 이월 등	612
	소 계	**1,648**
사업계획 변경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165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121
	소 계	**286**
합 계		**1,934**

2024년도 이월 규모는 19억 3,400만원으로, 계약조건에 따른 미지급금 이월(10억 3,600만원) 발생 등이 주요 사유임.

사. 불 용

< 불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불 용 사 유	금 액
지급사유 미발생	인건비 지급사유 미발생 등	2,330
	소 계	**2,330**
계획변경 또는 취소	행사변경 및 취소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	2,261
	소 계	**2,261**
예산 절감	사업 예산 절감	192
	소 계	**192**
집행잔액	기타 집행잔액	139,022
	소 계	**139,022**
합 계		**143,805**

2024회계연도 불용액은 총 1,438억 500만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23억 3,000만원, 계획변경 또는 취소 22억 6,100만원, 예산 절감 1억 9,200만원 및 집행잔액 1,438억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Ⅱ.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1. 개 요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를 보면, 한반도 평화 조성 등 17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4조 29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0억 400만원 및 수입대체 초과지출 승인액 182억원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4조 569억 5,700만원임.

이 중 3조 9,11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38억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외교부 프로그램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2023 결산	2024년				2025 예산
		본예산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계	3,162,910	4,029,753	4,056,957	3,911,217	96.4	4,221,776
1. 한반도 평화 조성	22,523	15,712	15,772	13,470	85.4	22,101
2. 정상외교	53,094	27,113	28,184	26,058	92.5	29,557
3.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963	5,334	5,359	4,397	82.0	4,680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4,158	46,147	46,714	44,945	96.2	11,501
5. 국제기구분담금	660,366	718,311	718,311	707,173	98.4	826,224
6. 다자관계 협력	17,378	25,013	26,867	25,733	95.8	21,585
7.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2,680	5,239	5,239	4,795	91.5	4,848
8. 국제개발협력	1,247,771	1,968,035	1,968,035	1,893,806	96.2	1,967,014

프로그램	2023 결산	2024년				2025 예산
		본예산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9. 국제법적 대응 강화	5,993	6,673	6,922	6,310	91.2	6,523
1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6,111	23,110	23,110	20,812	90.1	22,475
11.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2,496	15,744	15,585	12,711	81.6	14,679
12.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제고 및 재외동포 역량강화	33,207	-	-	-	-	-
13. 여권업무 선진화	109,483	141,030	159,294	158,899	99.8	123,893
14. 경제외교	10,461	12,860	12,877	11,171	86.7	112,566
15.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4,244	9,806	11,186	10,386	92.9	2,698
16.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2,524	15,964	15,464	13,057	84.4	14,945
17. 재외공관운영	712,023	776,394	776,478	744,765	95.9	801,182
18. 외교행정지원	213,435	217,268	221,560	212,727	96.0	235,305

2. 세 입

□ 관유물대여료 관리 철저 필요

관유물대여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1]에 따른 토지, 건물 등 정부 소유물에 대한 대여 수입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시 관유물대여료의 세입예산 계상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외교부는 2024년도 관유물대여료 예산액을 4억 2,900만원 편성하였으나, 10.5%인 4,5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4년 관유물대여료 결산내역 및 '25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년				2025예산
			예산		결산(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51 관유물대여료	328	207	429	429	45	10.5	396
토지대여료 (51-511)		1			35	-	-
건물대여료 (51-512)	328	206	429	429	10	2.3	396

1)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 공간 6실에 대하여 편성한 4억 2,900만원에 대해서는 수납률이 2.3%인 1,000만원이 수납되었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토지대여료가 3,500만원 수납되었음.

건물대여료의 부진한 수납실적에 대하여 외교부는 현재 민간임대 공간 6실 중 4실이 임대 중[2]인데, 3실이 유관 공공기관 및 장애인카페로 무상임대 형태이고, 나머지 2실에 대하여는 온비드를 통해 민간임대를 지속 추진 중이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가 주변 임대료보다 높은[3] 수준이어서 임차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함.

토지대여료는 2023년부터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수입금[4] 외에 2024년 2월 22일 지적측량 결과 세종연구소 건물이 외교부 소관 국유재산(토지) 일부를 점유하였음을 확인[5]함에 따라 과거 5년간 사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함. 세종연구소가 동 건물을 ㈜LIG넥스원에 매각함에 따라 이후 ㈜LIG넥스원으로부터 토지대여료를 징수[6]하고 있음.

---

2)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 공간 6실 중 4실은 현재 임대 중임.
- 무상 사용허가: 유관 공공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2실('24.10월), 장애인카페 1실('25.1월)
- 유상 사용허가: 민간업체 유상 사용허가 1실('24.11월)

3) 연간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시작하여, 2회 유찰 이후부터 10%씩 감액하여 80%까지 감액 가능함.

4) 2024년 수납액은 592,720원임.

5) 세종연구소 매각과 관련하여, 매입 예정자인 ㈜LIG넥스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됨.

6) 향후 토지대여료 수입액은 연간 약 600만원으로 예상됨.

< 2024회계연도 토지대여료 수납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구분	사용자	허가기간	수납액	비고
유상사용허가	세종연구소	2019-02-23~2024-04-24	29,52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30-16
유상사용허가	㈜LIG넥스원	2024-04-25~2027-04-24	4,455	
유상사용허가	㈜휴맥스이브이	2024-01-01~2024-12-31	593	전기차 충전시설
합 계			34,569	

(자료: 외교부)

그런데, 건물대여료의 2025년도 예산액이 3억 9,600만원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7]으로 편성되어, 실적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외교부는 건물대여료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과 동시에, 외교센터 내 민간임대 공간 중 무상전환된 3실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관유물대여료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 관유물 대여료 예산액(2023년부터 편성)
- 2023년 3억 9,000만원
- 2024년 4억 2,900만원
- 2025년 3억 9,600만원

□ 세출예산 증액을 고려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재외공관 반환수입금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2024년 예산현액 72억 300만원 대비 90억 4,400만원이 많은 162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160억 4,200만원을 수납(수납률 98.8%)하였으며, 2억 4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및 '25 예산>

(단위: 백만원)

2024								2025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7,203	7,203	-	7,203	16,247	16,042	204	-	7,203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국고보조금 등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억 3,000만원 대비 2억 6,600만원이 많은 3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3억 9,400만원을 수납(수납률 99.5%)하였으며, 2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4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내역 및 '25 예산>

(단위: 백만원)

2024								2025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30	130	-	130	396	394	2	-	130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당초 예산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7,203	7,203	-	7,203	4,945	4,736	65.8	95.8	208	-
'22	7,203	7,203	-	7,203	160,108	160,020	2,221.5	99.9	88	-
'23	7,203	7,203	-	7,203	78,398	78,282	1,086.8	99.9	116	-
'24	7,203	7,203	-	7,203	16,247	16,042	222.7	98.7	204	-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경우에도 최근 4년간 징수결정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납액 역시 당초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기타재산이자수입(일반회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130	130	-	130	63	63	48.5	100	-	-
'22	130	130	-	130	187	187	143.8	100	-	-
'23	130	130	-	130	215	212	163.1	98.6	3	-
'24	130	130	-	130	396	394	303.1	99.5	2	-

이와 같이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국제기구 분담금 반납액, 재외공관 반환수입금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목으로, 그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은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목으로 분류하여 수납하고 있음.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주요항목>

(단위: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고
국제분담금 반납액	10,498	- 아프간군 신탁기금 잔여기금 - 유엔 PKO 예산 분담금 잔여액 - 유엔 평화유지 신탁기금 잔여액 - UNECA 합동협력사업 잔여액
재외공관 반환수입금	4,047	- 재외공관 집행잔액, 불용품 매각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84	- KOICA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 여권대행 보조금 집행잔액 등
기타	713	- 한·아프리카재단 출연금 집행잔액 -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임차보증금 반환 등
합 계	16,042	

(자료: 외교부)

특히 국제분담금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분담금 역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바, 세출예산 규모가 증액됨에 따라 집행잔액 등이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전수입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최근 5년간 국제분담금 반납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제기구 분담금 총액	507,458	538,726	521,604	661,827	718,311
분담금 반납액(세입)	403	14	149,939	72,149	10,498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최근 5년간 수납실적 중 국제기구 분담금 등 특이소요로 발생한 반환금을 제외한 평균수납액은 약 56억원 정도로서, 최근 분담금 반납액의 대부분이 아프간군 신탁기금인데, 현재는 반납이 완료되어 세입예산 증액 편성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최근 5년간 분담금 제외 기타경상이전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수납액	9,957	4,736	160,020	78,282	16,042
분담금 제외 수납액	6,431	4,736	4,966	6,145	5,544

(자료: 외교부)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년도 예산주의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집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실제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세입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으로 보임.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국제기구 분담금 반납 등은 일회성 요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세출예산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향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반납금 등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입 추계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는 세입 실적의 연도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출예산 증액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세입예산안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ODA 총괄

가. ODA 개요

1) ODA 개념 및 추진체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한 국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지정한 개발도상국(수원국)의 경제개발·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증여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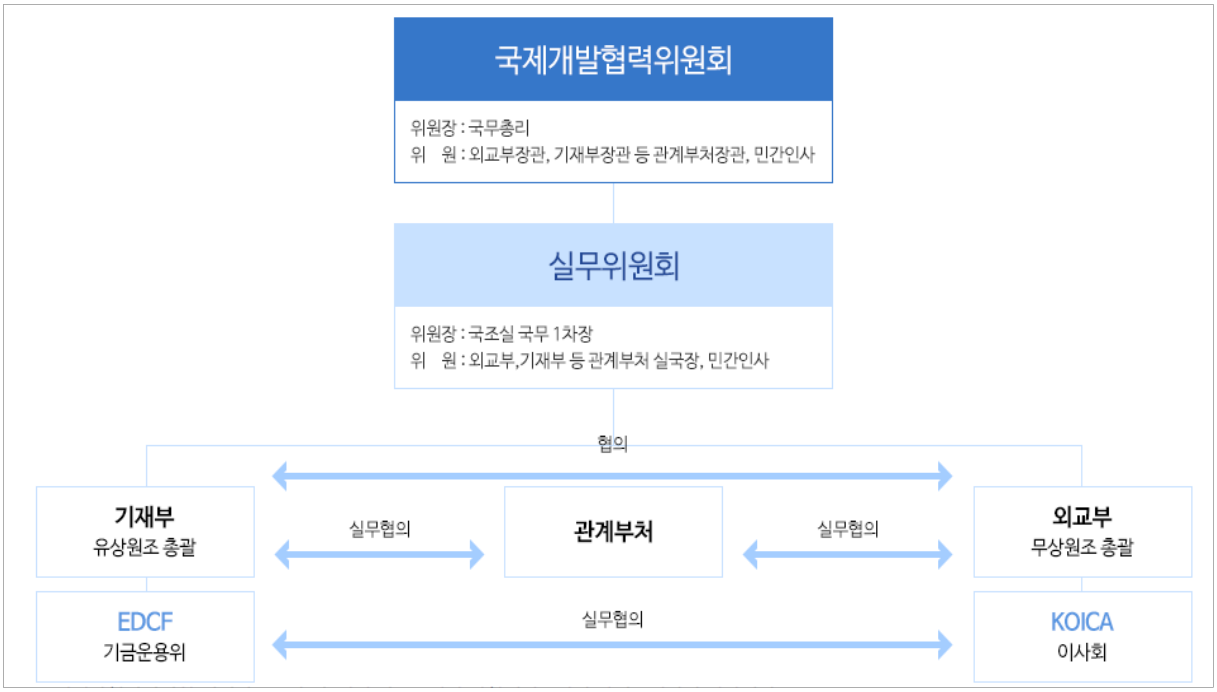
ODA의 유형은 전달경로(양자·다자) 및 수원국의 상환 의무(무상·유상)에 따라 구분됨. 양자원조는 공여국이 수원국에 지원을 직접 하는 방식이며, 다자원조는 공여국이 국제기구를 통하여 수원국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무상원조는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없으며, 유상원조는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함.

ODA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으로, 동 법률에 따라 ODA를 총괄하는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주관기관[8]으로 각각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있음.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라 함)은 동 법률에 따른 시행기관[9]이자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외교부 소관 ODA 사업을 실시함.

---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ODA 추진체계 >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2) 무상 ODA 절차

무상 ODA는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기관이 되어 실시하는데, 체계적인 무상 ODA 추진을 위하여 거치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N-2년) 수원국 요청서(PCP) 접수 및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ODA 예산 요구 전, 개별 시행기관은 사업 발굴 및 기획 절차를 거침. 수원국 정부 또는 우리 정부의 제안 등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수원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며, 이 단계에서 수원국으로부터 신규 사업요청서

9)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PCP; Project Concept Paper) 접수 및 사전타당성조사 등도 실시함.

② (N-1년 1분기) 차년도 무상 ODA 사업 시행계획안 외교부 제출

차년도에 무상 ODA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행기관은 전년도 1분기 중 무상원조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인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함.[10]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시행계획안에는 차년도에 필요한 예산, 사업 내용, 수원국 요청서(PCP), 성과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며,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추가로 작성함.

③ (N-1년 2분기)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외교부와 무상 ODA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행기관으로 구성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11]를 개최하여 차년도 무상 ODA 후보사업에 대하여 협의하고 심의·조정함.

2025년에는 5월에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협의회 개최 전 주관기관과 시행기관 간 1:1협의,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분과협의회 개최 등을 진행하며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음.

---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제3조 제2항의 사업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해 외교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으로 구성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N-1년 2분기)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 마련 및 전략회의 보고

무상 ODA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12]을 마련하고, 이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13]에 보고함.

⑤ (N-1년 2분기)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잠정 의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제출한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함.[14] 종합시행계획에는 정부

---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소속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전략회의의 기능) 전략회의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외정책과 연계한 주요 분야별·지역별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과 사업간의 부합성 검토, 유사·중복사업 방지, 사업간 연계 등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조정
3. 효율적 무상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무상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전략의 통합
4.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에 따른 사업의 발굴, 추진, 평가를 위한 이행 점검
5. 그 밖에 전략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DA 사업 전반의 추진 실적, 성과, 추진 방향 등이 담겨있으며, 차년도에 추진할 개별 ODA 사업의 예산이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음.

⑥ (N-1년 3·4분기)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ODA 예산이 확정됨. 예산 확정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차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의결하며, 이에 따라 개별 시행기관은 ODA 사업을 실시함.

나. 양자 무상 및 다자 ODA 현황 분석

첫째, 최근 10년간 무상 ODA 규모가 3.67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하여 42.6% 증가하였음.

최근 10년간 ODA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2조 3,782억원에서 2024년 6조 2,629억원으로 10년만에 약 2.6배 이상 규모가 확대되었음. 이 중 외교부가 총괄을 담당하는 무상 ODA는 세부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8,447억원에서 2024년에는 3조 962억원으로 3.67배 증가하였음.

특히 최근 2년동안 ODA 규모가 급증하였음. 총 ODA 규모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1.3%, 31.1% 증가하였으며, 무상 ODA 규모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2%, 42.6%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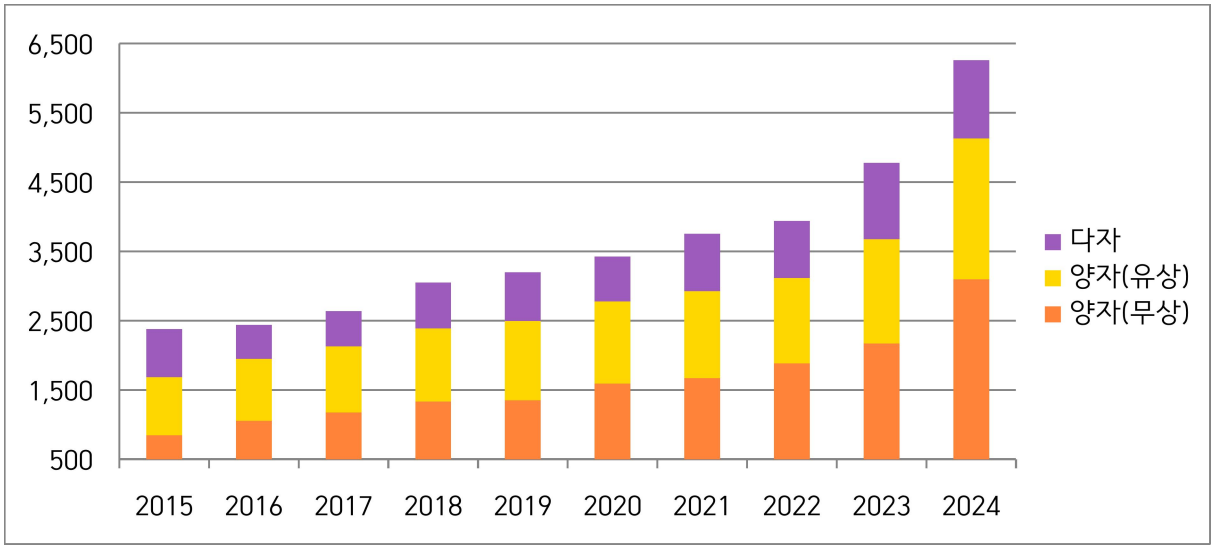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ODA 규모(표) >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양자	무상	844.7	1,054.2	1,175.5	1,329.6	1,352.6	1,590.1	1,667.9	1,885.2	2,170.9	3,096.2
	증가율	-	24.8	11.5	13.1	2.5	16.7	4.9	13.0	15.2	42.6
	유상	838.0	893.7	954.5	1,058.1	1,141.2	1,184.9	1,258.2	1,230.5	1,503.0	2,032
다자		695.5	491.5	505.9	660.5	706.5	651.9	828.2	822.6	1,103.2	1,134.7
계		2,378.2	2,439.4	2,635.9	3,048.2	3,200.3	3,426.9	3,754.3	3,938.3	4,777.1	6,262.9
	증가율		2.6	8.1	15.6	5.0	7.1	9.6	4.9	21.3	31.1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 최근 10년간 ODA 규모(그래프) >



둘째, ODA 중 외교부와 KOICA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양자 무상 ODA의 경우 전 부처 예산의 약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자 ODA의 경우에는 약 15~29% 수준임.

다자 ODA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과

EDCF를 통한 양허성차관[15] 등으로 외교부와 KOICA의 역할이 양자 무상 ODA에서보다 낮은 상황임.

< 양자 무상 ODA 중 외교부와 KOICA 예산 현황 >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A)	633.9	778.7	838.7	917.8	904.8	1,071.4	1,066.8	1,261.8	1,472.7	2,174.3
외교부	42.3	171.7	208.3	228.3	185.2	228	213.1	351.5	410.9	876.4
KOICA	591.6	607	630.4	689.5	719.6	843.4	853.7	910.3	1,061.8	1,297.9
전 부처(B)	844.7	1,054.2	1,175.5	1,329.6	1,352.6	1,590.1	1,667.9	1,885.2	2,170.9	3,096.2
A/B	75.0	73.9	71.3	69.0	66.9	67.4	64.0	66.9	67.8	70.2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 다자 ODA 중 외교부와 KOICA 예산 현황 >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A)	199	77.6	93.1	105.6	102.3	124.8	165.6	184.3	289.3	328.9
외교부	157.6	77.6	93.1	105.6	102.3	124.8	165.6	184.3	289.3	328.9
KOICA	41.4	-	-	-	-	-	-	-	-	-
전 부처(B)	695.5	491.5	505.9	660.5	706.5	651.9	828.2	822.6	1,103.2	1,134.7
A/B	28.6	15.8	18.4	16.0	14.5	19.1	20.0	22.4	26.2	29.0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최근 10년동안 외교부의 양자 무상 ODA는 2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KOICA의 양자 무상 ODA는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외교부와 KOICA의 주요 ODA 사업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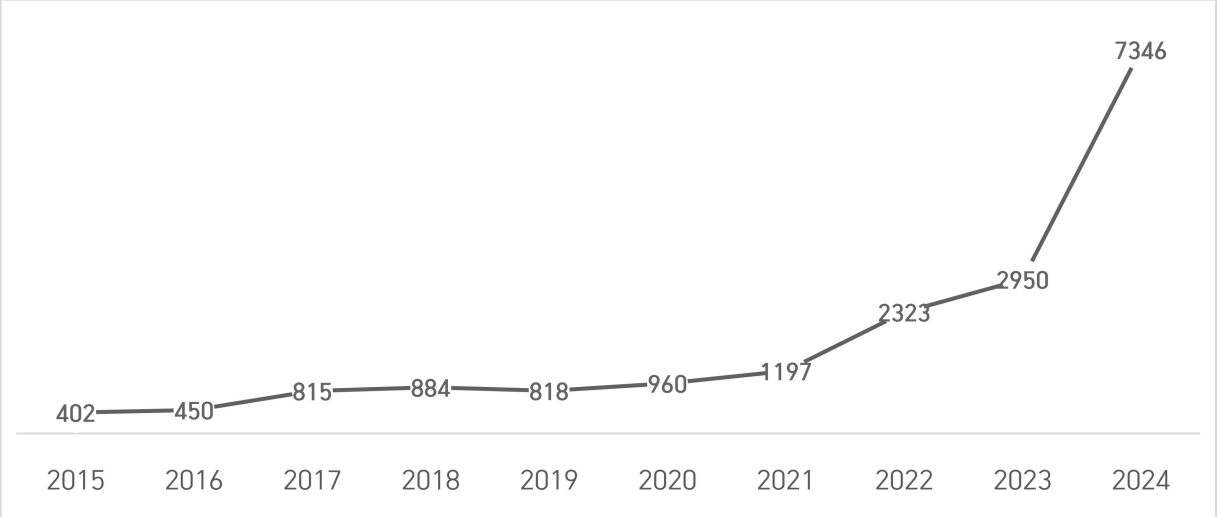
① 인도적지원(ODA) 사업의 해외긴급구호 예산이 2015년 402억원에서

15)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3요소를 고려,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한 차관을 말함. 개도국에 대한 직접차관중 증여율이 25% 이상을 상회하는 양허성 차관을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이라고 부름.

2020년 960억, 2024년 7,346억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해외긴급구호 예산 >

(단위: 억원)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KOICA에 대한 출연사업으로 운영되는 지역별 원조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 원조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사한 연 3,000억원 규모이며, 중남미지역과 중동·CIS 지역 원조는 각각 1,000억원 수준임.

< KOICA 지역별 원조 예산(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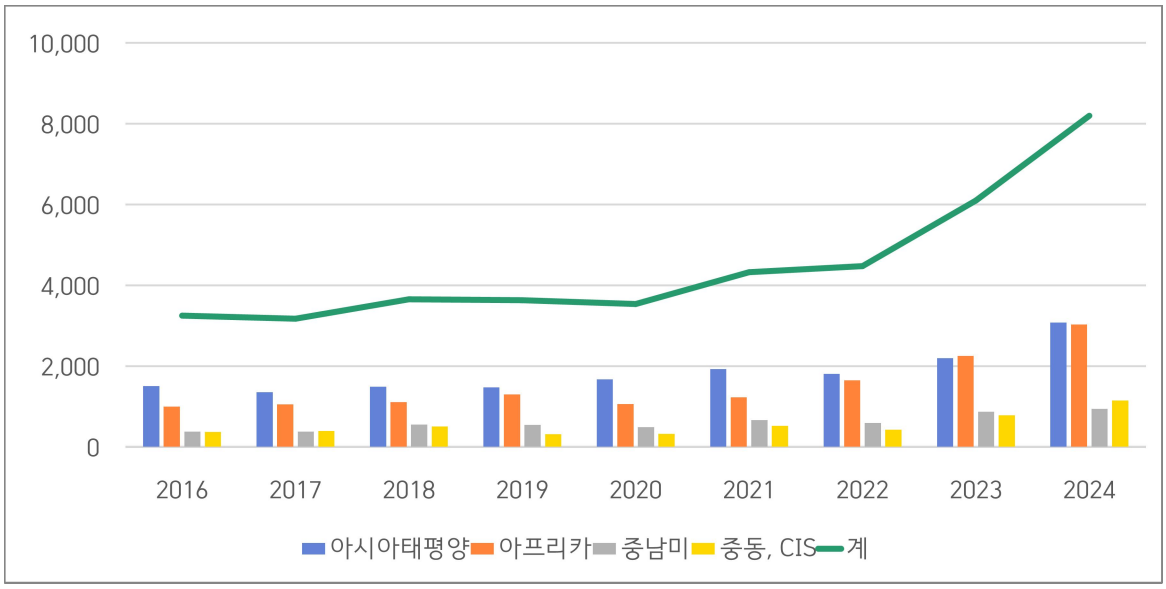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아시아 · 태평양	1,508	1,354	1,491	1,474	1,670	1,923	1,804	2,199	3,075
아프리카	993	1,051	1,108	1,300	1,062	1,224	1,649	2,249	3,029
중남미	380	380	553	542	486	661	595	872	944
중동 · CIS	369	389	503	316	320	518	428	781	1,151
계	3,250	3,174	3,655	3,632	3,538	4,326	4,476	6,101	8,199

※주: 결산 기준으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상의 예산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을 바탕으로 재작성

< KOICA 지역별 원조 예산(그래프) >

(단위: 억원)



③ 그 밖의 KOICA 출연사업인 해외봉사단과 글로벌연수 사업은 전체 ODA 규모 증가에 비하여 큰 폭의 증가는 없음. 다만, 양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ODA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협력' 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음.

< 해외봉사단·글로벌연수·국제기구협력 사업 예산 >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해외봉사단	1,195	1,326	1,329	1,535	1,066	721	1,081	1,009	1,238
글로벌연수	593	586	529	529	412	584	558	519	670
국제기구협력	311	391	331	383	561	551	551	517	802
계	2,009	2,303	2,189	2,447	2,039	1,856	2,190	2,045	2,710

※주: 결산 기준으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상의 예산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검토의견

□ 인도적지원 관련 결산 시정조치 이행 미흡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긴급구호를 비롯한 인도적지원 사업의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도적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2023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음.

시정요구 사항은 각각 ① 인도적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체계적이고 적시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며, ② 해외 긴급구호 사업 평가 보고의 시기를 조정하여 적절한 예산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임.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① 인도적지원의 효과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인도적지원 예산 집행율을 상시 점검하고 있는 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② 해외 긴급구호 사업 평가 보고 시기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치 중으로 보고하였음.

< 인도적지원 관련 시정요구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5)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 **[지적사항]** 인도적지원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을 위험과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제도개선	○ 우리 정부는 2024년 2월 무상개발전략회의 계기 의결된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우리 인도적지원의 효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 중임. - 구체적으로는 ▲국제기구와의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강화 필요	있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인도적지원 계획과 인력, 조직 역량이 미흡할 수 있음 - 인도적지원 프로젝트별 성과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효과성 평가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의 도입과 인도적지원 예산 사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제3자 감사 시스템 도입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인도적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급격하게 증가된 인도적지원 예산이 체계적이고 적시에 집행되도록 주기적인 집행률 점검 등의 노력을 할 것		정책협의를 통한 사업 집행관리 강화 ▲국제기구 이사국으로서 기구 운영·활동에 대한 관여 확대 활성화 ▲현지 모니터링 등을 진행 중임. ○ 우리 정부는 인도적지원 예산 집행률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23년 99% 이상의 집행률을 달성함. - 향후에도 우리 인도적지원 예산이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집행률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37) **해외긴급구호 (ODA) 사업 평가시기 조정**	○ **[지적사항]**「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고 있는바, 결산 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해당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 결과를 국회에 상반기에 보고하도록 시기를 조정해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시정요구사항을 감안, '24년도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조치예정일 : 2025년 상반기	**조치중**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정부

그런데 외교부가 인도적지원 예산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집행방안 마련에 관하여 ‘조치완료’라고 보고했던 것과 달리, 긴급재난 및 만성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정상 공약 이행에 사용되고,[16] KDRT 관련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용역을 수행하는 등[17]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외교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긴급구호를 비롯한 인도적지원 예산의 집행 계기와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6) 동 검토보고서 p. 88

17) 동 검토보고서 p. 92

□ KOICA 출연금의 미교부 지양 필요

KOICA의 2024년도 출연금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6.9%이나, 본예산 대비 집행율은 92.6%임. 이와 같은 편차는 예산당국이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함.

< 2024년 KOICA 출연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집행액 (B)	집행율	
	본예산 (A)	예산현액 (A')		본예산 대비 (B/A)	예산현액 대비 (B/A')
<출연사업>	1,246,796	1,191,865	1,154,650	92.6	96.9
1. 국별협력사업	789,200	748,676	724,346	91.8	96.8
①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75,641	257,816	249,271	90.4	96.7
② 아프리카지역원조	306,614	294,403	282,575	92.2	96.0
③ 중남미지역원조	73,671	74,682	72,893	98.9	97.6
④ 중동·CIS지역원조	133,274	121,775	119,607	89.7	98.2
2. 글로벌프로그램	313,652	306,494	298,342	95.1	97.3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128,756	123,805	119,778	93.0	96.7
글로벌연수	67,378	67,366	63,889	94.8	94.8
국제기구협력	81,915	80,207	80,193	97.9	100.0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35,603	35,116	34,481	96.8	98.2
3. 협력사업지원	73,644	70,187	66,983	91.0	95.4
협력사업지원	73,644	70,187	66,983	91.0	95.4
4. 전략적 협력강화	8,000	5,842	5,206	65.1	89.1
전략적 협력강화	8,000	5,842	5,206	65.1	89.1
5.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62,300	60,665	59,774	95.9	98.5
민관협력사업	57,000	55,365	54,487	95.6	98.4
인도적지원(출연금)	5,300	5,300	5,287	99.8	99.8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24년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출연금 미교부액 규모는 약 741억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의 미교부 규모가 257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174억원, 「중동·CIS 지역 국가원조」 138억원, 해외봉사단 등 「글로벌 프로그램」 76억원 순임.

< 2024년 출연금 미교부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미교부액
합 계		**-74,100**
(단위사업)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227,516[1)]	**-25,666**
베트남(ODA)	49,646	-3,314
인도네시아(ODA)	20,971	-5,955
캄보디아(ODA)	22,864	-525
필리핀(ODA)	31,043	-9,430
방글라데시(ODA)	13,790	-1,108
몽골(ODA)	17,122	-416
파키스탄(ODA)	9,239	-370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2,841	-4,548
(단위사업)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274,957	**-17,376**
에티오피아(ODA)	30,643	-1,839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87,826	-10,375
우간다(ODA)	14,501	-881
탄자니아(ODA)	18,927	-1,946
세네갈(ODA)	12,853	-486
이집트(ODA)	10,207	-1,849
(단위사업)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58,341	**-887**
페루(ODA)	9,964	-102
파라과이(ODA)	15,701	-663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32,676	-122
(단위사업)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132,574	**-13,825**
우즈베키스탄(ODA)	23,767	-2,306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8,688	-8,661
키르기스스탄(ODA)	12,950	-571
타지키스탄(ODA)	7,169	-2,287
(단위사업) 글로벌 프로그램	313,652	**-7,562**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128,756	-4,951
글로벌연수(ODA)	67,378	-416
국제기구협력(ODA)	81,915	-1,708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35,603	-487
(단위사업) [사업비] 협력사업 지원	73,644	**-4,222**
협력사업 지원(ODA)	73,644	-4,222

구분	예산액	미교부액
(단위사업) 전략적 협력강화	8,000	**-2,339**
전략적 협력강화(ODA)	8,000	-2,339
(단위사업)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출연금)	57,000	**-1,635**
민관협력사업(ODA)	57,000	-1,635
(단위사업) [예비비] 협력사업 지원	1,330	**-588**
협력사업 지원(ODA)	1,330	-588

※주: 1)단위사업의 예산액은 하위 세부사업 중 미교부가 있는 세부사업의 예산액 합계임.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24년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출연금 미교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과 2024년의 출연금 미교부가 크게 발생하였음.

< 2016~2024년 출연금 미교부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미교부 발생 단위사업	미교부액
2016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	△5,703
2017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	△18,000
2018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전략적 협력강화	△4,266 △10,000
2019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전략적 협력강화	△2,198 △4
2020	전략적 협력강화	△4,720
2021	전략적 협력강화	△2,817
2022	전략적 협력강화 아시아 비중점 국가그룹	△2,415 △2,000
2023	전략적 협력강화 국별 협력사업 등	△4,075 △45,884
2024	전략적 협력강화 국별협력 사업 등	△2,339 △71,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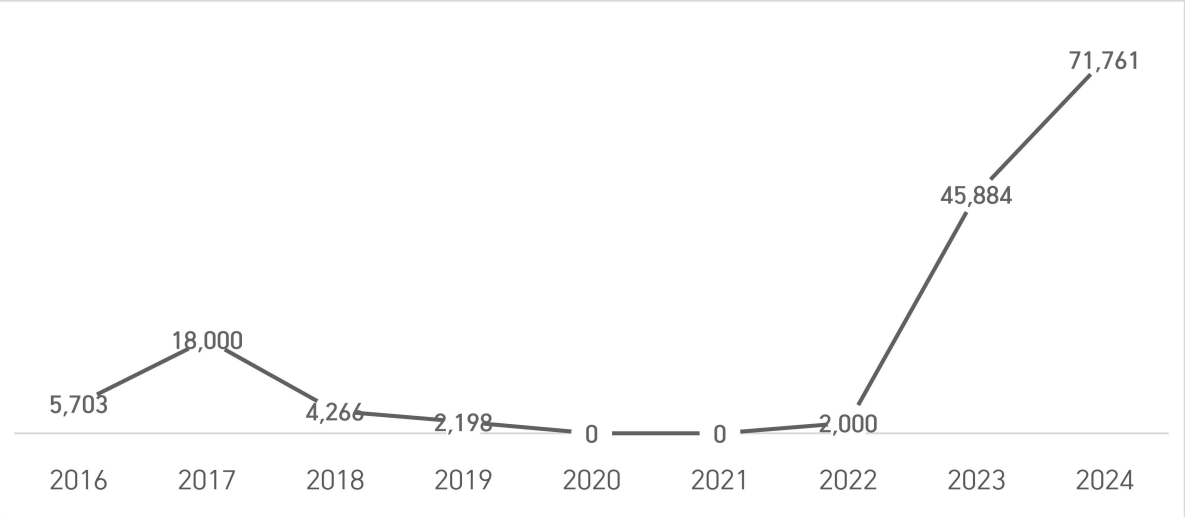
(자료: 외교부)

이 중 「전략적 협력강화」 사업은 정상 공약 후속조치를 위한 수시배정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연도 사업 수요에 따라 미교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외의 단위사업에서의 출연금 미교부는 당초 예산 편성이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18)]

< 2016~2024년 출연금 미교부 현황(전략적 협력강화 제외) >

(단위: 백만원)



※주: 수시배정 사업 성격인 전략적 협력강화 사업을 제외한 규모임

(자료: 외교부)

18) 참고로, 2025년도 KOICA 출연금도 2025년도 제2차 추경을 통해 총 33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5년도 제2차 추경 감액 사업 현황(KOICA) >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5년 본예산	2차 추경		
			추경안(A)	국회감액(B)	계 (A+B)
합 계		475,783	△28,000	△5,370	△33,370
1	베트남(ODA)	57,293	△5,000	-	△5,000
2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3,648	△5,000	△1,370	△6,370
3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78,966	△5,000	-	△5,000
4	탄자니아(ODA)	17,931	△8,000	-	△8,000
5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9,972	-	△4,000	△4,000
6	글로벌 연수(ODA)	67,973	△5,000	-	△5,000

(자료: 외교부)

4. 한반도 평화 조성

가. 개 요

「한반도 평화조성」 프로그램은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지속 추진, 동북아지역국가 및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5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예산액은 157억 1,200만원이고, 134억 7,000만원이 집행됨.

< 한반도 평화 조성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1100] 한반도평화조성				22,523	15,712	15,712	13,470	22,101
	[1131] 북핵문제 협의지원			798	1,069	1,069	828	988
		[11] 일반	[401] 북한 핵문제 대처	490	530	530	361	988*
		[11] 일반	[402]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	308	539	539	467	
	[1132] 평화체제구축지원			2,667	3,097	3,097	2,636	3,090
		[11] 일반	[401]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513	647	647	517	647
		[11] 일반	[402]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1,134	878	878	878	834
		[11] 일반	[403]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1,020	1,572	1,572	1,241	1,609
	[1133]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75	5,298	5,298	5,188	5,133
		[11] 일반	[401]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75	5,298	5,298	5,188	5,133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34] 동북아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1,900	3,560	3,560	2,813	9,470
		[11] 일반	[401]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900	3,560	3,560	2,813	2,616
		[11] 일반	[402]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	-	-	-	6,854
	[1135]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11,983	2,688	2,688	2,004	3,420
		[11] 일반	[401]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636	2,688	2,688	1,975	3,420
		[11] 일반	[404]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8,767	0	0	30	-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1131-401)로 통합

나.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은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를 위해 한·중 간 학술·인문,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며,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중국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등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려는 것임.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560	3,560	9	-	-	3,569	2,813	-	756	79.0
-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897	897	-	△2	-	895	672	-	223	74.9
-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	554	554	-	55	-	609	521	-	88	94.0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396	396	-	△47	-	350	251	-	99	63.4
-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877	877	9	△6	-	880	697	-	183	79.5
-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121	121	-	-	-	121	37	-	84	30.6
- 동북아시아지역 협력 증진	715	715	-	-	-	715	635	-	80	88.8

동 사업의 이·전용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현액은 35억 6,900만원으로, 이 중 28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7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은 한·몽 고위급 간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정무 분야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도의 경우 집행률은 30.6%에 불과함.

< 최근 5년간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 집행률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0년	104	25	24.0
2021년	94	29	30.9
2022년	134	130	97.0
2023년	134	55	41.0
2024년	121	37	30.6

외교부는 동 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해, 한몽 총리급 교류(1.17., 4.1.)와 외교장관 회담(9.27.)이 다자 또는 방한 계기로 이루어지면서 몽골측과의 협의 및 준비 과정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 예산 일부가 조정되며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 몽골측의 일정을 고려하여 12월 초 추진을 위해 대표단 선발 및 행정 사항 등 준비를 추진하였으나 우리 국내 사정으로 순연되었다고 설명함.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몽골 내 지도자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친한화(親韓化)하여 장기적인 외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연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사업이 개시된 2022년을 제외하고는, 2023년에 예산액 4,000만원 중 1,000만원(25.0%)만 집행되었고, 2024년에는 예산액 3,6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임.

<몽골 차세대리더 네트워크 구축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2년	40	30	75.0
2023년	40	10	25.0
2024년	36	-	0.0

(자료: 외교부)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우리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이며,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상주 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로, 향후 외교 다변화 및 북방외교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이 요구되는 대상임. 특히 2025년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는 해로, 양국 관계의 상징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임.

이러한 상황에서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양측이 12월초 대표단 방한 일정까지 사전 조율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사정으로 추진이 무산되어, 일방적인 연기로 인한 사업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동 사업은 양국 관계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인적 자산을 확보하고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일정 차질과 저조한 집행률은 사업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음.

이에 외교부는 수교 35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을 계기로,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을 포함한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의 목표 및 기대성과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 내역사업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한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호혜적인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서남아태평양국가와의 포괄적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며,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 주요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우리 국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688	2,688	21	△62	-	2,647	1,975	73	600	73.5
-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812	812	17	△34	-	795	537	-	258	66.1
-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680	680	-	△1	-	679	483	-	196	71.0
- 서남아태평양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331	331	-	55	-	386	319	-	67	96.4
- 아프간 관련 국제협력	37	37	-	20	-	57	55	-	2	148.6
-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82	82	-	△37	-	45	14	-	31	17.1
- 한-인도 카라반 사업	82	82	-	△38	-	44	26	-	18	31.7
-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 증진	113	113	-	△4	-	109	103	-	6	91.2
- 대태평양도서국 협력 강화	374	374	-	5	-	379	301	73	5	80.5

202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이·전용액을 포함하여 4,1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26억 4,700만원이고, 이 중 19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억원을 불용하였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집행부진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73.5%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내역사업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와 「한-인도 카라반 사업」은 각각 17.1% 및 31.7%에 불과하여 특히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편성 근거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사업	서남아유력인사초청사업	70	14	20.0
	한-인-일 3자 협의체 참석	12	-	0.0
	합계	82	14	17.1
한-인도 카라반 사업	우호증진 세미나	34.5	10	29.0
	투자교역포럼 설명회	39	10	25.6
	문화교류 및 교육분야 설명회	8.5	6	70.6
	합계	82	26	31.7

(자료: 외교부)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사업은 동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밀집한 서남아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교 다변화를 실현하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주요 국가와의 양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임.

2024년도 예산 8,200만원 중 집행액은 1,400만원(집행률 17.1%)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한-인-일 3자 협의체 참석'의 경우 전액 미집행으로 나타남. 외교부는 초청 대상 인사와의 일정 조율 곤란 등을 집행 부진 사유로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의 적재적소 집행과 불용 방지 측면에서 동 사업을 서남아 유력인사 초청사업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한-인도 카라반 사업」은 인도의 주요 지방 도시를 직접 방문하여 정·재계 인사 면담, 문화행사, 투자교역 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지역협력과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현장 중심 외교활동인데,

외교부는 2024년 한-인도 외교·국방 차관회의(12월 예정)를 고려하여 사업비 일부를 유보하였으나, 해당 회의가 연말 국내 사정으로 취소되며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동 내역사업의 경우, 총 예산 8,200만원 중 국외여비 3,800만원을 사전에 감액하여 타 사업에 지출하고도 1,8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가 필요했음을 시사함.

이에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일정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간 유사성 및 중복성 고려한 통합·조정 필요

세부사업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는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사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사업들이 다수 분절되어 편성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남.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 2024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내역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사업개요	편성액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과 함께 분야별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	812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일본 현지 공관 주도로 일본 사회 전반과의 접점을 확대해 우호적 여론 기반과 대일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680
서남아태평양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서남아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역내 안보 및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사업	331
아프간 관련 국제협력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관련한 지역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 국익과 경제안보 기반을 확대하려는 사업	37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서남아 주요국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교 다변화 및 양자관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	82
한-인도 카라반 사업	인도 현지 우리 공관 주도로 인도 현지에서 양국 간 지역 차원의 관계 기반을 강화해 대인도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82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 증진	한중일 3국 협력 및 아태 다자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태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	113
대태평양도서국 협력 강화	태평양도서국과의 고위급 외교 채널을 운영해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응하는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	374
동아시아 협력포럼(신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소다자 외교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	-

먼저, 「아프간 관련 국제협력」 사업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외교 협력을 내용으로 하나, 예산 규모가 3,700만 원에 불과하여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리 편성하기에는 사업의 범위와 중요도 측면에서 제한적임. 해당 사업은 보다 포괄적인 지역 협력 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또한, 「한-인도 카라반 사업」은 양국 간 지역 차원의 관계 기반을 강화

해 대인도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목적이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사업과 상당 부분 중첩됨. 양 사업은 모두 서남아 주요국과의 관계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할 경우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실제 두 사업의 예산 합계도 1억 6,400만 원 수준으로,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통합·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내역사업 단위는 예산 운용의 실효성과 사업 성과 관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세부사업 내 구성은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들의 사업 간 유사성과 중복성을 감안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체계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가. 개 요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아세안(ASEAN[19]) 및 유럽 내 각국과의 협력 확대, 대화채널의 확충 및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하여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53억 3,400만원이고, 43억 9,700만원이 집행됨.

<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1300]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963	5,334	5,334	4,397	4,680
	[1331]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733	3,008	3,008	2,505	2,908
		[401]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733	3,008	3,008	2,505	2,908
	[1332]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330	2,326	2,326	1,892	1,772
		[401]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434	1,795	1,795	1,507	1,411
		[402] 유라시아 협력 추진	547	239	239	171	97
		[403] 대러전략외교강화	250	292	292	214	264

19)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동남아 국가연합) :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나.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각급 양자대화 실시 및 지원을 통한 한-동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관련 각급 회의 개최 및 참석을 통한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역내 다자 및 안보협력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및 남방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한-아세안외교를 강화하려는 사업임.

<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3,008	3,008	25	-	-	3,033	2,505	-	528	83.2

2024년도 예산액 30억 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500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 30억 3,300만원 중 5억 2,800만원이 불용되고 25억 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3.2%임.

□ 내역사업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 필요

동 사업은 ① 「한-동남아국가 교류협력 강화」, ② 「베트남과의 협력기반 강화」, ③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④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⑤ 「한-아세안 상생연대 기반 강화」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내역사업의 편성에 있어 주요 국가에 대한 개별 내역사업 편성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재 해당 세부사업에는 베트남만 별개의 내역사업[20]으로 편성되어 있음. 베트남의 경우 2019년부터 별도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020년부터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음.

'베트남과의 협력기반 강화'는 베트남 당, 중앙·지방정부, 국회 등 각계와의 수시 양자협의, 현지방문, 정책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심화·확대를 통한 토대 공고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2024년 기준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며, 우리나라가 베트남 내 제1위 해외투자국이고, 개발 협력에 있어서도 베트남이 우리의 중점협력 대상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을 개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그러나, 해양동남아 국가 중 아세안 수장국이자 역내 최대 경제·인구 대

20) 2. 베트남과의 협력기반 강화

국(아세안 총 GDP의 37%, 아세안 인구의 41%(세계 4위 인구))인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실질협력 확대 예산의 별도 필요성도 고려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개별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 및 별도 사업 편성의 외교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업 편성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예산 배정 시 면밀한 검토 및 비목에 맞는 예산 집행 준수 필요

특근매식비란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에 대한 매식비[21]로, 사무용품 구입이나 소모성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는 구분됨.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을 집행하는 아세안국의 경우 「아세안국 기본경비(총액)(7011-221)」에 2024년 특근매식비가 2,3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동 단위사업 예산에는 특근매식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아세안국은 기집행한 기본경비 내 특근매식비를 익월에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의 사업비 내 편성된 일반수용비로 과목정정 결의를 하고, 이를 재정정하여 다시 기본경비 내 특근매식비로 집행하였음. 이러한 집행은 8월, 9월, 10월 특근매식비 중 229만원 상당임.

21)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23.5.

<아세안 국 내 과목정정 대상 건수 및 액수 현황>

(단위: 건, 원)

건명	건수	액수
특근매식비(8월)	24	341,450
특근매식비(9월)	60	1,300,400
특근매식비(10월)	48	652,900
계	132	2,294,750

(자료: 외교부)

또한, 아세안국은 '직원 격려' 및 '직원 송별회식' 등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기본경비 내의 업무추진비가 아닌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의 사업비 내 편성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음.

부적합한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원인으로는, ① 예산 편성 당시 적정 비목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인해 비목을 잘못 편성한 경우, ② 기존 비목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부족한 재원을 다른 비목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보충하여 집행하는 경우 등이 있음.

당시 아세안국의 지급 업무 증대, 월별 자금 부족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집행 건에 대하여 기본경비 내 특근매식비 및 관서업무추진비를 각각 사업비 내의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사후에 이를 다시 기본경비로 과목정정 조치한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 월별·사업별 구분을 철저히 하라는 「국고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국고금 관리법」 제30조[22]는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7조[23]는 월별 자금계획서에는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세항(단위사업)의 구분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월별 자금계획 작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하고, 배정된 예산의 집행이 비목에 맞게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2)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서: 세입예산에 정하는 관·항·목의 구분
2. 지출계획서: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관·항·세항의 구분

다.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유럽·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적극적인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여 실질협력관계 증진 및 포괄적 협력을 통한 우리 외교 외연을 확장하고, 범유럽지역 회의체 및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이슈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다층적 외교를 심화하려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17억 9,500만원이고, 2억 8,800만원이 불용되고 15억 7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4.0%임.

<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795	1,975	-	-	-	1,795	1,507	-	288	84.0

□ 특정 내내역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개선 필요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7개의 내역사업과 16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서유럽에서 동유럽,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 대한 세부사업임.

세부사업 내 내내역사업이 다양한 만큼, 세부사업 전체의 집행률이 84%임에 반해 일부 내내역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집행이 부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24년 동 세부사업 내 집행 부진 내내역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편성액(A)	집행액(B)	집행률(B/A)
한-러 상호이해 및 협력 증진	301	253	84.0
한-러 정부간 정례협의회 및 외교활동	32	14	43.8
EU 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40	249	73.2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87	8	9.2
민주주의 · 시장경제 기반 발전 경험 공유 협의	27	16	59.3
남동유럽, 흑해경제관권과의 실질협력 강화	46	25	54.3
남동유럽 · 흑해연안국 인사교류	7	0	0
한-EU 인태전략 강화방안 모색	510	361	70.8
국내외 유럽지역 전문가 아웃리치	210	98	46.7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상기 5개 내내역사업 중 '한-러 정부간 정례협의회 및 외교활동',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민주주의 · 시장경제 기반 발전 경험 공유 협의', '남동유럽 · 흑해연안국 인사교류'에 대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

세 등의 이유로 인해 집행이 저조했다는 입장이며, '국내외 유럽지역 전문가 아웃리치'의 경우 국내상황으로 인해 2024년 예정된 고위급 방문 및 방한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설명임.

그러나 해당 사업[24]들의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집행률이 낮았음을 알 수 있으며 관련 제반 사항이 2025년 현재 여전히 잔존하므로 집행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최근 5개년 집행부진 내내역사업의 집행률[25]>

(단위: %)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한-러 정부간 정례협의회 및 외교활동	43.8	43.4	0	43.4	40.6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1.2	33.3	203.6	15.5	9.2
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 발전 경험 공유 협의[26]	0	0	55.2	31.0	59.3
남동유럽·흑해연안국 인사교류	100	0	0	0	0

(자료: 외교부)

이에 향후 외교부는 유럽지역 역내 정세 변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고, 연도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4) '국내외 유럽지역 전문가 아웃리치'는 2024년 신규 편성 사업임.

25) 매년 외교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내 본예산 대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26) 해당 사업의 2023년 이전 사업명은 '체제전환 경험 공유 협의체'임.

6.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가. 개 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중남미·아중동지역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협력 강화 및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아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통한 협력 내실화 및 포럼,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리 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은 461억 4,700만원이고, 449억 4,500만원이 집행됨.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1400]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4,158	46,147	46,147	44,945	11,501
	[1431]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694	3,695	3,695	3,471	3,337
		[11] 일반	[401]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694	3,695	3,695	3,471	3,337
	[1432]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0,464	42,452	42,452	41,474	8,164
		[11] 일반	[401]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669	3,288	3,288	3,139	3,515
		[11] 일반	[402]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4,771	4,425	4,425	4,425	4,649
		[11] 일반	[403] 2024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개최	3,023	34,739	34,739	33,910	-

나.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사업은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 등 인적 교류 활성화 및 제반 분야 실질협력 확대를 통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등을 위한 사업임.

<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288	3,288	-	-	-	3,288	3,139	-	149	95.5
- 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124	2,124	-	△305	-	1,819	1,686	-	133	79.4
- 아프리카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873	873	-	431	-	1,304	1,297	-	7	148.6
- 아중동 외교정책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291	291	-	△126	-	165	156	-	9	53.6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32억 8,800만원이고, 이 중 3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외교행사 연계 사업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예산 반영 미흡

외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자료를 제작하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책자 디자인 및 발간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음. 동 사업에는 총 1억 9,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외에도 개황 원고 작성 및 검수 사례비로 5,000만 원이 추가 지출되는 등 총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었음.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개황책자 발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책자 디자인 및 발간 용역 대금	192	42개국
개황 발간을 위한 원고작성 및 검수 관련 사례비	50	20개국
기타 개황 발간	9	앙골라, 에티오피아
합계	251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아프리카 개황책자 발간을 위하여 동 세부사업 내 타 내역사업에서 일반수용비 1억 8,700만원을, 동 세부사업 내 세목조정을 통해 7,900만 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아프리카 개황책자 발간 경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변경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12.19.)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432-401)	210-14	79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432-401)	210-01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계기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발간

외교부는 통상 각 실국별로 1년에 5-7개국 정도 개황을 발간하는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 준비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개황책자

발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총 44개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개황책자를 발간하였음.

당초 아프리카 개황책자 발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외교부는, 국가별 개황자료의 발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고, 주요 외교계기 및 수교 정주기 등 발간수요가 발생하면 실국별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발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또한 아프리카 대부분의 공관이 2-3개국 이상을 겸임하고 있어, 초판 개황자료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며, 이에 따라 학계 전문가에게 원고 작성 및 검수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함.

그러나,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는 이미 예고된 외교 일정이었고,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개황자료 수요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

특히 역대 개황이 발간되지 않았거나 최근 수년간 업데이트되지 않은 국가들이 다수였음을 고려할 때, 초판 개황의 원고 작성 및 검수에 따른 외부 전문가 활용 필요성과 그에 따른 예산 수요 또한 사전에 인지 가능한 사항이었음.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타 사업의 예산을 충당하여 추진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 소지가 있고, 타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외교부는 향후 사업 추진 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편성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은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전략적 중요성이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은 당초 347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을 통해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353억 6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이 중 339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34,739	34,739	947	△380	-	35,306	33,910	-	1,396	97.6
- 준비기획단 운영	2,938	2,938	-	△708	-	2,230	2,180	-	50	74.2
-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1,479	1,479	30	△85	-	1,424	1,413	-	11	95.5
-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	30,322	30,322	917	413	-	31,652	30,317	-	1,335	100.0

□ 행사 필수경비 미편성에 따른 예산운용계획 부실

외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에서 관리용역비(210-15), 시설장비유지비(210-09) 및 일반용역비(210-14)를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24.)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일반수용비 (210-01)	3.5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관리용역비 (210-15)	관리용역비 미편성
세목조정 (2024.2.22.)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일반수용비 (210-01)	61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시설장비유지비 미편성
세목조정 (2024.4.4.)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일반수용비 (210-01)	15.3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일반용역비 (210-14)	공관송금을 위한 일반용역비 미편성
세목조정 (2024.5.28.)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일반수용비 (210-01)	26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배정잔액 부족

시설장비유지비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 확장을 위한 칸막이·전원시설·정보통신 공사에 집행한 것이고, 관리용역비는 준비기획단 사무실의 CCTV 유지비용임.

그리고, 공관에 송금한 일반용역비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다수 국가의 참석 확보를 위해 공관의 직접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한-아프리카 청년 토크쇼' 등 공관 자체 유

튜브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음.

외교부는 해당 비목 미편성 사유로 2023년 예비비 및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기획단 설치 장소 및 규모가 미확정 상태였고, 이후 외교부 본부 외 별도 공간을 임차하게 되면서 관련 경비 소요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상회의와 같은 고위급 국제행사는 장소나 규모의 유동성이 있더라도 인력·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며, 외교부내 청사 공간 부족이 지속돼 온 점을 감안해 준비기획단의 외부 임차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리용역비 등 필수 부대경비는 편성되지 않아 예산편성의 사전 준비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필수 경비의 누락은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세목 조정과 전용을 초래하여 집행 시 행정 비용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대규모 국제행사 추진 시, 행사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 비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실효성과 준비 과정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7. 국제기구분담금

가. 개 요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은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및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분담금을 납부하여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격에 걸맞은 사업분담금 지원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예산액은 7,183억 1,100만원이고, 7,071억 7,300만원이 집행됨.

< 국제기구분담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100] 국제기구분담금				660,366	718,311	718,311	707,173	826,224
	[2131] 국제기구분담금			660,366	718,311	718,311	707,173	826,224
		[11] 일반	[401]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	97,134	107,284	107,284	105,435	123,580
		[11] 일반	[402] 유엔 PKO 예산분담금 납부	203,096	212,377	212,377	203,709	216,784
		[11] 일반	[403]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84,876	97,036	97,036	96,783	102,607
		[11] 일반	[404]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275,259	301,614	301,614	301,245	383,253

나. 기타 의무분담금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사업은 IAEA 헌장, UNESCO 헌장, 대한민국에 대한 OECD에 관한 가입 초청 협정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전문기구 및 정부간 기구 가입 협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회원국으로서 의무이행 차원에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분담금의 적기 납부를 통하여 국제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97,036	97,036	-	-	-	97,036	96,783	-	253	99.7	99.7

2024년에 납부한 의무분담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기타 의무분담금 내역사업별 납부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분담금 명	2023년		2024년			2025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3,590	99.9	3,642	3,562	97.8	3,957
2	국제사실조사위원회(IHFFC)	6	55	10	10	100.0	10
3	국제원자력기구(IAEA)	14,415	104	15,246	14,815	97.2	16,198
4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기금(TCF)	2,629	81.6	3,501	4,038	115.3	3,612
5	국제이주기구(IOM)	2,540	110	2,904	3,120	107.4	3,702
6	국제해사기구(IMO)	658	104	683	770	112.7	767
7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536	105	566	562	99.3	588
8	국제해저기구(ISA)	342	100	410	464	113.2	468

연번	분담금 명	2023년		2024년			2025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9	국제형사재판소(ICC)	11,242	111.6	13,442	13,361	99.4	13,470
10	국제형사재판소(ICC) 신청사 건축	323	103.5	337	328	97.3	343
11	남극조약사무국(ATS)	51	104.1	52	52	100.0	55
1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143	97.2	156	151	96.8	164
13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269	100	281	275	97.9	421
14	대인지뢰금지협약(APLC)	14.8	82.2	19	15	78.9	28
15	몬트리올의정서 신탁기금	105	68.1	178	125	70.2	203
16	무기거래조약(ATT)	46	131	43	36	86	48
17	바세나르체제(WA)	88	101	107	109	101.9	120
18	베니스위원회	81	119.1	87	96	111.3	112
19	불어권국제기구(OIF)	32	100	17	17	100.0	52
20	비엔나협약신탁기금	23	88.5	30	23	76.7	28
21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77	101.3	79	84	105.1	88
22	상설중재재판소(PCA)	29	100	39	47	120.5	43
23	생물무기금지협약(BWC)	71	122	72	67	93.1	79
24	세계무역기구(WTO)	7,185	99.9	8,148	8,682	106.6	8,547
25	세계박람회기구(BIE)	47	102.6	48	48	100.0	50
26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26	108.3	27	27	100.0	28
2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426	110.6	437	432	98.9	456
28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3,573	100	4,894	4,844	99.0	5,197
29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0,942	101.6	11,759	11,624	98.9	12,263
30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266	101	274	280	102.2	288
31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1,743	100	1,861	1,861	100.0	2,172
32	중앙아시아학술연구소(IICAS)	108	100	116	122	105.2	123
33	콜롬보플랜	21	103	21	21	100.0	23
34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0[27]	0	48	32	66.7	48
35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3,865	100	5,488	5,369	97.8	5,260
36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2,072	100	2,553	2,421	94.8	3,041
37	핵비확산조약(NPT)	53	176.7	60	50	83.3	53
38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125	88	182	221	121.4	192
39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2,401	100	2,719	2,838	104.4	3,165
40	OECD 개발센터	633	99.2	739	697	94.3	751
41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186	97.3	211	205	97.2	220
42	OECD 철강위원회	39	100	46	43	93.5	45
43	OECD Part I	13,866	98.8	15,504	14,947	96.4	16,129

(자료: 외교부)

27) 2022년도 CCW 분담금 납부잔액으로 2023년분 납부(2023년 CCW 배정 예산은 여타 의무분담금 예산 부족분에 활용)

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은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UNICEF, UNDP, UNHCR 등)[28]의 사업운영 및 지역 국제기구(ASEAN, AU, OAS 등)[29]와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분담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301,614	301,614	-	-	-	301,614	301,245	-	369	99.9	99.9

2024년에 납부한 사업분담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내역사업별 납부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분담금 명	2023년		2024년			2025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1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 신탁기금	4,838	100	4,879	4,879	100	5,176
2	국제민간항공기구 공개키 디렉토리	30	71.4	42	29	69.0	43

28) UNICEF: UN Children's Fund, 유엔 아동기금
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유엔 개발계획
UN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난민 기구

29)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U: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연번	분담금 명	2023년		2024년			2025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3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법 펠로우십 신탁기금	40	100	40	40	100	39
4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109	99.1	111	122	109.9	118
5	국제해양법재판소 자발적기여금	239	99.6	426	426	100	421
6	국제형사재판소(ICC) 피해자 신탁기금	61	100	65	65	100	63
7	군축분야 인도적지원 신탁기금	929	100	883	883	100	883
8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지원	15,583	100	17,550	17,550	100	17,980
9	글로벌 보건기여	100,000	100	-	-	-	48,151
10	글로벌파트너십	747	100	911	911	100	996
11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4G) 자발적 기여금	1,636	100.1	1,554	1,554	100	2,664
12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자발적 신탁기금	13	100	26	26	100	27
13	대아프간 지원 강화	16,178	98.9	-	-	-	-
14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154	100	146	146	100	142
15	메콩강 위원회(MRC) 분담금	-	-	1.300	1.300	100	1,380
16	민주주의증진협력기여금	387	100	397	401	101.0	357
17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국제기금	2698	100	2,838	2,838	100	2,824
18	비세그라드 펀드	-	-	650	650	100	645
19	세계식량계획(WFP) 정규재원기여금	5,888	100	26,000	26,000	100	24,885
20	시나이정전감시단(MFO) 기여금	310	100	325	325	100	315
21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65	100	65	65	100	63
22	아시아・유럽재단(ASEF)	258	99.6	261	261	100	261
23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활동 분담금	1,290	100	6,500	6,762	104.0	4,918
24	엘시 기금	645	100	650	650	100	666
25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	1,015	100	2,600	2,596	99.8	2,587
26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기여	-	-	1,300	1,441	110.8	1,199
27	유엔개발계획(UNDP) 정규재원기여금	13,820	100	23,400	23,400	100	22,626
28	유엔개발시스템 선진화기금	2,028	100	1,927	1,927	100	1,864
29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공업개발기금(IDF)	457	100	434	434	100	652
30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서울투자기술진흥사무소(ITPO)	386	100	468	468	100	995
31	유엔 군축 사업분담금	1,548	100	1,601	1,563	97.6	1,387
32	유엔난민기구	4,906	100	23,266	23,266	100	23,149

연번	분담금 명	2023년		2024년			2025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33	유엔마약범죄사무소	134	100	260	260	100	253
34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	-	650	650	100	-
35	유엔아동기금(UNICEF) 정규재원기여금	5,157	100	19,500	19,500	100	18,663
36	유엔인구기금(UNFPA) 정규재원기여금	-	-	1,300	1,300	100	2,760
37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580	100	6,500	6,500	100	5,850
38	유엔자원봉사단(UNV)	4,717	97.1	5,832	5,789	99.3	5,829
39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분쟁예방기금	4,902	99.9	4,544	4,537	99.8	4,427
40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2,265	100	10,408	10,408	100	5,204
41	유엔평화구축기금	5,598	100	10,408	10,408	100	9,881
42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파트너십 기금	96	100	91	91	100	91
43	중동담수화연구소 협력기금	61	100	58	58	100	58
44	평화유지신탁기금	3,870	100	3,900	3,900	100	3,955
45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ECCC) 신탁기금	516	100	390	390	100	126
46	태평양산호초 국가 지원	259	100	390	423	108.5	-
47	테러리즘 대응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사업 지원	258	100	781	781	100	763
48	한-메콩 협력기금	8,178	100	10,400	10,400	100	11,040
49	한-미주기구(OAS) 협력기금	244	100	232	232	100	225
50	한-아세안 센터	7,600	100	7,600	7,600	100	7,600
51	한-아세안 협력기금	25,800	98.6	36,400	36,400	100	38,640
52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382	100	651	651	100	-
53	한-아프리카연합(AU) 협력기금	1,832	100	9,758	9,758	100	8,018
54	한-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협력기금	358	100	663	663	100	626
55	한-중미통합체제(SICA) 협력기금	1,226	100	1,165	1,165	100	1,075
56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	1,548	85.7	3,900	3,110	79.7	6,209
57	한-카리브공동체(CARICOM) 협력기금	818	100	3,900	3,900	100	3,681
58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3,870	100	5,200	5,200	100	5,388
59	한-ESCAP 협력기금(KECF)	191	100	390	390	100	378
60	한-UNDP 지속가능개발(SDG) 신탁기금	10,303	100	10,400	10,309	99.1	10,056
61	해적퇴치 관련 IMO 분담금	206	100	260	260	100	254
62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90	100	142	142	100	145

연번	분담금 명	2023년		2024년			2025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63	APEC 지원 기금(ASF)	903	100	911	932	102.3	966
64	APEC 정책지원부서(PSU) 분담금	241	100	229	229	100	472
65	IAEA 동물원성감염병 통합대응기금	1,032	100	980	980	100	-
66	IAEA 비확산핵안보기금	1,806	100	3,612	3,612	100	3,497
67	NATO 신탁기금	-	-	15,600	15,600	100	33,120
68	OECD 자발적 기여금	1,245	74.3	2,576	2,555	99.2	3,073
69	OECD DAC 자발적 기여금	387	100	368	368	100	377
70	WTO 대개도국 협력사업기여금(GTF)	390	100	650	628	96.6	547

(자료: 외교부)

□ 한국에 소재한 국제기구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외교부에서 분담금을 집행하고 있는 대상 국제기구 중, 해당 국제기구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는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GGGI), 한-아세안센터 등 4개임.

< 한국 소재 국제기구 대상 외교부 분담금 집행 현황 >

연번	국제기구명	소재지 (시/도)	2024 결산 (백만원)	우리나라 분담율	직원 수
1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부산시	1,861	91.5%	25명
2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TCS)	서울	2,421	33.33%	35명
3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GGGI)	서울	17,550	해당 없음	850명
4	한-아세안센터 (ASEAN-Korea Centre)	서울	7,600	93% (협약상 내용이 아닌 운영상 분담율)	40명

(자료: 외교부)

한국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의 경우 국제기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구의 주요 재정 원천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예산 집행 실적과 활동 실적에 대해 외교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 분담율은 재한유엔기념공원은 91.5%,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은 33.3%, 한-아세안센터는 93% 수준임.

상기 국제기구 중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의 경우, 사무국 운영비 등을 제외한 연간 예산 411만 달러 중 352만 달러가 집행되어 집행률은 85.7%이나, 이를 활동성 경비와 행정성 경비로 구분해 보았을 때 활동성 경비의 집행률이 82.1%로 비교적 낮은 상황이며 부서 간 집행률에서도 20%p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30]

이에 따라 사업 계획 대비 예산의 실효적 집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며, 외교부 차원의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23 회계연도 연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a)	결산(b)	집행률(b/a)
연간 예산(Annual Budget)	4,111,864	3,523,879	85.7
활동(Activities)	1,278,832	1,049,870	82.1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355,179	244,802	68.9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315,087	251,731	79.9
Department of Socio-cultural Affairs	345,538	309,584	89.6
Department of Management and Coordination	263,028	243,754	92.7
행정(Administration)	2,833,032	2,474,009	87.3
인건비(Personnel Expense)	2,616,342	2,297,837	87.8
사무실 운영비 (Office Management Cost)	216,690	176,171	81.3

※주: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의 2023 회계연도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임.
※자료: 「FY2023 ANNUAL FINANCIAL REPORT」, TCS를 바탕으로 재작성

30)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사업 구조의 다양성, 사업 착수 시기 차이 및 외부 환경 변수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부서 간 집행률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그 밖에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과 한-아세안센터도 국제기구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담금 집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제한되는 상황임.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는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내부 회계자료의 국회 제출을 위해서는 국제관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아세안센터 또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회원국이 자국의 헌법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비준된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인바, 결산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처럼 국제기구 분담금의 경우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을 분담하더라도 분담금 집행에 대한 국회 검토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주요 재정 공여국으로서 예산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부가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외교부의 「2023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국내 소재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사무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Ⅲ.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 **(국내 소재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사무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예산 지원 규모의 적정성, 해당 기구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우리나라 외 여타 국가의 재정 기여 규모 및 활동 현황, 외국인 채용 여부 등도 확인 필요

○ 설립협정 또는 MOU 상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및 기능 수행 여부 관련 지속 점검 필요

※자료: 「2023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종합보고서」, p. 8

□ 2024년도 신규 편성 분담금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 필요

외교부가 2024년부터 편성을 시작한 분담금은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기여, 비세크라드 펀드, NATO 신탁기금, 메콩강위원회,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유엔인구기금(UNFPA) 정규재원기여금 등 6건임.

< 2024년도 신규 편성 기여금 현황 >

분담금명	개요	납부 기간	지정/ 비지정	국제기구 실집행 현황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기여	우리 정부 주도로 제정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운영 및 세계시민교육활동 지원	2024~	지정	**2024년 활동 및 재정보고서 상금 미접수**
비세그라드 펀드	비세그라드 그룹(V4 /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4개국 협의체)의 공식 원조기구인 IVF 기여금 납부를 통해 V4와 V4 주변국(서발칸, 동방 파트너십 국가)에 대한 협력 강화	2024~	지정	72.6%
NATO 신탁기금	NATO 군 재활센터(Military Medical Clinical Treatment Rehabilitation Centre) 사업에 전액 기여	2024~	지정	**미확인**
메콩강 위원회(MRC) 분담금	MRC(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메콩강 수자원 관리를 위해 메콩협약을 통해 출범한 지역협력체)의 개발파트너로서 100만불 기여	2024~	비지정	**미확인**
유엔사회 개발연구소 (UNRISD)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운영	2024	비지정	**확인 불가 (개별 국가의 기여에 대한 집행 현황 자료 미제공)**
유엔인구기금 (UNFPA) 정규 재원기여금	UNFPA에 대한 정규재원 기여를 통해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및 SDG 이행에 기여하고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선도	2024~	비지정	**미확인**

※주: 국제기구 실집행 현황은 2024년도 기여금에 대한 것으로, 2025. 6. 기준임
(자료: 외교부)

6건의 신규 분담금 중 비세그라드 펀드 집행율만 확인이 가능하며, 나머지 네 개 분담금의 국제기구 집행률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분담금별 집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정부 주도로 제정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을 운영하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기여'는 외교부와 유네스코 간 사업 지원의향서가 2024년 5월 27일에 체결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2025년이 되어 시작됨에 따라, 2024년 활동 및 재정보고서가 2025년 말이 되어야 발간될 예정임.

<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기여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시기	주요 내용
25.2월	• 세계시민교육상 운영 방안 구체화
25.3~5월	• 세계시민교육상 운영 및 홍보계획 수립 •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웹페이지 개설 (https://www.unesco.org/en/prizes/global-citizenship-education) •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홍보물 제작 (https://trello.com/b/v50DXqHM/education-prizes-2025)
25.5월 ~25.9.1.	• 제1차 세계시민교육상 후보자 접수
25.6~9월	• 세계시민교육상 평가위원회 최종심사 진행
25.10월	• 제1차 세계시민교육상 시상식 개최

(자료: 외교부)

비세그라드 펀드[31]는 V4 역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을, 비정부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임. 2024년 말 기준 집행률은 52.3%이며, 2025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연내 전액 집행할 예정임.

31) 비세그라드펀드(IVF: International Visegrad Fund)는 V4(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회원국들이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문화, 과학, 교육분야 발전을 지원하고자 공동 창설한 국제기구로, V4 국가 간 및 서발칸/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제고를 위해 매년 11백만 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운영중

한편, 메콩강위원회 분담금은 송금 시기가 2024년 11월 28일로, 지난해에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메콩강위원회는 동 기여금을 2025년에 집행하기로 하였다고 함.

이 밖에 유엔사회개발연구소에 대한 기여금과와 유엔인구기금 정규재원 기여금은 분담금의 용처를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기여'로 우리 정부의 기여금만 특정하여 집행률을 측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의견임.

이처럼 2024년에 신규 편성된 분담금은 사업 초기단계로 인하여 국제기구의 집행현황을 파악할 수 없거나 집행 상황이 미진한 경우가 다수 있음. 향후에는 분담금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이전에 국제기구와의 협의 및 사업 일정 조율을 보다 면밀히 진행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다자관계 협력

가. 개 요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와 공동 대처함으로써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250억 1,300만원이고, 257억 3,300만원이 집행됨.

< 다자관계 협력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2200] 다자관계협력				17,378	25,013	25,013	25,733	21,585
	[2231] 국제기구 협력강화			17,378	25,013	25,013	25,733	21,585
		[11] 일반	[401] 국제기구초급 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9,284	14,115	14,115	14,048	16,072
		[11] 일반	[402]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1,823	1,880	1,880	1,757	-
		[11] 일반	[403]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148	3,943	3,943	3,489	3,751
		[11] 일반	[405] MIKTA 중견국 외교	147	160	160	137	244
		[11] 일반	[406]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409	475	475	425	451
		[11] 일반	[408]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정보화)	64	63	63	62	57
		[11] 일반	[411]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2,180	-	-	-	-
		[11] 일반	[41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	-	-	-	1,010
		[11] 일반	[421]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322	4,377	4,377	5,815	-

나.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사업은 글로벌 다자이슈 관련 회의 및 협의체 개최·참석, 국제회의 의장단·이사국 진출 및 활동 지원,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활동을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및 위상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39억 4,300만원이고, 이 중 34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00만원을 이월하였고, 2억 7,4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943	3,943	-		-	3,793	3,489	30	274	88.5
- 유엔 관련 다자협력 강화	1,026	1,026	-	58	-	1,084	985	30	69	96.0
- 국제인권 관련 다자협력 강화	211	211	-	121.3	-	332.3	308.3	-	24	146.1
- 국제안보 관련 다자협력 강화	99	99	-	60	-	159	157	-	1	158.6
- 아시아정당국제회의 (ICAPP) 사무국 지원	560	560	-	-	-	560	560	-	-	100.0
-2024-25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2,047	2,047	-	△390	-	1,657	1,478	-	179	72.2

□ 2024-25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집행부진

내역사업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국제평화·

안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의 국제 영향력 및 위상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외교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2024년도에 2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14억 7,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2.2% 수준에 그쳤음.

<2024년도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편성근거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중점의제 성과 도출 관련 활동	○ 의장국 수임 시 중점의제 논의 관련 회의 개최(2회) ○ 세미나 및 행사 공동 개최 등 안보리 우리 중점의제 관련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3회) ○ 의장국 수임 관련 회의 참여 여비 및 중점의제 관련 전문가 초청 여비(5회) ○ 중점의제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2회)	610	540	88.5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의 이해 제고 활동	○ 세미나 및 안보리 이사국 주유엔대사 현장 방문 등 행사 개최(2회) ○ 방한 초청 및 회의 참여(3회)	364	185	50.8
안보리 이사국 간 업무체계 구축	○ 이사국(상임 및 비상임이사국) 간 업무협의(20회)	62	76	122.6
안보리 관련 전문인력 확보	○ 주유엔대표부 전문직 및 일반직 행정직원 채용(4명) ○ 전문 스피치라이터 채용(1명) ○ 법률자문가 용역(1회)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4명)	573	375	65.4
안보리 회의 참석 및 이사국·관련국·사무국과의 협의	○ 회의 참석 및 업무협의(14회)	189	74	39.2
안보리 이사국 및 의장국 수임 지원 관련 연구	○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의제별 정책 연구비(3회)	240	219	91.3
대국민 공공외교 및 안보리 수임 관련 홍보	○ 이사국(상임 및 비상임이사국) 간 업무협의(3회)	9	9	100.0
합 계		2,047	1,478	72.2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동 사업의 집행률 부진에 대하여, 이사국 대표단 방한 무산, 전문인력 채용 지연 및 회의 참석 축소 등 외부 여건과 일정 조정의 어려움을 들고 있음. 실제로 안보리 관련 주요 행사는 주유엔대표부 주관으로 현지에

서 이루어졌고, 방한 초청은 일정상의 제약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해당 사업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임기 개시 첫해에 해당하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핵심적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전 준비와 기획 및 실행력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었다고 판단됨.

특히, 회의·세미나 개최 횟수, 인력 운영 규모 등 실질적 활동이 계획 대비 축소되었으며, 국외업무여비의 집행률이 53.1%에 그친 점은 아쉬운 측면이 있음.

<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비목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비목)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B/A)
	본예산(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용임금(110-04)	391	391	-	△150	-	241	213	-	28	54.5
-일반수용비(210-01)	9	9	-	152	-	161	161	-	0	1788.9
-임차료(210-07)	40	40	-	4	-	44	44	-	0	110.0
-일반용역비(210-14)	510	510	-	△204	-	306	295	-	11	57.8
-국내여비(220-01)	-	-	-	3.5	-	3.5	3.5	-	0	-
-국외업무여비(220-02)	657	657	-	△209	-	448	349	-	99	53.1
-사업추진비(240-01)	68	68	-	14	-	82	82	-	0	120.6
-정책연구비(260-02)	340	340	-	-	-	340	319	-	21	93.8
-고용부담금(320-09)	32	32	-	-	-	32	12	-	20	37.5
합 계	2,047	2,047	-	△390	-	1,657	1,478	-	179	72.2

더욱이 2025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5월 기준 집행률이 25%에 불과하여 2025년도 역시 집행부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외교부는 하반기에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질 예정이라 설명하지만, 전년도에도

실적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집행률 >

(2025. 5월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중점의제 성과 도출 관련 활동	600	91	15.2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의 이해 제고 활동	312	-	-
안보리 이사국 간 업무체계 구축	60	8	13.3
안보리 관련 전문인력 확보	619	248	40
안보리 회의 참석 및 이사국·관련국·사무국과의 협의	164	41	25
안보리 이사국 및 의장국 수임 지원 관련 연구	255	119	46.7
대국민 공공외교 및 안보리 수임 관련 홍보	20	-	-
합 계	2,030	507	25

(자료: 외교부)

이에 외교부는 사업의 목적과 상징성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예산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설계·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9.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가. 개 요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프로그램[32]은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전략적 원자력 외교를 추진하고, 양자 및 다자 원자력 협력체제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를 구축하며, 국제사회의 의무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외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은 52억 3,900만원이고, 47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2300]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2,680	5,239	5,239	4,795	4,848
	[2331] 원자력 및 군축·비확산 분야 양·다자 협력 강화			2,680	5,239	5,239	4,795	4,848
		[11] 일반	[40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680	2,127	2,127	1,965	3,005
		[11] 일반	[402]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	3,112	3,112	2,830	-
		[11] 일반	[403]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	-	-	-	1,843

32) 2022년 정부의 프로그램 성과목표제 시행으로 인해 종전의 종전 1500 프로그램(다자관계 협력) 내의 세부사업이 2300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었음.

나.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사업은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서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인공지능(AI) 관련 국제적 논의 선도 및 인공지능(AI) 기반 강군 육성이라는 우리 국방전략과 부합하는 국제 규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3,112	-	-	1	-	3,113	2,830	22	261	90.9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3,112	-	-	1	-	3,113	2,830	22	261	90.9

□ 부처 간 예산배분 미흡으로 인한 과다 전용 및 연구비 미집행 부적절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사업은 2022년 11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2023년 제1차 고위급회의를 공동 개최한 데 이어, 2024년 제2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임.

우리 정부는 제1차 회의(2023년, 네덜란드 개최)의 집행 규모(약 83억 원)를 감안하여, 제2차 회의 개최를 위해 총 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외교

부와 국방부가 공동주최하도록 각 부처에 각각 31억원씩 배정하였음.

그런데, 외교부는 당초 준비기획단 인건비로 책정된 9,300만원에 1억 1,100만원을 전용 등을 통하여 추가로 집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제 발굴 및 논의 구체화를 위해 편성된 정책연구비 1억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음.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집행액
준비기획단 인건비	93	171
회의 물품 구입, 자료 제작, 자산 취득, 일반용역비 등 운영비	2,869	2,611
국내외 여비	30	28
오·만찬 및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비	20	20
정책연구비 (의제·발굴 등)	100	-
총계	3,112	2,830

(자료: 외교부)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사업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7.19.)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 (2331-402)	210-07	10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 (2331-402)	320-09	준비기획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전용 (2024.7.19.)		260-02	100		110-04	준비기획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내역변경 (2024.6.19.)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110-03	1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 (2331-402)	110-04	준비기획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4.3.15.)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 (2331-402)	210-07	100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 (2331-402)	210-09	준비기획단 사무실 조성 및 시설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충당
세목조정 (2024.8.2.)		210-14	293		210-01	REAIM 고위급회의 홍보를 위한 광고료 지급

외교부는 인건비 전용 사유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가 동 사업 예산을 분할 편성하였으나, 준비기획단이 외교부에 소속되어 있어 국방부 예산으로 외교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외교부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전액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함.

동 사업은 국제 규범 창출을 위한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 논의를 주도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인 만큼, 행사 의제의 전문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연구비의 미집행은 향후 사업 성과와 국제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연구비 예산 전액을 행정비용에 충당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이는 당초 외교부와 국방부 간 예산 배분 시 집행 역할에 대한 충분한 조정과 협의 없이 기계적으로 예산을 분할 편성함으로써, 공동주최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전용의 반복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미흡했다고 할 것임.

향후 유사한 형태의 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에는, 부처 간 기능별 분담 및 세부 세출항목에 대한 실무 협의를 사전에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0. 국제개발협력

가. 개 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ⅰ)「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ⅱ)「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ⅲ)「중남미지역 국가원조」, ⅳ)「중동 CIS지역 국가원조」, ⅴ)「글로벌 프로그램」, ⅵ)「협력사업 지원」, ⅶ)「전략적협력 강화」, ⅷ)「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일부(「인도적지원」 일부[33] 및 「민관협력사업」[34]), 이상 8개 단위사업 예산은 외교부가 KOICA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 예산임.

외교부는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단위사업 중 「ODA 선진화」 세부사업과 「인도적지원(ODA)」 세부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전체 프로그램의 2024년 예산액은 1조 9,680억 3,500만원이고, 이 중 1조 8,938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음.

33) 2438-402 중 민관협력사업 인도적지원

34) 2438-403

< 국제개발협력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2400] 국제개발협력				1,247,771	1,968,035	1,968,035	1,893,806	1,967,014
	[243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219,944	275,641	275,641	249,975	307,548
		[11] 일반	[401] 베트남(ODA)	32,381	49,646	49,646	41,869	57,293
		[11] 일반	[402] 인도네시아(ODA)	15,448	20,971	20,971	15,016	17,114
		[11] 일반	[403] 캄보디아(ODA)	22,636	22,864	22,864	22,339	21,232
		[11] 일반	[404] 필리핀(ODA)	18,137	31,043	31,043	21,613	30,470
		[11] 일반	[405] 방글라데시(ODA)	14,122	13,790	13,790	9,410	14,044
		[11] 일반	[406] 몽골(ODA)	14,848	17,122	17,122	16,706	20,937
		[11] 일반	[407] 라오스(ODA)	25,698	24,652	24,652	26,752	27,290
		[11] 일반	[408] 스리랑카(ODA)	11,044	12,232	12,232	18,842	7,975
		[11] 일반	[409] 네팔(ODA)	7,971	9,438	9,438	10,101	14,653
		[11] 일반	[410] 파키스탄(ODA)	7,337	9,239	9,239	8,869	11,315
		[11] 일반	[411]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49,742	62,841	62,841	57,955	83,648
		[11] 일반	[412] 인도(ODA)	415	853	853	190	250
		[11] 일반	[413] 미얀마(ODA)	165	950	950	314	1,327
	[2432]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224,943	306,614	306,614	289,238	302,087
		[11] 일반	[401] 가나(ODA)	9,548	15,943	15,943	15,943	20,583
		[11] 일반	[402] 에티오피아(ODA)	31,109	30,643	30,643	28,804	28,644
		[11] 일반	[403]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24,029	187,826	187,826	177,451	178,966
		[11] 일반	[404] 르완다(ODA)	15,640	15,714	15,714	15,714	17,733
		[11] 일반	[405] 우간다(ODA)	14,554	14,501	14,501	13,620	17,547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06] 탄자니아(ODA)	14,678	18,927	18,927	16,981	17,931
		[11] 일반	[407] 세네갈(ODA)	8,620	12,853	12,853	12,367	12,507
		[11] 일반	[408] 이집트(ODA)	6,765	10,207	10,207	8,358	8,176
	[243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87,242	73,671	73,671	72,784	94,432
		[11] 일반	[401] 콜롬비아(ODA)	9,861	7,306	7,306	8,306	11,229
		[11] 일반	[402] 페루(ODA)	6,917	9,964	9,964	7,101	9,497
		[11] 일반	[403] 볼리비아(ODA)	8,408	8,024	8,024	9,224	17,250
		[11] 일반	[404] 파라과이(ODA)	10,892	15,701	15,701	15,038	11,100
		[11] 일반	[405]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1,164	32,676	32,676	33,115	45,356
	[2434]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78,072	133,274	133,274	119,449	115,139
		[11] 일반	[401] 우즈베키스탄(ODA)	11,928	23,767	23,767	19,274	22,020
		[11] 일반	[402]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7,482	88,688	88,688	80,027	69,972
		[11] 일반	[403] 키르기스스탄(ODA)	8,661	12,950	12,950	17,566	12,653
		[11] 일반	[404] 타지키스탄(ODA)	1	7,169	7,169	1,882	5,439
		[11] 일반	[405] 우크라이나(ODA)	0	700	700	700	5,055
	[2435] 글로벌 프로그램			228,796	313,652	313,652	306,090	336,244
		[11] 일반	[401]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100,858	128,756	128,756	123,805	143,026
		[11] 일반	[402] 글로벌연수(ODA)	51,917	67,378	67,378	66,962	67,973
		[11] 일반	[403] 국제기구협력(ODA)	51,725	81,915	81,915	80,207	80,015
		[11] 일반	[404]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24,296	35,603	35,603	35,116	45,230
	[2436] 협력사업 지원			48,397	59,260	59,260	54,450	61,390
		[11] 일반	[401] 협력사업 지원(ODA)	48,397	59,260	59,260	54,450	61,390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437] 전략적 협력강화			3,925	8,000	8,000	5,661	6,400
		[11] 일반	[401] 전략적 협력 강화(ODA)	3,925	8,000	8,000	5,661	6,400
	[2438]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356,452	797,923	797,923	796,159	743,774
		[11] 일반	[401] ODA 선진화	1,149	812	812	714	1,271
		[11] 일반	[402] 인도적지원(ODA)	307,774	740,111	740,111	740,079	677,503
		[11] 일반	[403] 민관협력사업(ODA)	47,530	57,000	57,000	55,365	65,000

나. 인도적지원(ODA)

「인도적지원(ODA)」 사업은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 실시, 인도적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것임.

2024년 예산액은 7,401억 1,100만원이며, 이 중 7,400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인도적지원 (ODA)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740,111	740,111	-	-	-	740,111	740,079	-	32	100.0	100.0

「인도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은 아래와 같음.

< 2024년도 인도적지원 내역사업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해외긴급구호	734,624	734,624	-	-	-	734,624	734,600 (732,107)	-	24
재난대응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민간경상보조)	703,400	703,400	-	-	-	703,400	703,400 (700,907)	-	-
ACT-A 등 포함 긴급·만성재난 대응	434,700	434,700	-	2,283	-	436,983	436,983 (436,967)	-	-
우크라이나 지원	260,200	260,200	-	△200	-	260,000	260,000 (258,037)	-	-
KDRT 역량강화	8,500	8,500	-	△2,083	-	6,417	6,417 (5,902)	-	-
국제부담금	31,224	31,224	-	-	-	31,224	31,200	-	24
선진 인도적지원 역량강화	187	187	-	-	-	187	179	-	8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출연금)	5,300	5,300	-	-	-	5,300	5,300 (5,287)	-	-
계	740,111	740,111	-	-	-	740,111	740,079	-	32

(자료: 외교부)

「인도적지원(ODA)」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역사업은 「해외긴급구호」인데,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7,346억 2,40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2,993억 6,700만원 대비 약 2.5배 증액 편성되었음.

「해외긴급구호」 내역사업은 다시 KOICA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집행하는 '재난대응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사업과,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국제부담금' 사업으로 나뉨.

□ 인도적지원 예산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지원 부적절

‘재난대응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내내역사업에는 ① ACT-A[35] 등 포함 긴급·만성재난대응, ② 우크라이나 지원, ③ KDRT 역량강화 사업이 있음.

이 중 ① ‘ACT-A 등 포함 긴급·만성재난대응’은 해외의 긴급한 재난 또는 만성재난에 대하여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해당 국가에 직접 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긴급재난’과 ‘만성재난’ 성격으로 구분되며, 지원 내역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36]하도록 되어 있음.

< 해외긴급구호 지원 내역 >

1. 개 요

❑ 재난의 성격, 구호 제공방식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
△현금지원 △현물지원 △KDRT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긴급구호를 제공

○ **(긴급재난) △피해 현황* △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 요청 △해당 재외공관 건의 △국제사회 지원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여부, 지원 방식 및 규모 결정**
* 인적 피해(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이재민 등의 수) 및 물적 피해(가옥, 농경지, 기반시설 등의 파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만성적 재난)** 국제사회가 발표(UNOCHA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등) 하는 인도적 수요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 재난 지역에 대한 접근성 및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OCHA, WFP,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자료: 「2023년도 해외긴급구호 활동 및 평가 결과」, 2024. 11. 4. 외교부

35) ACT-A는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의 약자로, 코로나19 시기 ▲백신, ▲치료제, ▲진단 분야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WHO를 중심으로 출범한 국제 공조 체제를 말함.

3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구호물품·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2024년도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긴급재난 지원액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천불)

연번	지원내용	금액(원화)	금액(미불)
1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	4,011	3,000
2	칠레 산불 피해	666	500
3	몽골 혹한 피해	268	200
4	대만 지진 피해	684	500
5	케냐 집중호우 피해	1,379	1,000
6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피해	684	500
7	브라질 홍수 피해	414	300
8	카리브 3개국 허리케인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416	300
9	남부 아프리카 4개국 가뭄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4,112	3,000
11	에티오피아 산사태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1,371	1,000
12	아르메니아 추가 인도적지원	1,342	1,000
13	베트남 태풍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2,661	2,000
14	레바논 인명 피해에 대한 인도적지원	4,118	3,000
15	네팔 폭우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695	500
16	쿠바 식량·전력난 관련 인도적지원	2,069	1,500
17	볼리비아 산불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83	60
18	에콰도르 산불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56	40
19	필리핀 태풍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695	500
20	라오스 홍수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699	500
21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에 따른 인도적지원**	**14,291**	**10,000**
22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활동비	69	50
23	2024년도 ACT-A 기여금	142,803	100,000
합 계		**183,583**	**129,450**

(자료: 외교부)

< 만성재난 지원액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천불)

연번	지원내용	금액(원화)	금액 (미불)
1	DR콩고	6,702	5,000
2	과테말라	3,144	2,200
3	나이지리아	1,333	1,000
4	남수단	4,021	3,000
5	니제르	2,681	2,000
6	레바논	6,439	4,500

연번	지원내용	금액(원화)	금액 (미불)
7	마다가스카르	1,340	1,000
8	말리	2,010	1,500
9	모잠비크	1,340	1,000
10	미얀마	17,350	13,000
11	방글라데시	13,346	10,000
12	베네수엘라	5,725	4,000
13	부르키나파소	2,681	2,000
14	소말리아	2,666	2,000
15	수단	12,063	9,000
16	시리아	17,170	12,000
17	아이티	8,575	6,000
18	아프가니스탄	25,931	18,000
19	에콰도르	1,429	1,000
20	에티오피아	9,382	7,000
21	엘살바도르	2,858	2,000
22	예멘	6,801	4,800
23	온두라스	4,296	3,000
24	요르단	5,729	4,000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340	1,000
26	차드	3,351	2,500
27	카메룬	1,340	1,000
28	케냐	1,333	1,000
29	콜롬비아	4,287	3,000
30	튀르키예	7,873	5,500
31	팔레스타인	51,915	38,000
32	페루	1,429	1,000
33	다년간 기여	14,175	10,100
34	다국가(방글라데시,동티모르)	1,329	1,000
합 계		**253,384**	**183,100**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사업에서 지원된 건 중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에 따른 인도적지원(1,000만불)'은 2024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G20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로 창설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37]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임.

37) GAAHP는 기아·빈곤 퇴치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회원과 해당 전문 지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려는 파트너를 연결하는 플랫폼임.

동 지원은 지난 11월 우리 정상이 G20 정상회의 참석에서 우리나라의 GAAHP 가입을 선언하며 연내 1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밝힘[38]에 따라 지원을 실시하게 된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첫째, 동 사업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인도적지원의 독립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인도적지원의 기본원칙은 인류애(humanity), 공평성(impartiality), 중립성(neutrality), 독립성(independence)으로, 이 중 '독립성'은 인도적지원이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목적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함.[39]

그런데 GAAHP에 대한 지원은 오로지 재난의 인도적 필요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기보다는, G20 정상회의라는 외교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공약 이행이라는 정부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인도적지원의 핵심 원칙인 독립성의 원칙과 상충될 여지가 있음.

둘째, 동 지원은 일반적인 지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긴급지원은 해외재난 발생 시 재외공관의 보고와 국제사회의 긴급 요청 접수에 따라 외교부 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있으며, 만성지원은 연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지원함.

---

38) "아프리카 식량난에 1천만불 지원…尹, 기아퇴치연합 회원국 선언" (연합뉴스. 2024.11.19.)

39) https://www.icrc.org/en/our-fundamental-principles

ㅇ **자연재난 등 긴급 재난 지원**

▪ (지원 결정 절차) 재난 발생 시 수일 내에 지원 여부 결정

재난 발생 ⇨ 재외공관 보고 ⇨ 국제사회의 재난 평가 및 긴급 요청 접수 ⇨ 지원 계획(안) 수립 (지역국/재외공관 협의) ⇨ 지원 계획 확정

▪ (고려사항) △인적·물적 피해 현황, △피해국의 재난 대응 역량,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및 지원 현황·규모, △정무적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ㅇ **난민 등 만성적 재난**

▪ (지원 결정 절차) 유엔합동지원요청을 바탕으로 연초 집행계획 수립

유엔합동 지원요청 발표 (연초) ⇨ 국별 지원계획(안) 수립 ⇨ 지역국/재외공관 협의 ⇨ 국별 지원계획 확정

▪ (고려사항) △국별 유엔합동지원요청 규모, △재난의 심각성,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우리의 인도지원 중점 추진 분야와의 부합성, △정무적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2025.2.), 외교부

그런데, 동 지원은 정상의 공약 이행을 위한 결정에 의한 것으로 긴급재난이나 만성재난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데,[40] 이러한 집행은 재원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저해할 여지가 있음.

다만,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인도적지원이 성격상 연초에 모든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GAAHP은 당시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이 주도한 핵심 성과사업으로 모든 G20 회원국이 가입했다는 점에서 GAAHP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였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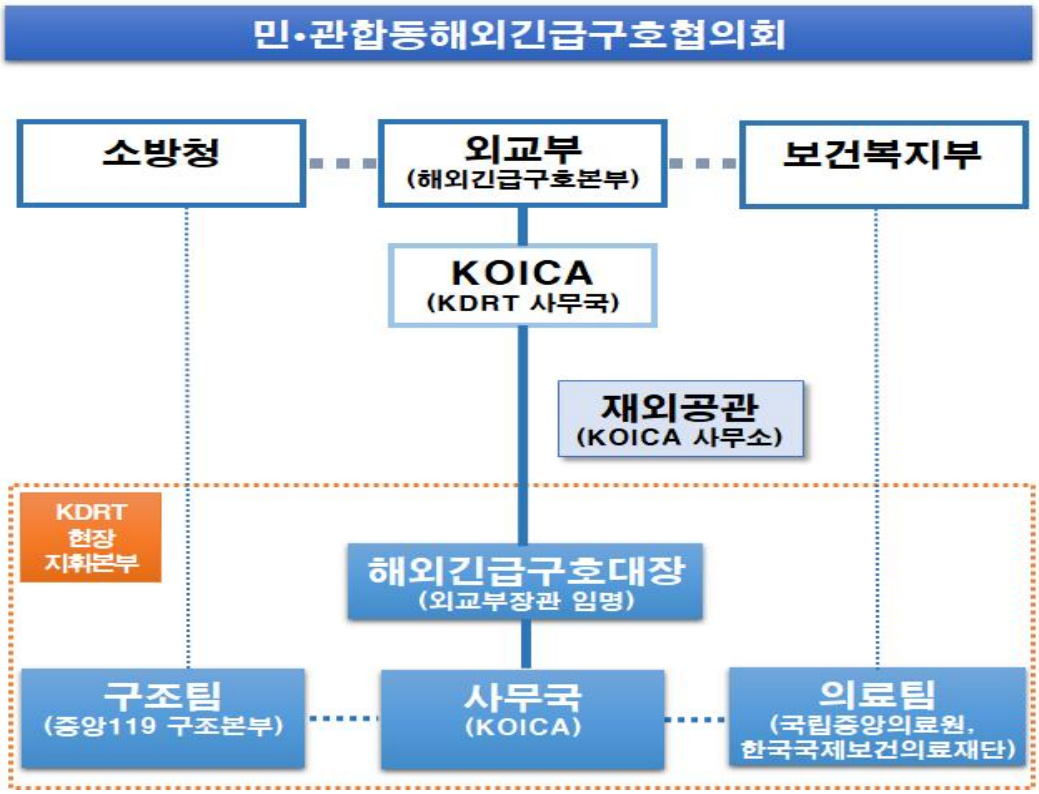
□ KDRT 관련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 부진 등

‘재난대응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내내역사업의 하위 사업인 ‘KDRT 역량강화’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운

40) 연초 작성하는 지원계획은 외교부 비공개 사항으로 이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함.

영을 위한 사업임. KDRT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국가의 피해 감소, 인명구조, 의료구호, 조기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신속하게 파견하는 긴급구호대임.

KDRT 구성 및 지휘체계는 다음과 같음.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정이 필요함.

첫째, KDRT 역량강화 예산은 2023년 22억 7,500만원에서 2024년 85억원으로 약 4배 증액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은 59억원으로 약 70% 수준에 그쳐 집행이 부진함.

KDRT 관련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 구조팀 운영, KDRT 사무국 운

영 등 '긴급구호 역량강화' 사업, ② 해외재난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③ 비축창고 운영, ④ 긴급구호 전담인력 인건비로 구분되는데, 긴급구호 전담인력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용·조정을 통해 감액하였음.

< KDRT 역량강화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본예산	본예산	전용·조정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긴급구호 역량강화	1,823	7,578	△1,845	5,733	5,358	356	20
구조팀 운영	398	1,700	3	1,703	1,700	-	3
의료팀 운영	1,014	1,600	△233	1,367	1,367	-	-
사무국 운영	200	3,150	△1,157	1,993	1,623	356	14
교육훈련 및 네트워크 구축	60	765	△454	311	310	-	2
사무국 운영지원 용역(자회사)	151	363	△5	358	358	-	-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160	300	△22	278	139	139	-
비축창고 운영	140	500	△216	284	284	-	-
긴급구호 전담인력 인건비	151	122	-	122	122	-	-
계	2,274	8,500	-	6,417	5,903	495	20

(자료: 외교부)

둘째, 구호물품 비축 관련 계약 체결이 지연되며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계획 수립·추진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구호물품 비축과 관련하여, 비축을 위하여 구호물품을 구입하는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사업과 구입한 구호물품을 비축하기 위한 창고를 운영하는 '비축창고 운영'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각각 46.3%와 56.8%에 그침.

우선,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사업의 집행 부진은 패밀리텐트 구입을 위한 입찰 공고가 2024년 9월에, 계약 체결이 같은 해 11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월이 발생함에 기인함. 당초 KOICA는 2024년 상반기 중 조달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41], 구매 수량 파악과 견적·사양 조사가 2024년 8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조달 계획에 지연이 발생하였음.

< 패밀리텐트 구매 계약 추진 경위 >

○ **(2024년 5월)** 패밀리텐트 구매 수량 등 파악
○ **(2024년 6~8월)** 패밀리텐트 구매 견적 및 사양조사 등 입찰 준비
○ **(2024년 9월)** 입찰 공고
○ **(2024년 11월)** 계약 체결

(자료: 외교부)

한편, ‘비축창고 운영’은 예산 5억원 중 비축물품 지원 운송비 2억원이 집행되지 않음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으며,[42] 비축물자 확대를 고려하여 2024년 4월부터 비축창고를 확장하였으나 패밀리텐트 물품 반입이 늦어져 확대된 창고 공간 활용이 계획 대비 다소 제한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평년에 비하여 지난해에 다수의 용역이 추진되었는데, 용역 급증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외교부와 KOICA는 긴급구호 역량강화 사업 중 사무국 운영 예산에서 ‘인도적지원 혁신제품 생산-활용 생태계 조성 컨설팅 용역’ 등 약 10여개의 용역을 실시하였음.

41) 「2024년도 인도적지원(ODA) 보조금 사업계획서」, p.4.

42) 2024년 긴급재난 발생으로 인한 비축물품의 현물 지원 사례가 없어 비축물품 운송비가 발생하지 않았음.

< 2022-2024년 '사무국 운영' 사업의 용역 실시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액
2022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	22.4.19.	22.6.30.	14,850
2023	2023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 백서 제작 용역	23.7.7.	23.10.31.	48,400
	2023 캐나다 산불 피해 대응 백서 제작 용역	23.10.30.	23.12.8.	25,630
2024	인도적지원 및 분쟁취약 지원사업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방안 연구 용역	24.7.16.	24.12.15.	128,253
	인도적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24.7.18.	24.12.31.	147,676
	2024년 인도적지원 홍보 용역	24.8.29.	25.2.28.	320,036
	우리나라의 인도적지원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24.9.6.	25.4.3.	287,060
	2024년 HNPW 자료 발간집 디자인 제작 용역	24.9.25.	24.10.18.	4,950
	(장기계속)2024-2026 KOICA 인도지원처 회계정산 검토용역	24.10.7.	24.12.31.	35,497
	2024년 HNPW 자료 발간집 인쇄 용역	24.11.7.	24.11.19.	9,966
	인도적지원 혁신제품 생산-활용 생태계 조성 컨설팅 용역	24.11.8.	25.3.31.	221,504
	인도적지원 정보시스템 기본설계(ISMP) 용역	24.11.14.	25.3.31.	184,371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용역들이 집행된 '사무국 운영' 예산은 본래 KDRT 사무국[43]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 수행된 용역들은 '인도적지원'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것으로 KDRT 사무국의 고유 기능을 벗어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2024 인도적지원 홍보 용역」의 과업에는 '인도지원처 통합 홍보 발전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KOICA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44]된 조직인 인도지원처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 관련 용역임.

43) KOICA가 KDRT 사무국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관 부서는 인도지원처 내의 긴급대응팀임.

44) **「직제규정」** (한국국제협력단)
제9조의5(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는 인도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 민관협력 사업, 혁신적개발협력프로그램,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 조달 및 기술평가 등을 담당하고 **산하에 인도지원처**, 파트너사업실, 조달실을 둔다. <개정 2018.07.12., 2020.06.26., 2021.05.13., 2023.12.22.>

그러나 해당 용역이 집행된 예산이 인도지원처 내 일부 부서인 긴급대응팀이 담당하는 'KDRT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도지원처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위한 용역에 KDRT 사무국 운영 예산이 사용된 것은 예산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KDRT 사무국 관련 조직 현황 >

부서명		분장업무
인도 지원처	인도 지원실	1. 인도적지원 추진 체계 구축 / 운영 2. 인도적지원 보조금 집행 총괄 3. 인도적지원 국제 규범 및 파트너십 관리 4. 인도적지원 관련 규정 및 제도 관리 5. 인도적지원 현금지원 6. 비축물자 관리 7. 소관 상임이사 성과관리 총괄 8. 소속 본부 내 업무 및 프로세스 조정 총괄 9. KDRT 파견 시 지원(물류, 예산, 행사 등)
	긴급 대응팀	**1. 인도적지원 현물지원** **2. KDRT 평시 업무 총괄** ㅇ **해외긴급구호대(KDRT) 사무국 운영** - KDRT 실무협의회 개최 및 운영협의회 지원 -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및 표준매뉴얼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검토 - KDRT 파견 대비 사무국 운영 개선 등 - 국내 합동모의훈련(연간 1회) 실시 - 긴급대응 분야 공여국 협의 총괄(USAID, JICA 등) ㅇ **KDRT 구조팀 운영 관리** - 구조팀 연간 계획 검토 및 예산 관리 - 구조장비·물품 조달계약, 관리 지원 등(장비구매·폐기·기증 계획 협의, 검토 및 이행 후 자산등록 및 구호장비·비품 목록갱신, 창고관리 등) - 구조팀 국내외 회의/교육/훈련/등급분류 및 예방접종 등 지원(경비 정산 등) ㅇ **KDRT 의료팀 운영 관리** - 의료팀 약정 체결 및 관리 - 의료팀 연간 사업계획 및 변경 검토(예산교부) - e나라도움 집행점검 및 정산검토 - 의료팀 국내외 교육/훈련/등급분류 지원 - 장비·물품 관리 지원 등(구매·폐기·기증 절차 검토) ㅇ **KOICA 예비대원 관리** - 연간계획 수립,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교육 및 훈련(IOM 협력, 합동모의훈련 등) - 인력풀 갱신 및 파견 대비(예방접종 등)

부서명		분장업무
		3. KDRT 파견 시 업무 총괄 ㅇ 재난발생 직후 - 피해상황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및 민관합동긴급구호협의회 참석 - (KDRT 파견 시) 선발대(사전조사단) 파견 지원. 인력 및 물류 준비, 사무국 업무분장 - (긴급구호물자 지원 시) 구매/조달 준비 ㅇ 파견계획 수립 및 파견 준비 - 상세 파견계획 및 인력(구성/보험/항공 등) 및 물자(필요물품 계약/조달/운송 등) 종합지원계획 수립 - KDRT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출정식 행사 지원, 출국 관련 행정 지원 ㅇ 현장 사무국 지원 - 상시 소통 및 현장 수집 정보 관리(일일상황보고서 접수) - 예산 및 물품 추가 수요 확인 및 지원 - 대원 건강 및 안전관리 ㅇ 귀국계획 수립 및 귀국 준비 - 상세 귀국계획 수립(건강검진,항공 등) - 본국 회수/기증 장비 목록 작성, 서류 점검, 운송 협의, 기증식 지원 - 귀국 행사 지원, 귀국 관련 행정 지원 ㅇ 귀국 후 지원 - 수당 및 경비 정산, 보상휴가 부여 요청 - 실적 취합 및 정리 - 평가회의 개최 및 언론홍보 대응 지원
	분쟁 취약 지원팀	1. 분쟁 및 취약국 사업 기획 및 총괄관리 2. 분쟁 및 취약국 사업 예산관리 3. 분쟁 및 취약국 사업 및 성과관리 4.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사업(조기복구) 기획 및 관리 5. 인도적지원 출연금 집행 총괄 6. KDRT 파견 시 지원(구매/계약, 인력관리, 홍보 등)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직제규정 시행세칙

KDRT의 업무가 인도적지원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동 용역들과 KDRT 사무국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에는 인도적지원 업무 전반을 위한 사업과 KDRT 사무국 관련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넷째, KDRT 관련 행정업무를 위한 용역업체 고용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KDRT 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① KOICA 정규인력, ② KOICA 계약직 인력, ③ KOICA 자회사인 '코웍스'가 행정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KOICA의 조직인 긴급대응팀의 정원은 8명이며,[45] 이와 별도로 '긴급구호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을 통해 무기계약직 2인을 채용하고 있음.

이 외에, 코웍스는 KOICA로부터 KDRT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실무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중임. 코웍스의 과업은 KDRT 장비의 점검·유지보수, 장비 운송 지원, KDRT 예비대원에 대한 예방접종 및 교육 실시 등임. KDRT 업무 관련하여 자회사에는 3명의 인력이 있으며, 코웍스의 KDRT 관련 예산 집행액은 3억 5,800만원임.

< 자회사 코웍스의 KDRT 관련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액
인건비		134
직접경비	교육훈련(예비대원 교육, 예방접종, 합동훈련)	71
	장비(소모품비, 점검/유지보수, 차량임차 등)	50
	계	121
경상경비		71
계(부가가치세 제외)		**326**
총계(부가가치세 포함)		**358**

(자료: KOICA)

그런데 지난해 KOICA는 KDRT 사무국 업무 중 구조팀 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기 위한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음. 동 용역계약은 총 5억 7,000만원 규모로, 계약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임. 용역 업체의 주요 업무는 KDRT 구조팀 관련 ① 국외 출장 시 항공권 발권, 숙소 예약, 보험가입 및 정산, ② 국내 장비점검 출장 시 숙소 예약 및 정산, ③ 국내 교육·워크숍 시 숙소 예약, 국내여비 및 임차비 등 정산 등임.

45)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정원임.

< KDRT 구조팀 행정지원 위탁 용역 개요 >

○ **(용역명)** KDRT 구조팀 행정지원 용역
○ **(용역기간)** 2024. 7 ~ 2024. 12.
○ **(계약 금액)** 5억 7,000만원
- 직접경비 4.5억(여비, 숙박비, 교육경비 등)
- 인건비 0.6억, 일반관리비 0.23억, 이윤 0.23억 등
○ **(추진 경과)** 2024년 3월 조달 절차 시작 → 같은 해 7월 업체 선정 완료 및 계약 체결
○ **(과업 내용)**

1) 구조팀 국내외 출장 행정지원
- 항공권 예약을 위한 여행사 선정, 일정 확인, 항공권 전달 및 지출처리
- 숙소 선정, 예약, 정산
- 보험사 선정, 보험 및 International SOS 가입 의뢰, 비용 정산
- 국외 교육참가비 확인 및 송금
- 국외 출장비 지급 기준 확인 및 금액 산출, 출장비 개별 송금 및 안내
- 국내 장비점검 시 숙소 예약 및 지출
- 정산결과(집행액, 잔액) 및 현안사항 수시 보고 등

2) 구조팀 국내 교육・훈련・워크샵 행정지원
- 지원 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회의 참석
- 숙소 선정, 예약, 정산
- 국내여비 정산 및 개별지급, 결과 안내
- 전문인력 및 업체 섭외(통역, 홍보, 강사 등) 및 정산
- 임차비, 외빈식대 등 정산
- 소모품, 물품 등 구매
- 정산결과(집행액, 잔액) 및 현안사항 보고 등

3) 출장비 정산 및 행정지원 업무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구조팀 대원 및 증빙취합 담당자 대상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 구조팀 행정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 제작 등

4) 결산 및 회계정산 검토 협조
- 협력단 요청자료에 대해 작성 후 회신
- 회계법인 회계정산 검토를 위한 자료 작성·제출 등

(자료: KOICA)

KOICA는 지난해 구조팀 예산 확대로 인하여 행정 소요가 증가됨에 따라 사무국 인력만으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행정지원용역 위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동 사업에서 KDRT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이미 무기계약직 2인 고용 및 3억 5,800만원 상당의 자회사 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코웍스의 인력

또한 KDRT 예산 증액을 사유로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용역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특히, 용역의 주요 과업이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상을 인건비와 이윤 등으로 지급한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긴급대응팀의 현원이 무기계약직 제외 4명으로 정원 8명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KOICA의 정규 인력을 충원하고, 보충적으로 자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KOICA는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지양하여야 하며, 외교부는 보조사업자의 이와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11.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가. 개 요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문화교류 및 대(對) 유네스코[46] 외교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국가 이미지를 확립하고,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을 통해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우호와 신뢰를 제고하여 국익을 증대하는 한편,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및 체계화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1개의 단위사업 및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예산액은 231억 1,000만원이고, 208억 1,200만원이 집행됨.

<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6,111	23,110	23,110	20,812	22,475
	[2631] 공공문화외교 강화			26,111	23,110	23,110	20,812	22,475
		[11] 일반	[401]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2,517	2,693	2,693	2,254	2,423
		[11] 일반	[402]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5,272	2,470	2,470	2,338	2,346
		[11] 일반	[403] 공공외교 역량강화	14,189	16,103	16,103	14,429	15,754
		[11] 일반	[405]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3,519	1,844	1,844	1,791	1,952

46)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

나.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는 양자 간 문화교류 증진, 우리 문화·예술의 대외 홍보 및 유네스코(UNESCO) 등의 다자협력체를 매개로 한 국제적 협력기반 구축을 통하여 우리의 국격 제고 및 정치·경제 등 여타 분야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네스코 등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對) 유네스코 외교강화」, 재외공관에 우리 미술품을 지원·전시하는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등 총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대유네스코 외교강화	1,760	1,760	-	18	-	1,778	1,377	-	401	78.2	77.4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	933	933	-	△18	-	915	877	-	38	94.0	95.8
계	2,693	2,693	-	-	-	2,693	2,254	-	439	83.7	83.7

2024년도 예산액은 26억 9,300만원으로 이 중 22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900만원을 불용함.

□ 대표성 및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성과지표 제시 필요

‘성과지표’란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47]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가지면서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함[48].

동 프로그램의 경우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체계에서 성과지표가 해당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도록 성과지표 개선”이라는 기획재정부 방침[49]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성과계획서[50] 상 성과지표가 변경되었음.

<2021~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행사 참여 공관별 평균 참가자 수(명)	목표	1,800	-	-	-	신규지표로 대체	행사 표본 참가자수/공관 행사 표본 사업 수	자체통계 등
	실적	2,128	-	-	-			
	달성도	118.2	-	-	-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행사 수혜자 만족도(점)	목표	86.5	-	-	-	신규지표로 대체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행사 수혜자 만족도(점)	자체통계 등
	실적	87.09	-	-	-			
	달성도	100.7	-	-	-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 사업 만족도(점)	목표	-	80	86.5	-	신규지표로 대체	('한국주간행사' +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 만족도 조사 결과)/ 3 * 백점 만점으로 환산	현장 설문조사
	실적	-	92.3	92	-			
	달성도	-	115	106.4	-			

47) 2024년도 성과계획서 총괄편, 대한민국 정부, p.11

48)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9)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2024.1., 기획재정부

50)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소프트파워 지수(점)	목표	-	90	90	-	신규지표로 대체	해외 주요기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소프트파워 순위	해외 주요기관 발표 자료
	실적	-	100	80	-			
	달성도	-	111	88.9	-			
공공문화외교 사업 추진 수(건)	목표	-	-	105	-	신규지표로 대체	공공문화외교국의 공공외교 사업 수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 사업 수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실적	-	-	103	-			
	달성도	-	-	98.1	-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사업 만족도(점)	목표	-	80	88	92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조사결과 평균, 만족도 조사 결과 오차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한국주간' 만족도 조사 결과 +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 '디지털 공공외교' 만족도 조사 결과 / 3 * 백점 만점으로 환산	현장 설문조사
	실적	-	92.9	93.9	92.6			
	달성도	-	116.1	106.7	100.7			

(자료: 외교부)

현재 동 프로그램의 유일한 성과지표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사업 만족도'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변경이 필요함.

첫째, 프로그램 내 각 세부사업에 대한 대표성과 포괄성이 부족함. 현행 성과지표는 「공공외교 역량강화」 세부사업 내 내내역사업인 '한국주간행사', 세부사업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디지털 공공외교」[51]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단순 평균 산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동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는 성과지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세부사업 「공공외교 역량강화」의

51) 세부사업명은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이나, 사업지표명은 디지털 공공외교임.

경우 11개의 내내역사업 중 하나만이 반영되어 있음. 집행액의 규모로 보면, 동 프로그램 전체 집행액 208억 1,200만원 중 성과지표에 반영된 것은 99억 7,500만원으로 집행액 대비 47.9%에 불과함.

이에 현행 성과지표는 성과계획서 상 나타난 성과지표 설정의 대표성과 포괄성 측면에서 부족함.

둘째, 현행 성과지표는 정성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 개입 우려 및 산식의 객관성 부족의 문제가 있음.

성과지표는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가능한데, 각 지표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 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반영
사례	- 우량농지조성면적 - 해외건설 수주액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민원인 만족도 -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자료: 2024년도 성과계획서 총괄편

단순 만족도와 같은 정성지표의 경우 위와 같이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특성이 있고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기획재정부는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정량지표로 설정'이라고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과지표는 일부 사업만을 선별하여 비계량지표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중치 없이 단순 평균으로 산출한 것을 내용으로 함. 이러한 방식의 성과지표 설정은 객관적 통계치보다는 주관적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성과지표 도출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으며, 하위지표를 나열하는 형태의 복합지표로서 이를 구상하는 지표간 단위가 상이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 성과가 변동되었는지 쉽게 알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대표성과 객관성을 가지는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공공외교 역량강화」는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분야별 공공외교의 전략적·유기적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및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문화, 지식, 정책 등 3개 연성자산(soft power)을 활용한 공공외교 추진 및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양한 매력 자산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 추진으로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친한 세력으로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통합적 공공외교 메커니즘 운영 및 친한 외국인 기반 구축 사업 등을 통해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외교 전략 및 효율적인 수행체제를 개발하기 위한「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을 통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차세대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등 총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공외교 역량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6,103	16,103	-	-	-	16,103	14,429	14	1,660	89.6

2024년도 예산액은 161억 300만원이었으나 이 중 144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6,000만원을 불용함.

□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정보 시정업무 관리체계 보완 필요

‘외국교과서 개선을 통한 차세대 대상 한국 지식 확산’ 사업은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의 내내역사업으로,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를 통해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고 이를 통해 해외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임.

< 외국교과서 개선을 통한 차세대 대상 한국 지식 확산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368	291	368	331	513	448	487	431	438	433[52]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업하여 2014년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해외 한국 관련 오류시정 및 기술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를 주관하면서 한국 관련 내용 기술 오류 등에 대한 기관별 활동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의 경우 상술한 민관협력위원회 활동 외에도 2003년[53]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54]하고 있으며, 외교부의 최근 공공외교 기본계획[55]에도 외국

52) 2025. 6. 30. 기준으로, 향후 공관 반납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이 있음.

53)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2017.8.10.,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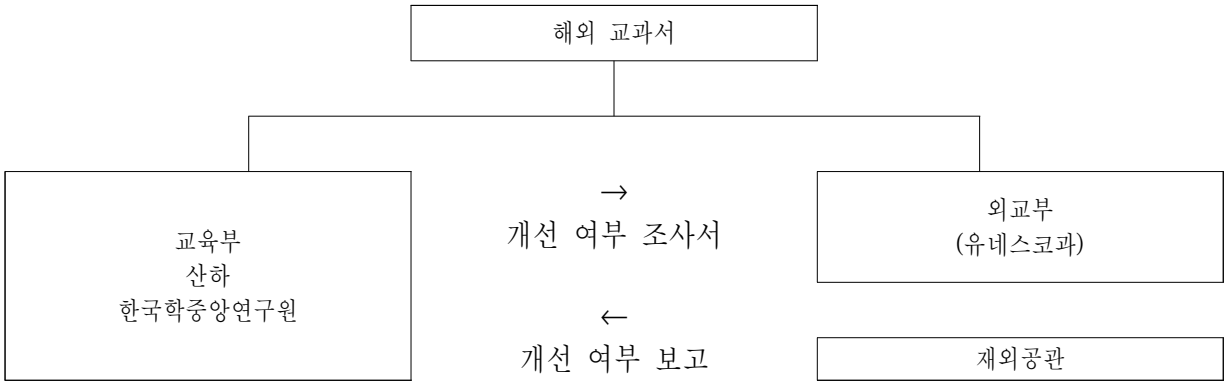
54) 「외국교과서 내 한국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 성과 도출」, 외교부, 2015.12.17.

55) 「제2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2022.8.24., p.25

교과서 등에 나타난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은 중점 추진 과제로 기술되어 있음.

외교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시정 사업」[56]에 협력하고 있는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매년 1회 해외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개선 여부 조사서를 외교부에 송부하여 재외공관이 오류 시정 활동을 하고 개선 여부를 보고하고 있음.

<해외 교과서 관련 오류정보 대응 업무 현황>



※자료: 감사원의 감사보고서[57]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2024년 감사원은 일부 재외공관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서도 외교적인 시정 활동 및 시정결과 회신 등 협조가 미흡하였다는 것을 지적[58]함.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은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중점

56)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시정 사업」명칭하에 기존 오류를 발견·수정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력 중임. 외교부는 이에 더해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사업」을 주관하여 한국 관련 기술 확대를 추진을 통한 국제사회 내 한국에 대한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

57)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2025.4.15., p.69

58)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8개 재외공관(21개 국가 담당)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개선 여부 조사서 관련 오류시정 협조 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 재외공관이 담당하는 국가 중 15개 국가의 교과서에는 "한국은 마약제조국" 등 한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중대한 오류가 서술되어 있었음.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만큼, 향후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오류 시정을 위한 노력을 감독하는 한편, 인력 확충 등 오류 시정을 위한 제반이 각 공관에서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상위 내역사업 목적과 하위 내내역사업간의 정합성 제고 필요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사업은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의 내내역사업으로, 국제사회 주요 이슈를 문화적·사회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담론을 선도하는 문화 공공외교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문화혁신포럼 개최 이후 2020년부터 정례화됨.

동 사업의 상위 내역사업인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의 사업목적은 “연성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 추진 및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양한 매력자산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 추진을 통해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갖는 글로벌 친한 세력으로 양성을 도모”하는 것임.

그러나, 동 사업의 주제 및 행사의 세부 내용은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친한 세력을 도모하는 상위 사업의 목적과 다소 동떨어져 있음.

<연도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주제>

연도	주제
2020	코로나 디바이드: 경계를 넘어
2021	코로나19에 지친 전 세계, 스포츠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2022	메타버스 시대의 기회와 도전
2023	대중문화의 글로벌 가치
2024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글로벌 청년 대화

(자료: 외교부)

2024년의 경우 “기존 세대에 대한 反문화, 개인을 중시하는 이기주의적 특성이 부각 되어온 청년세대 문화의 여러 측면을 논의·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세계적 문제들의 해법과 방향성을 모색”[59]한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행사가 진행되어 “한국의 다양한 매력자산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 추진을 통해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상위 사업의 목적과는 차이를 보였음.

행사 참석자의 경우 유명 프로게이머 및 사진작가,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돌 멤버 등이 참여하여 행사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밝힌 취지에는 맞으나,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호감”의 사업 목적과 행사의 주요 발언내용은 다소 거리가 있었음.

「공공외교법」 제2조는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이라고 공공외교를 정의하고 있어 공공외교의 다양한 폭은 인정이 되나, 동 사업이 상위 내역사업의 목적과는 정합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사의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59) 「2024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행사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외교부, 2024.5.

참고로, 해당 내역사업의 다른 내내역사업의 경우[60] 재외공관에서의 행사, 혹은 특정 국가 및 권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사업 편성 시 동 사업을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거나, 상위 내역사업의 목적과 정합성이 높도록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재외공관의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관행 시정 필요

'친한 외국인 기반구축' 사업은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의 내내역사업으로, 한류동호회, 한국문화단체, 한국전 참전용사, 해외 입양인 등 전 세계 한국 관련 기관 및 친한단체가 자발적으로 주관하는 한국문화 홍보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친한 외국인 기반구축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426	340	495	444	526	462	473	432	426	-

(자료: 외교부)

동 사업은 100여개 공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며, 전체 집행액 중 약 4억 1,357만원이 공관에 지급되었고 외교부 본부에서는 약 1,879만원을 집행함.

60) 한국주간행사, 외국교과서 개선을 통한 차세대 대상 한국 지식 확산, 퀴즈 온 코리아, 정책공공외교 기반 구축, 주요국 대산 정책공공외교 외연확대

그런데, 각 공관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각 공관에서 행사 진행 시 비목에 맞지 않는 집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제출한 각 공관의 동 사업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31개 공관에서 아래와 같이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집행하였음.

<유형별 공관 내 비목에 맞지 않는 일반수용비 집행 현황>

(단위: 미불)

구분	식비로 집행	임차료로 집행	항공운임으로 집행	합계
건수	26건	7건	1건	34건
액수	25,016.67	3,442.49	301.3	28,760.46

(자료: 외교부)

또한, 이러한 예산 집행의 관행은 같은 국(局)내 다른 세부사업인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에서도 일반수용비로 행사에서의 식음료를 구입하거나 차량 등을 임차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재외공관 운영경비에 대하여 “재외공관 활동중 공개 가능한 재외공관 주요행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의 경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소모성 행사물품 구입비, 연주비 등”으로 한하여 규정되어 있음.

또한, 재외공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행사 또는 오·만찬 경비로 사용시에는 집행일자, 장소,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사용계획 및 결과분석’을 첨부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사항은 본 집행지침의 비목별 지침 중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재외공관 역시 그 비목에 맞는 집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는 지급원인행위 및 지출결의가 자금의 교부 목적 및 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61] 또한, 외교부훈령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62]은 예산과목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목(目)에 해당하는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이에 타 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로서 사업추진비와 여비로서 국외업무여비를 운영비인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관행은 시정이 필요함.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의 편성에 있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다소 늘리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비목에 맞게 집행하면서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예산 집행을 도모하여야 함.

---

61) 제33조의2(지금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62) 제9조(목간전용 제한) 재외공관에 교부된 관서운영경비는 당해 예산과목에 따라 장관이 지시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2.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가. 개 요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영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며 1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예산액은 157억 4,400만원이고, 127억 1,100만원이 집행됨.

<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2700]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2,496	15,744	15,744	12,711	14,679
	[2731] 재외국민 보호			12,496	15,744	15,744	12,711	14,679
		[11] 일반	[401] 재외국민 보호	12,496	15,510	15,510	12,117	13,959
		[11] 일반	[402] 영사서비스 지원	-	234	234	594	720

나. 재외국민 보호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 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지원하는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 강화」,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제 유지 및 정비를 위한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대응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운영」,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해외안전정보 전달 및 해외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예방 노력을 위한 「영사조력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등 총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외국민 보호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5,510	15,510	28	△655	-	14,883	12,117	137	2,629	78.1

2024년도 예산액은 155억 1,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2,800만원이 증액, 이·전용으로 6억 5,5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 148억 8,300만원 중 1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6억 2,900만원이 불용되고 121억 1,7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8.1%임.

□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사업 확대 및 내실화 필요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 강화」 사업 내 내내역사업으로,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진단 검사수행 및 분석과 전문가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해외 공관 방문을 통한 고위험군 대상 대면 상담 및 강좌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해외안전 담당 인력의 직무 스트레스 및 정신적 충격(PTSD)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해 인적자원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영사 조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시작되었으며 3년간 실적은 아래와 같음.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사업의 3년간 실적>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전문가 심리상담 케어	47(151회)	56(212회)	52(252회)
지역별 영사담당 회의 계기 상담 및 특강 프로그램	49	116	44
고위험군 케어	267(91회)	155(69회)	221(95회)
공관 맞춤형 상담/강의 프로그램	-	-	74(10회)

(자료: 외교부)

동 사업에 대한 2024년 최종 운영보고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8점[63]으로 전문가 심리상담을 통해 위험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인원의 비율이 일부 감소하기도 하였음. 반면 전문가 심리상담의 경우 8회로 횟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현지 공관을 방문하여 진행되는 고위험군 케

63) 전체 서비스 이용자 347명 중 276명 참여

어의 경우 해당 공관이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1년에 1회로 제한된다는 점에 대한 불만족이 동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64]를 통해 드러났음.

또한, 현재 심리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더라도 이어지는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유사사업으로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경우 해당 센터 심리 상담 후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가진단 결과 고위험인 공무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실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추후 해당 사업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의 수요에 따른 지원 횟수 및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4) 2024년 외교부 해외안전 대응인력 심리상담 지원 최종 운영보고, 외교부, 2024.11.26., pp.14-21

13. 여권업무 선진화

가. 개 요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은 품질 및 보안성이 우수한 여권 발급으로 우리 여권의 국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실무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첨단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 체계를 유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1,410억 3,000만원인데, 여권발급량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수입대체경비 수입액 일부를 지출함에 따라 집행액은 1,588억 9,900만원임.

< 여권업무 선진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900] 여권업무 선진화				109,482	141,030	141,030	158,899	123,893
	[2931]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09,482	141,030	141,030	158,899	123,893
		[11] 일반	[651]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09,482	141,030	141,030	158,899	123,893

나.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은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지원을 통해 대국민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여권의 품질 제고 및 보안성 강화로 국제신뢰도를 향상하려는 사업임.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2024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41,030	141,030	64	18,200	-	159,294	158,899	63	331	112.7
- 여권제조 및 발급	132,606	132,606	-	18,200	-	150,806	150,630	-	167	113.6
-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	7,642	7,642	-	-	-	7,642	7,478	-	164	97.9
- 여권품질 및 서비스 개선	782	782	64	-	-	846	846	63	-	108.2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1,410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400만원과 여권발급량 증가로 인한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182억을 합한 예산현액은 1,592억 9,400만원인데, 이 중 1,588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고, 6,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교육·평가 사업의 동일 수탁기관 수임에 따른 공정성 우려

내내역사업인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위탁운영'은 전국 여권발급기관 및 재외공관의 여권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여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재 및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5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음.

<최근 5년간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위탁운영 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예산	계약 내역				계약 유형	수의계약 사유
		발주금액 (제안요청서 기준)	낙찰액 (계약금액)	수탁 기관	계약기간		
2020	573	573	558	케이티 씨에스	20.1.-21.12	일반경쟁 →수의 장기계속사업 (24개월)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2021	573	573	558	케이티 씨에스	21.1.-21.12		
2022	558	558	558	케이티 씨에스	22.1.-22.12	일반경쟁 장기계속사업 (24개월)	
2023	558	558	546	케이티 씨에스	23.1.-23.12		
2024	558	558	545	케이티 씨에스	24.1.-24.12	일반경쟁 →수의 장기계속사업 (24개월)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2025	558	558	545	케이티 씨에스	25.1.-25.12		

(자료: 외교부)

동 사업은 실무교육 운영과 교재 개발 등 여권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임. 그런데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여권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역시 중복으로 수임한 것이 확인됨.

<최근 5년간 여권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발주금액 (제안요청서 기준)	낙찰액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유형	수의계약 사유
2020년	19	19	한국갤럽	20.10.-20.12.	수의	용역계약 2천만원 이하
2021년	19	19	한국갤럽	21.10.-21.12.	수의	용역계약 2천만원 이하
2022년	19	19	한국갤럽	22.11.-22.12.	수의	용역계약 2천만원 이하
2023년	20	19	케이티씨에스	23.9.-23.11.	수의	용역계약 2천만원 이하
2024년	40	37	케이티씨에스	24.6.-24.10.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23년부터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위탁운영'과 '여권서비스 만족도조사' 두 사업을 모두 동일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여권 실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동일 기간 중 여권 서비스 만족도 평가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교육 효과나 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교육 위탁사업을 장기계속으로 수탁 중인 업체가 동일하게 평가 사업도 수임함으로써, 정책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 저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교육과 평가 간 기능 분리가 미흡할 경우, 정책 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실질적 환류(feedback)가 어려워 여권서비스의 품질 개선 효과가

저하될 수 있음.

이에 외교부는 향후 여권 실무교육과 여권서비스 만족도조사 간 기능적 독립성과 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기관의 중복 수탁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교육과 평가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 경제외교

가. 개 요

「경제외교」 프로그램은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강화하고, 다자경제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 홍보 및 정책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 경제외교 진흥 및 해외진출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이익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경제외교 활동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예산액은 128억 6,000만원이고, 이 중 111억 7,100만원이 집행됨.

< 경제외교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000] 경제외교				10,461	12,860	12,860	11,171	112,566
	[3031] 다자 경제외교 강화			1,611	4,562	4,562	3,875	103,257
		[11] 일반	[401]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1,165	1,395	1,395	1,293	1,557
		[11] 일반	[402]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446	707	707	518	870
		[11] 일반	[403] 2025 APEC 의장국	-	2,460	2,460	2,064	100,830
	[3032] 지역 경제외교 강화			8,850	8,298	8,298	7,296	9,309
		[11] 일반	[401]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6,763	5,381	5,381	4,515	6,549
		[11] 일반	[402] 해외진출기업 활동 지원	2,088	2,917	2,917	2,781	2,760

나.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공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책 및 경제외교 협의 메커니즘 마련 등을 위한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53억 8,100만원이며, 이 중 45억 1,500만원이 집행됨.

<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5,381	5,381	2	△3	-	5,380	4,515	-	865	83.9	83.9

□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직제를 우회한 조직운영 개선 주의 필요 등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 내역사업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23억 2,200만원 중 1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음.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의 모니터링, 분석, 우리 정부의 대응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22년 5월 30일 개소한 조직으로, 경제안보 현안 모니터링·분석을 통한 경제안보 Review 발간, 경제안보외교포럼 개최, 민관합동 전문가 간담회 개최, 유사입장국 싱

크탱크들과의 교류 등 업무를 수행 중임.[65]

경제안보외교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함.

첫째,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모두 공무직 근로자[66]로 구성되어 있는데,[67] 이는 직제상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 수행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적인 책임성을 지니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조직 운영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경제안보 외교센터 조직 현황(현원 기준)>

구분			인원	비고
센터장			1명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이 겸임
연구원	공무직	가급	2명	
		나급	6명	
		다급	1명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계약직		4명	미국,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계			14명	

※주: 2025. 6월 말 기준

구체적으로 채용 절차와 성과관리 등 인사 체계 전반에 있어 공무직과 공무원은 차이가 있는데,

채용 절차의 경우 공무원은 직렬 등에 따라 일부 상이하긴 하나 「국가공

6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⑨ 경제안보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운영**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의 관리

66)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67) 재외공관 전문관 제외

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 등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공무직의 채용은 소속 기관의 행정규칙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 등 공무원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됨.[68]

또한 공무직은 복종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등의 규정[69]을 적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안보센터 소속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음.

외교안보연구센터와 같이 연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인 '국립외교원'이나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도 공무직으로만 구성되어 과를 운영하는 사례는 없으며, 전문적 분야의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직제를 개정하여 정원을 증원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을

---

68)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채용) ① 근로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채용하며, 채용예정인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유사직종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3. 채용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해지, 선발취소 등에 대해 예비 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⑤ 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심사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위촉하며, 보안유지, 제척사유에 대한 회피, 공정한 시험관리 등을 위해 별지7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69)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보충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이와 같은 형태는 시정이 필요함.

둘째, 경제안보외교센터 공무직 인력이 외교부 본부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경제안보외교센터의 공무직 인원 9명 중 6명은 외교부 본부에, 나머지 3명은 광화문에 위치한 사무실에 근무 중임.

광화문 사무실 임차를 위하여 2024년 1년 동안 약 1억 5천만원의 임차료가 집행되었는데, 상근 인원 및 조직 관리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별도 건물 임차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음.[70]

또한,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센터장인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교부가 동 센터의 역할을 '주요국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분석을 통하여 외교정책 수립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외교부 본부 내에 위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청사의 유휴 공간이 마련될 시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청사 내 입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부진

외교부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70)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동 센터 명의의 회의실이나 전용 공간이 외교부 청사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제안보외교센터가 각종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별도 건물 임차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임.

진출 및 공급망 협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경제안보전문관을 채용하고 있음.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관련 2024년도 예산액은 5억원이며, 집행액은 2억 5,900만원임.

그런데 동 사업 예산이 일용임금(110-04) 비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고 있고, 미국 이외 지역의 경우 외국 국적자만 채용이 가능한 한계가 있음[71]. 또한, 인력 충원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인원인 6명 중 일부만 채용된 상태로, 2024년에는 미국(워싱턴),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 각 1명씩 총 4명이 채용되어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였음.

<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현황 >

연번	이름	근무기간	공관명	학위
1	A	25.04.28.-근무중	주미국(대)	국제학 학사
2	B	24.01.08-24.12.31		국제관계학 석사
3	C	23.04.03-23.10.30		정책학석사
4	D	24.03.25-근무중	주애틀랜타(총)	공공정책 및 개발학 석사
5	E	22.11.28-23.11.27		국제안보학 석사
6	F	23.09.01-근무중	주인도(대)	영문학 석사
7	G	22.11.28-23.11.27	주타이베이(표)	동아시아학과 석사
8	H	24.01.01-근무중	주네덜란드(대)	국제관계학 석사
9	I	22.11.24-23.11.23	주베트남(대)	정치국제관계학 석사

※주: 2025. 6월 말 기준

(자료: 외교부)

이와 같은 인력 운용으로는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보 수집·축적 및 전문성 확보 측면에 한계가 있고, 외교부의 경제안보 역량 증대라는 중장기적인 전략

71) 미국 공관의 경우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주권자도 가능한 상황임.

추진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전문적인 경제안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비목 변경을 비롯한 사업 방식 전반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외교 관련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 필요 등

동 세부사업에는 ① 「중국 경제동향 대응」 내역사업에서 중국 내의 10개 공관에서 경제안보 현안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산 2억 1,400만원과 ② 「전략국가와의 경제외교 강화」 내역사업에서 일본 대사관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예산 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중국 내 공관과 일본 대사관을 통하여 수행하는 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양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① 중국 내 공관을 통한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 2억 1,400만원 중 1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47.2%였으며, ② 일본 대사관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사업은 예산 1억 4,8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9.2%임.

상세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① 중국 내 경제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는 주중국대사관, 주선양총영사관, 주시안총영사관, 주우한총영사관 등 6개 공관에서 유관부처와의 협력, 업계 접촉, 진출 기업 대상 법률 설명회, 전문가 면담 등을 실시하였음.

다음으로 ② 주일본대사관의 경제외교 사업에서는 한일 경제포럼 개최 및 각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의 등을 실시하였음.

양 사업의 집행이 미흡한 사유에 대하여 외교부는 여비 집행 저조, 임차료 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는데, 향후 공관의 사업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분기별 집행 현황 점검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국 내 공관을 통한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국 경제동향 대응」 내역사업 사업은 동 세부사업 내의 다른 내역사업인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과 그 성격이 유사·중복적인 측면이 있음.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은 중국의 공관을 중심으로 중국 지방정부와 정례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양 사업은 경제외교 관련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국익 증진을 한다는 점에서 그 목표에 유사성이 있으며, 중국 정부 등 유관부처와의 접촉,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간담회 등 그 사업 방식에도 유사성이 존재함.

예를 들어, 「중국 경제동향 대응」 내역사업에서 '후베이성 진출 한국기업과의 간담회(주우한총영사관)'를 실시하였는데,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내역사업에서도 지역이 상이할 뿐 '화남지역 진출 주요 지상사 등

기업 간담회(주광저우총영사관)'를 실시하는 등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두 개의 상이한 내역사업에서 중복하여 집행되고 있음.

< 중국 내 재외공관을 통한 경제외교 관련 사업 비교 >

내역사업 명	중국 경제동향 대응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 목적	중국 내 경제입법 및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재외공관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진출 적극 지원
추진 주체	주중국대사관 및 중국 공관	주중국대사관 및 중국 공관
주요 활동	유관부처 접촉, 전문가 면담, 진출기업 간담회 등	유관부처 접촉, 한국 기업 박람회 · 홍보관 등 지원, 진출기업 간담회 등
유사 사례	후베이성 진출 한국기업 간담회 (주우한총영사관)	화남지역 주요 기업 간담회 (주광저우총영사관)
예산 (2024년 기준)	2억 1,400만원 *중국 내 자문회사 계약 예산 제외	3억 5,100만원 *한중 우호주간 예산 제외

이와 같이 양 사업의 목적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국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그 목표가 동일하며, 사업 방식과 수혜 대상 측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사업의 성과 관리를 어렵게 하는바, 사업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내역사업 간 통합·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5.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가. 개 요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프로그램은 글로벌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및 기술패권 경쟁 시대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개, 다자환경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 참여 및 북극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북극 진축 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하며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예산액은 98억 600만원이고, 103억 8,600만원이 집행됨.

<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3100]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4,244	9,806	9,806	10,386	2,698
	[2131] 에너지외교 및 기후변화녹색성장 국제협력강화			4,244	9,806	9,806	10,386	2,698
		[11] 일반	[401]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4,244	9,806	9,806	10,386	2,698

나.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는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녹색성장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글로벌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등으로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하는 「공관 에너지협력 외교활동」과 「에너지 및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과학기술외교 추진을 통해 국제 과학기술지형 변화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외교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노력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 외교강화」, 대기오염 등 동북아 환경 현안의 외교적 대응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저탄소경제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다자환경 이슈의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북극권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북극 국제협력 강화」등 총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공관에너지협력 외교활동	1,497	1,497	-	-	-	1,497	1,355	-	142	90.5	90.5
에너지 및 광물분야 국제협력 강화	707	707	-	△704	-	634	494	-	140	69.9	77.9
과학기술 외교강화	1,809	1,809	-	△706	-	1,103	909	-	194	50.2	82.4
기후변화 외교강화	642	642	-	△188	-	454	416	-	37	64.8	91.6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152	152	-	△80	-	72	55	-	17	36.2	76.4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4,819	4,819	-	2,481	-	7,300	7,053	-	247	146.4	96.6
북극 국제협력 강화	180	180	-	△53	-	127	104	-	23	57.8	81.9
계	9,806	9,806	-	1,380	-	11,186	10,386	-	800	105.9	92.8

2024년도 예산액은 98억 600만원에서 이·전용으로 13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11억 8,600만원이며 103억 8,6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105.9%임.

□ 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저탄소경제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 녹색·환경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다자환경이슈의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48억 1,900만원이었으나, 70억 5,300만원이 집행되었음.

동 사업은 하위 내내역사업의 집행률이 대부분 연례적으로 부진하며, 특정 내내역사업은 초과집행이 수차례 발생하여 이미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72]된 바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녹색 경제 관련 다자협력	46	22	47.8	46	38	82.6	46	45.2	98.3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참여	31	160	516.1	31	61	196.7	92	177.7	193.2
녹색성장주간행사 개최 지원	48	7	14.6	48	25	52.1	42	-	-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운영	75	40	53.3	75	65	86.7	75	45	60.0
해외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환경시장개척 지원	62	0	0	62	26	41.9	-	-	-
그린라운드테이블	50	32	64.0	50	36	72.0	50.5	34.5	68.3
P4G 이사회 의장국 활동 및 참여	120	28	23.3	120	40	33.3	40	11	27.5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5)	-	-	-	-	-	-	4,473	6745.9	150.8
합 계	**432**	**289**	**66.8**	**432**	**291**	**67.4**	**4,819**	**7,053**	**146.4**

72)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외교통일위원회, 2024.8.

2023년도 예산의 경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5)’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참여’ 사업을 통해 이미 초과 집행하였음. 이에 “회의 참석·개최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하게 발생한 예산 소요로 보이지 않는바 편성 단계부터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2024년에는 44억 7,3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액 부족분 22억 7,290만원을 다른 내내역 사업의 감액 등을 통해 조달하였음.

이에 외교부는 INC-5 개최에 앞서 전차 행사(INC-4) 참석, 국제 동향 파악 및 INC-5 개최를 위한 회기간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출장 소요 증가로 최초 배정된 예산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INC-5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로 인해 동 세부사업에서 기존보다 감액된 내내역사업이 아래와 같이 20개, 감액 총액이 11억 3,100만원이며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6개에 이르는 것은 기존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INC-5 개최 및 운영을 위해 기존보다 감액된 내내역사업 목록 >

(단위: 백만원)

내내역명	본예산	감액규모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55	9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활동 지원(기후협력센터)	279	36
한미우주포럼개최	285	252.2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운영	83.2	50.6
과기외교 전략국/국제기구와의 정책공조	175	70
국제과기외교포럼 개최	404.8	290
과기 거점공관 과기외교 사업 추진	661	63.2
기후변화협상 진전을 위한 우리 입장 제고 활동	200	108
NEASPEC 등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22	3
한·미, 한·중, 한·일, 한·러 환경협력공동위 등 참여	40	20
탄소중립 국제협력 강화	88	36
동북아 해양환경협력 강화	72	20
P4G 이사회 의장국 활동 및 참여	40	9
그린라운드테이블	50.5	11
녹색 경제 관련 다자 협력	46	16
북극회의 참여 및 개최	180	104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포럼	100	50
대기오염 대응 국제공조 제고 활동	52	23
유엔 기후변화협상회의 참석	220	13
지속가능발전목표(환경-해양) 이행 참여	92	1

(자료: 외교부)

따라서 외교부는 특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을 지나치게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편성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 관행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16.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가. 개 요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및 비전 제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회의 개최, 외교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무공무원의 역량검증 및 개발, 외교인재 양성을 위한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 및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159억 6,400만원이며, 130억 5,700만원이 집행됨.

<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500]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2,524	15,964	15,964	13,057	14,945
	[3531] 외교전략 연구 및 교육훈련			11,456	13,051	13,051	11,102	12,388
		[11] 일반	[401]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2,793	3,498	3,498	2,880	3,304
		[11] 일반	[402] 국내외 교육훈련	6,723	7,433	7,433	6,252	7,132
		[11] 일반	[403] 외교역량 평가 및 개발교육	394	463	463	427	417
		[11] 일반	[404]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387	414	414	400	393
		[11] 일반	[405]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904	1,059	1,059	970	959
		[11] 일반	[407] 국민 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255	184	184	173	183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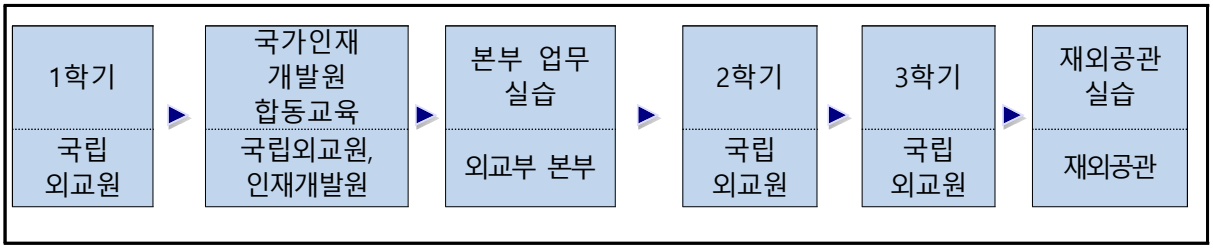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532] 외교전략 수립			1,068	2,913	2,913	1,955	2,557
		[11] 일반	[401]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	1,068	1,067	1,067	780	1,067
		[11] 일반	[402]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	846	846	389	100
		[11] 일반	[403]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	1,000	1,000	786	1,390

나.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73] 강화」 사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임 외교인력 양성과 원활한 외교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의 공직 소명의식을 높이고, 외교역량과 전문성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재외공관에서의 실습을 통해 정무·경제·외교·영사 등 현장맞춤형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있음[74].

2024년도 예산액은 10억 5,900만원이었으며, 9억 7,000만원이 집행됨.

73)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Ⅱ-1)



74) 2024년도 재외공관 현장실습은 상반기(4.22.~5.11.)에 외무영사직 교육생(7급 상당) 34명을 대상으로, 하반기(11.11.~11.29.)에는 외교관후보자(5급 상당) 44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함.

<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1,059	1,059	-	-	-	1,059	970	-	89	91.6
-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579	579	-	△37	-	542	461	-	81	79.6
- 재외공관 현장실습	480	480	-	37	-	517	509	-	8	106.0

□ 재외공관 현장실습 관리·감독관 출장비 집행의 정상화를 통한 필수적 교육관리 기능 회복 필요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외교관후보자 및 신임 외무영사직 공무원 교육과정은 크게 국내 교육과 해외 재외공관 현장실습으로 구성됨.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강사료 등을 포함한 국내 교육과정 운영비용과 해외 실습에 소요되는 국외교육여비 등으로 구분됨.

외교원은 2024년 교육생 증가(73명→78명)와 항공료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국내 현장학습 여비와 재외공관 현장실습 비용의 부족이 예상되자, 같은 세부사업 내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강사초청', '해외우수 외교관훈련기관 벤치마킹' 및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 사업의 여비 중 6,000만원을 세목 조정을 통해 추가로 마련하였음.

이로 인해 세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0%, 16%, 5.9%에 그침.

이에 대해 외교원은 2022~2023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출장 제한

과 2024년 환율·항공료 상승으로 인한 여비 부족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목 조정 등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면서, 교육생 인원의 증가와 환율 및 항공료 상승 등으로 인해 여비 소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환율 및 항공료 상승 등의 외부 변수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생 수의 증가는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그에 영향을 미치는 '입교유예'는 합격자의 학년 등 객관적 정보를 통해 사전에 일정 수준 파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 및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해외 우수 외교관 훈련기관 벤치마킹' 사업 등 다른 사업 또한 미실시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함.

특히,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은 교육생의 실습을 관찰·지도하고, 교육생 및 실습 멘토와의 면담을 통해 실습 현황을 점검하며, 공관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사업인데, 최근 3년간 해당 출장비의 집행 실적이 1건에 불과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관 여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명)

연도	내역	편성액	집행 세부 내역		
			인원(직급)	장소/일자	집행액
2022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	17	-	-	-
2023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	17	-	-	-
2024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	17	1 (행정관)	중국 칭다오 4.28.-4.30.	1

동 사업은 교육의 질 관리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이를 대폭 축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향후에는 교육생 인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재외공관 현장실습 관리·감독관 출장비 집행의 정상화를 통해 필수적 교육관리 기능이 회복되어야 할 것임.

17. 재외공관 운영

가. 개 요

「재외공관 운영」 프로그램은 외교부 재외공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용과 제반 공관 운영에 필요한 재외공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대(對) 테러 보안시설 설치 및 강화를 통한 안전 도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동 프로그램은 5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예산액은 7,763억 9,400만원이고, 이 중 7,447억 6,500만원이 집행됨.

< 재외공관 운영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4000] 재외공관운영				712,023	776,394	776,394	744,765	801,182
	[4001] 재외공관 인건비			264,524	284,188	284,188	274,222	299,243
		[11] 일반	[101] 재외공관 인건비	264,524	284,188	284,188	274,222	299,243
	[401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94,135	144,805	144,805	141,154	148,954
		[11] 일반	[25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94,135	144,805	144,805	141,154	148,954
	[4012] 재외공관 운영			21,409	21,000	21,000	20,524	22,099
		[11] 일반	[251]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17,151	17,063	17,063	16,663	18,042
		[11] 일반	[252]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4,258	3,937	3,937	3,861	4,057
	[402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84,858	208,655	208,655	192,743	224,367
		[11] 일반	[40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84,858	208,655	208,655	192,743	224,367
	[4031] 재외공관 안전확보 및 시설개선			47,098	117,746	117,746	116,122	106,519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01]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27,244	28,180	28,180	24,706	5,926
		[11] 일반	[402] 재외공관 안전강화	19,853	23,466	23,466	22,930	25,082
		[11] 일반	[405] 재외공관 업무환경 개선	-	66,100	66,100	68,486	75,511

나.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사업은 재외공관 근무자들에 대한 정착지원금, 차량보험료, 신변안전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관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2024년 예산액은 170억 6,300만원이며 이 중 166억 6,300만원을 집행함.

<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17,063	17,063	84	1,358	-	18,505	16,663	-	1,842	97.7	90.0

□ 정착지원금 근거 규정 마련 필요 등

외교부는 재외공관 부임직원의 부임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정착지원금은 특수지 공관과 비특수지 공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됨.

2024년에는 '가'공관 21명, '나'공관 48명, '다'공관 70명, 나머지 비특수지 공관 443명에 대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가' 공관은 인당 $4,000, '나'와 '다' 공관은 $3,000, 비특수지 공관은 $2,000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총 17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정착지원금 집행 현황 >

구분	인당 정착지원금액 (미불)	인원 (명)	종 지출액 (미불)	종 지출액 (백만원)
'가' 공관	4,000	21	84,000	113
'나' 공관	3,000	48	144,000	193
'다' 공관	3,000	70	210,000	280
비특수지	2,000	443	886,000	1,188
계		512	1,114,000	1,774

※ 주: 급지 구분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와 동일함.

(자료: 외교부)

정착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정착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소요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공무원 개인에 대한 금전 지급 성격이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 차량보험료 지원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75]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동 수당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목조정이나 전용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정착지원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착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세목조정, 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음.

< 최근 5년간 정착지원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0	1,727	△226	1,501	1,464	37
2021	1,871	-	1,871	1,485	386
2022	1,512	199	1,711	1,704	7
2023	1,671	177	1,848	1,841	6
2024	1,671	126	1,797	1,796	1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여 정착지원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75)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0조(개인차량의 공적 사용)** ① 공관의 공용 차량 운용 관리 여건 상 공관원이 개인차량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차량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상기 제1항, 제2항의 '개인차량 공용 사용비'와 '차량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은 재외공관 외교활동 수행의 필수 지원인력인 행정직원을 위한 인건비, 교육훈련, 전지의료검진비, 외국적 행정직원 방한연수, 이부임여비 등의 예산 확보를 통하여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2,086억 5,500만원이었으며, 이 중 1,927억 4,300만원을 집행함.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208,655	208,655	-	△4,086	-	204,569	192,743	-	11,826	92.4	94.2

□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력 운용 개선 필요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정직원 정원은 2021년 3,467명에서 2025년 5월 초 3,52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원되고 있음.

또한, 행정직원 기본급도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인상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음. 2025년 행정직원 기본급은 3.05% 인상되었음.

<행정직원 기본급 인상 현황 >

(단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상율	1.1	1.5	1.8	2.5	3.05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2023년 결산 시정조치에 대하여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 재외공관 증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시정조치 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 필요	○ [지적사항]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 필요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과 인건비 현실화 및 주거보조비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 개선	○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오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기본급 2.9% 인상 및 △60여 개 공관 주거보조비 인상, △행정직원 운영지침 상 기본급 초임 인상 등의 처우개선 조치를 시행하였음. 또한, 금년 대비 2025년 정원이 23명 증원되었으며, 7.5% 예산 증액을 통해 내년도 처우 개선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 완료

그럼에도 매년 100명 규모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 충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는 99명, 올해 5월 기준으로는 100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음.

< 재외공관 행정직원 최근 5년간 정/현원>

(단위: 명)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5.8. 기준
정원(A)	3,467	3,484	3,489	3,502	3,525
현원(B)	3,373	3,383	3,378	3,403	3,425
결원(A-B)	94	101	111	99	100

※주: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외교부)

이와 같은 결원은 행정직원 근속연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8.7년에 불과하여 퇴직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석을 대체하기 위한 채용 소요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상시적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 재외공관 행정직원 평균 근속연수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근속년수	7.9년	8.7년	8.6년	8.6년	8.7년

(자료: 외교부)

2024년 기준 행정직원 교체채용 공관 수는 151개로 전체 공관 수 173개의 87.3%이며, 교체된 행정직원은 490명에 달함.

< 공관별 행정직원 교체채용 현황 >

지역	교체채용 공관 수 (개소)	교체채용 직종 및 인원 수(명)	
북미	15	전문직	3
		일반직	49
		관저요리사	3
중남미	15	전문직	3
		일반직	39
		관저요리사	7
유럽	30	전문직	10
		일반직	102
		관저요리사	10
중앙아시아	4	전문직	2
		일반직	14
		관저요리사	2
아시아	50	선임연구원	2
		전문직	6
		일반직	133
		관저요리사	16

지역	교체채용 공관 수 (개소)	교체채용 직종 및 인원 수(명)	
아프리카	19	전문직	3
		일반직	37
		관저요리사	8
중동	18	전문직	2
		일반직	30
		관저요리사	9
총계	151	-	490

(자료: 외교부)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매년 인건비의 전용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의 경우 행정직원 상용임금과 고용부담금이 각각 약 90억원과 18억원 불용되었음.

< 최근 5년간 행정직원 인건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본예산 (A)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2020	상용임금	156,833	△18,800	138,033	137,110	923	87.4
	고용부담금	10,273	△4,000	6,273	6,075	198	59.1
2021	상용임금	170,998	△1,340	169,658	148,990	20,668	87.1
	고용부담금	11,113	-	11,113	7,538	3,575	67.8
2022	상용임금	170,998	△650	170,348	164,551	5,797	96.2
	고용부담금	11,113	-	11,113	9,425	1,688	84.8
2023	상용임금	185,724	△7,000	178,724	171,240	7,484	92.2
	고용부담금	11,440	△1,210	10,230	9,883	347	86.4
2024	상용임금	192,655	△2,728	189,927	180,880	9,047	93.9
	고용부담금	11,886	△1,383	10,503	8,636	1,867	72.7

(자료: 외교부)

따라서 행정직원 증원 및 처우개선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

록 근속연수가 짧고 교체가 잦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력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임.

18. 외교행정지원

가. 개 요

「외교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외교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운용과 제반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외교정책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외에 외교정보화, 정책연구개발, 본부 및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업무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2024년도 기준, 8개의 단위사업 및 6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은 2,172억 6,800만원이고, 이 중 2,127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외교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7000] 외교행정지원				213,435	217,268	217,268	212,727	235,305
	[7001] 본부인건비			87,730	94,669	94,669	90,218	97,277
		[11] 일반	[101] 본부 인건비	87,730	94,669	94,669	90,218	97,277
	[7002] 소속기관 인건비			8,573	9,064	9,064	9,258	9,403
		[11] 일반	[101] 국립외교원 인건비	8,573	9,064	9,064	9,258	9,403
	[7011] 본부 기본경비			44,733	44,704	44,704	45,217	50,261
		[11] 일반	[20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9,520	10,072	10,072	9,364	10,757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202] 국가외교통신 운영(총액)	17	19	19	21	19
		[11] 일반	[203] 의전장실 기본경비(총액)	31	32	32	21	33
		[11] 일반	[204] 국제기구국 기본경비(총액)	31	32	32	36	31
		[11] 일반	[205] 외교전략기획관실 기본경비(총액)	17	20	20	17	19
		[11] 일반	[206]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총액)	23	35	35	18	35
		[11] 일반	[207] 북미국 기본경비(총액)	30	41	41	34	43
		[11] 일반	[208] 북핵외교기획단 기본경비(총액)	23	24	24	20	35
		[11] 일반	[209] 중남미국 기본경비(총액)	18	24	24	14	24
		[11] 일반	[210] 유럽국 기본경비(총액)	29	28	28	30	25
		[11] 일반	[211]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총액)	34	41	41	31	34
		[11] 일반	[212] 국제법률국 기본경비(총액)	21	24	24	20	24
		[11] 일반	[213]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총액)	27	32	32	25	32
		[11] 일반	[215] 영사안전국 기본경비(총액)	26	35	35	32	34
		[11] 일반	[216] 여권발급 기본경비(총액)	154	173	173	172	173
		[11] 일반	[217] 국제경제국 기본경비(총액)	18	18	18	18	18
		[11] 일반	[218]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총액)	34	29	29	22	33
		[11] 일반	[219]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총액)	24	27	27	26	25
		[11] 일반	[220] 개발협력국 기본경비(총액)	40	39	39	29	39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221] 아세안국 기본경비(총액)	28	30	30	28	30
		[11] 일반	[222] 평화외교기획단 기본경비(총액)	24	24	24	20	0
		[11] 일반	[223] 원자력비확산외교 기획관실 기본경비(총액)	18	24	24	21	25
		[11] 일반	[224]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총액)	34	33	33	29	33
		[11] 일반	[225] 외교정보기획국 기본경비(총액)	-	0	0	6	18
		[11] 일반	[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24,458	22,303	22,303	23,186	27,266
		[11] 일반	[252] 국가외교통신 운영	3,003	3,980	3,980	3,815	4,047
		[11] 일반	[253] 의전장실 기본경비	460	329	329	2,205	325
		[11] 일반	[254] 인천공항연락실 운영	72	74	74	77	74
		[11] 일반	[255] 국제기구국 기본경비	433	508	508	380	415
		[11] 일반	[256] 외교전략기획관실 기본경비	598	503	503	454	518
		[11] 일반	[257]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	215	234	234	188	230
		[11] 일반	[258] 북미국 기본경비	169	242	242	154	279
		[11] 일반	[259] 북핵외교기획단 기본경비	106	138	138	61	210
		[11] 일반	[260] 중남미국 기본경비	208	254	254	181	290
		[11] 일반	[261] 유럽국 기본경비	437	427	427	317	411
		[11] 일반	[262]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	321	347	347	311	375
		[11] 일반	[263]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578	712	712	623	261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264]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	429	502	502	356	485
		[11] 일반	[266] 영사안전국기본경비	313	336	336	259	398
		[11] 일반	[267] 여권발급 기본경비	858	915	915	912	902
		[11] 일반	[268] 국제경제국 기본경비	203	202	202	179	206
		[11] 일반	[269]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	400	440	440	308	486
		[11] 일반	[270]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	244	276	276	215	274
		[11] 일반	[271] 개발협력국 기본경비	310	318	318	280	344
		[11] 일반	[272] 아세안국 기본경비	166	272	272	170	265
		[11] 일반	[273] 평화외교기획단 기본경비	117	160	160	101	-
		[11] 일반	[274]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기본경비	132	166	166	150	251
		[11] 일반	[275]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	169	210	210	199	216
		[11] 일반	[276] 외교정보기획국 기본경비	-	0	0	82	194
	[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			6,666	7,043	7,043	6,562	7,231
		[11] 일반	[20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총액)	2,381	2,588	2,588	2,437	2,653
		[11] 일반	[25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4,285	4,455	4,455	4,126	4,578
	[7031] 외교 정보화			44,111	36,662	36,662	36,582	47,020
		[11] 일반	[501]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20,225	20,882	20,882	19,739	22,049
		[11] 일반	[502]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정보화)	10,684	10,989	10,989	12,151	9,916
		[11] 일반	[504] 재외공관 회계 및 행정업무 고도화(정보화)	7,131	2,125	2,125	2,124	1,801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505] D.N.A 기반 외교업무환경 지능화(정보화)	4,313	2,666	2,666	2,569	13,254
	[7032] 외교정책연구(R&D)			401	356	356	355	338
		[11] 일반	[401] 정책연구개발	401	356	356	355	338
	[7033] 외교활동 업무지원			19,718	22,502	22,502	22,468	21,734
		[11] 일반	[401] 외교네트워크 구축	4,628	5,472	5,472	6,611	5,325
		[11] 일반	[402]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6,770	7,649	7,649	6,894	7,445
		[11] 일반	[403]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379	1,802	1,802	1,139	1,617
		[11] 일반	[404]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 대응	2,807	2,303	2,303	2,914	2,188
		[11] 일반	[405] 대한민국 외교사료집 편찬	317	301	301	294	286
		[11] 일반	[406] 외교타운 안전정비사업	884	900	900	655	500
		[11] 일반	[408]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3,933	4,075	4,075	3,962	4,373
	[7034] 외교정책 대내외 이해제고			1,503	2,268	2,268	2,067	2,041
		[11] 일반	[401] 외교홍보역량강화	1,503	2,268	2,268	2,067	2,041

나. 기관운영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외교부 본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공무직 보수를 포함한 행정지원 경비, 기획조정실·대변인실·감사관실 등의 운영 기본경비 등임.

<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32,375	32,375	131	1,493	-	33,997	32,550	209	1,239	95.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7011-201)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1)의 합산액

2024년도 예산액 323억 7,5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 3,100만원 및 이·전용액 14억 9,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9억 9,700만원 중 2억 900만원은 이월되고 12억 3,9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325억 5,000만원은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7%임.

□ 연례적 예산변경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집행계획 마련 필요

외교부는 2024년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 국외여비로 11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을 초과한 148억 4,7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예산액의 28.4%인 32억 8,900만원이 부족하여 예산 전용과 다른 사업의 국외업무여비의 내역변경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국외업무여비 예산 초과의 주요 요인은 재외공관 발령 직원의 이부임 항

공료, 이전비 등 교체여비의 증가에 따른 것임. 2024년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부족분은 35억 2,000만원으로, 3차례에 걸친 예산 전용(26억 4,400만원), 기존 여비의 내역변경(5억 5,600만원), 세목변경 등으로 충당하였음.

< 교체여비 관련 국외업무여비 전용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조정 세부사업	금액
자체전용	12.9.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9개 사업	1,400
승인전용	12.27.	본부 인건비 등 1개 사업	800
자체전용	12.30.	국가외교통신 운영 등 6개 사업	444
내역변경	12.30.	국제국 기본경비 등 14개 사업	556
합 계			3,200

(자료: 외교부)

2024년의 경우, 국제물류 불안 요소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해 교체여비 지원기준액이 인상된 점[76], 환율 인상에 따른 환차손 발생, 편성인원 대비 실제 이동 인원 간의 차이[77] 등이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상승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 2024년 교체여비 편성액 대비 집행액 현황 >

편성액	집행액
104억원	139억원
항공료: 1,500명 x 3.63백만원 = 54.5억원 이전비: 580명 x 8.19백만원 = 47.5억원 일 비: 1,500명 x 0.09백만원 = 1.3억원 준비금: 100명 x 0.95백만원 = 1.0억원	항공료: 2,223명 x 1.79백만원 = 39.7억원 이전비: 842명 x 11.7백만원 = 98.2억원 일 비: 2,223명 x 0.05백만원 = 1.1억원 준비금: 120명 x 0.3백만원 = 0.4억원

(자료: 외교부)

76) 2024년 상반기 홍해 사태, 파나마운하 가뭄 이슈로 우회 통항 및 물류 처리 지연이 발생하여 해운비용이 상승됨.

77) 국외이전비 편성인원은 580명이나 실제 이전비 지급대상자는 842명임.

그러나,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관련 예산이 실집행액에 대비하여 상당 부분 부족하게 편성되어 이전용을 통한 예산 충당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국회에서도 교체여비의 과소편성에 따른 연례적인 예산변경에 대하여 지적해왔음.

< 연도별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부족액(B-A)	부족률[(B-A)/A]
2020	7,880	10,029	2,149	27.3
2021	7,804	11,749	3,945	50.6
2022	8,105	14,996	6,891	85.0
2023	9,736	14,946	5,210	53.5
2024	10,417	13,937	3,520	33.8

(자료: 외교부)

이에 대해 외교부는, 그간 이·부임 관련 교체여비 등 부족현상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업무여비의 대폭적인 증액에 한계가 있어 예산 이전용 등이 불가피하였으나,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 및 예산 당국과의 적극적인 예산증액 협의로 2025년의 경우 교체여비를 예년 대비 상당 규모로 증액[78]함에 따라 과도한 이·전용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설명함.

향후 외교부는 동 사업 예산에 대한 면밀한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이전용 등 예산변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액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78) 2025년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는 139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6% 증가한 35억원이 증액 편성됨.

다.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함)은 외교관 후보자 및 재외공관 직원 등 대한민국의 외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정세 및 외교 환경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외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분석을 제공함.

외교원 내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 연구를 담당하는 '외보안보연구소'와, 외교 관련 정보자원을 수집·제공하여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국립외교원 도서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국립외교원의 '학술지 구독' 및 '온라인 DB 구독' 계약 체결 및 집행 시 법령 및 지침 준수와 공정성·효율성 제고 필요

외교원 도서관은 해외학술지의 신속·연속적인 구독을 통해 최신 연구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외교·안보 분야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해외간행물 및 온라인 자료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교원은 2023.11.27. 조달청 나라장터에 계약방법을 소액수의견적제출[79]로 한 '2024년도 해외학술지 구독 대행'[80]입찰 공고문을 게시하

---

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가목7), 같은 호 마목·사목· 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였으며, 2023.11.30. 개찰을 실시하여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엘아이에스코리아와 2023.12.6.에 계약을 체결함.

소액수의(少額隨意) 견적제출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이는 일반적인 '수의계약'과 달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해외)학술지·간행물 및 온라인자료 구독 관련 지출내역 >

건명	비목	계약업체	계약 방법	자금이체일	자금이체액 (지출결의액, 원)
해외간행물 구독료 집행 (wall street journal, 인민일보, Le Figaro)	일반 수용비	㈜엘아이에스 코리아	수의	2024-01-16	2,689,800
온라인 DB 구독료 집행 (Stratfor Worldview)			수의	2024-01-17	6,930,000
온라인 DB 구독료 집행			**수의**	**2024-01-17**	**86,248,500**
해외학술지 구독 대행			**소액수의**	**2024-01-18**	**94,900,000**
해외간행물 구독계정 추가 집행 (Economist 외 2종)			수의	2024-02-05	2,504,820
해외간행물 구독료 집행 (LE MONDE)			수의	2024-03-07	275,000
온라인DB 구독료 집행 (Devex Pro)			수의	2024-04-19	2,093,380
온라인 자료 그룹구독료 집행 (New York Times)			수의	2024-06-19	3,095,36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80) 소요예산 : 약 96,621,266원 (US$71,704.09, 부가가치세 포함)

건명	비목	계약업체	계약 방법	자금이체일	자금이체액 (지출결의액, 원)
온라인 DB 구독료 집행 (WORLD POLITICS REVIEW)			수의	2024-07-29	249,200
해외간행물 구독료 집행 (Financial Times)			수의	2024-11-25	2,923,49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지출결의대장, ㈜엘아이에스코리아 기준)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해외학술지 구독 대행' 계약의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는 온라인 저널 전문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외교원이 별도로 구매한 온라인 저널과 DB를 포함하여 인쇄 및 온라인 저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공고문에 첨부된 '2024년도 구독 학술지 목록'에는 서양서 76종, 중국서 11종, 일본서 15종, 시사교양지 3종 등 총 100여 종의 해외학술지가 포함되어 있음.

동 계약은 외교원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학술지의 정기 구독, 납본, 문제발생시 대응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용역계약임. 이는 단순 물품 구매가 아닌 업무 대행의 성격을 갖는 계약으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81]'에 따라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원은 '2024년도 해외학술지 구독 대행' 계약을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하였으며, 이러한 예산과목 설정상의 문제가 시정

81)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수용비(210-01)	일반용역비(210-14)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되지 않은 채, ‘2025년도 국립외교원 도서관 해외학술지 구독 대행’[82] 사업 또한 전년도와 같이 ‘일반수용비’로 약 1억 8백만원의 소요예산(안)을 편성하고, 2024.11.11.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게시함.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2024.12.11. 전년도와 동일한 업체인 (주)엘아이에스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함.

이와 더불어, 매년 계약공고문상 구독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나, 납품기간은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다음 연도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는 전년도 11월 또는 12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원활한 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음[83]. 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계약체결[84]은 반드시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연초에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계약(지출원인행위)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일정 관리가 요구됨.

한편, 외교원은 ‘해외학술지 구독’계약과 ‘온라인 DB 구독’계약을 분리하

---

82) 소요예산(안) : 약 108,378,590원 (US $77,891.76, 1$=1,391.4원 환율 적용)

83) 조달청 계약공고 관련 지침상 예산 미확정 상태에서도 공고는 가능함.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분리계약에 대해 외교원은 '온라인 DB'는 외교·안보 전문 분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DB이며, 학1술지는 상기 온라인 DB가 제공하지 않는 출판사별 중요 논문을 수록한 자료로서 별개의 자료이며 이에 따라 별도로 구독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온라인 DB 구독 관련 지출내역 >

건명	계약업체	자금이체일	자금이체액 (지출결의액, 원)
온라인 DB 구독료 지급 건의(누리미디어)	(주)누리미디어	2024-01-16	5,935,000
온라인 DB 구독료 지급 건의 (한국학술정보)	(주)한국학술정보	2024-01-16	3,200,000
온라인 DB 구독료 지급 건의 (CNKI 신원데이터넷)	(유)신원데이터넷	2024-01-17	2,919,180
온라인DB 구독료 집행 건의 (Stratfor Worldview)	(주)엘아이에스 코리아	2024-01-17	6,930,000
온라인 DB 구독료 지급 건의 (JSTOR 신원데이터넷)	(유)신원데이터넷	2024-01-17	3,045,240
온라인 DB 구독료 지급 건의 (엘아이에스 코리아)	(주)엘아이에스 코리아	2024-01-17	86,248,500
온라인 DB 구독료 송금	EBSCO	2024-01-19	27,913,410
온라인 DB(DNSA) 구독료 송금	ProQuest	2024-01-19	4,515,100
온라인 DB 구독료 집행 건의(Devex Pro)	(주)엘아이에스 코리아	2024-04-19	2,093,380
온라인 DB 구독료 지급 건의 (WORLD POLITICS REVIEW)	(주)엘아이에스 코리아	2024-07-29	249,20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지출결의대장, 온라인 DB 구독 기준)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온라인 DB 구독' 의 경우 5개 이상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콘텐츠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계약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임. 온라인 DB는 독점적·전속적 유통 구조를 띠는 경우가 있어, 각 업체가 특정 콘텐츠의 국내 독점권 또는 전속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외교원의 DB 구독 계약은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우려됨.

이에 따라, DB별 이용률 분석과 사용자 평가, 단가의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외교원의 '해외학술지 구독 대행' 및 '온라인 DB 구독' 계약을 검토한 결과,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과목으로 집행이 이루어졌고, 2023년부터 3년간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이 체결되는 등 특정 업체에 편중된 양상이 나타남. 계약방식 또한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85]인 점은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아울러, '온라인 DB 구독' 계약은 다수 업체와 분산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과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집행하고, 유사·동종 계약의 경우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다변화를 적극 모색하며, 회계연도에 맞는 계약 체결 시기를 준수하는 등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전 과정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85) 2024년도 소액수의견적 제출 결과 1순위는 ㈜엘아이에스코리아, 2순위는 저널피아였으며, 2025년도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엘아이에스코리아와 저널피아가 업체로 참여함.

라.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는 외교부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직원 간의 소통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행정역량 강화, 산하기관 평가, 외교역량 강화 정책연구, 재외공관 행정협조 체제 강화, 청년인턴 채용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C/B)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802	1,802	-	△195	-	1,607	1,139	-	468	70.9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당초 18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전용을 통해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16억 7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이 중 11억 3,9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6,8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0.9%임.

□ 청년인턴 채용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 모색 필요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의 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채용」 사업은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4년도부터 최초로 정규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어 추진된 것으로, 2024년에는 14억 5,400만원이 책정되었음.

동 내역사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4억 5,400만원 중 10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30.6%인 4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는 편성 계획 대비 단기(2~3개월) 근무 인턴 채용 규모의 확대에 따른 일용임금(3억 1,700만원) 및 고용부담금(4,500만원) 집행액 축소, 인턴 사업에 편성된 국내여비(800만원) 절감 등에 따른 것임.

<청년인턴 채용 내역사업 비목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청년인턴 채용	1,454	1,454	-	-	-	1,454	1,009	-	445
-일용임금(110-04)	1,224	1,224	-	-	-	1,224	907	-	317
-일반수용비(210-01)	11	11	-	△4	-	7	7	-	-
-임차료(210-07)	-	-	-	4	-	4	1	-	3
-국내여비(220-01)	82	82	-	-	-	82	2	-	80
-고용부담금(320-09)	137	137	-	-	-	137	92	-	45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24년 청년인턴[86]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110명 채용을 목표로 하여 6개월 근무 장기 인턴 80%(88명)와 2~3개월 단기 인턴 20%(22명)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적인 채용 규모가 115명으로 증원되었던 반면, 단기 인턴의 채용 규모가 59%(65명)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함.

86) 외교부 청년인턴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6개월
- (보 수) 월 2,060,740원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2023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시행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청년들에게 중앙부처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청년에게 국정운영 참여와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

외교부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2024. 4. 23. 제정)[87]을 선도적으로 마련하여 청년인턴 채용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인턴 근무가 2~3개월의 단기로 운용될 경우 정책적인 업무나 능력개발 업무를 경험할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단기 인턴 위주의 채용방식으로는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역량 강화라는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다수의 단기 인턴들이 우리나라가 2024년 국내에서 주관, 개최한 주요 국제행사[88]에 참여하면서 국가별 연락관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는 등 실무 외교 경험을 축적하였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의미는 있다고 설명함.

향후 외교부는 청년 인턴십이 단순한 체험이 아닌, 정책역량을 키우는 실질적 참여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 장기 인턴 비중 확대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87) 현재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법령을 시행 중인 중앙행정기관은 외교부 외에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가 있음.

88)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24.3월), 「2024 한-아프리카정상회의」(24.6월), 「제2차 인공지능의책임있는군사적이용에관한 고위급회의」(24.9월) 등

마.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은 전체 재외공관장이 참석하는 「재외공관장회의」를 주된 내역사업으로 하고, 그밖에 겸임국 출장, 특사 파견, 대외직명대사 활동, 재외공관원 전문분야 역량강화 등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짐.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2,303	2,303	-	984	-	3,287	2,914	-	373	88.7

2024년도 예산액 23억 300만원에서 이·전용액 9억 8,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2억 8,700만원 중 29억 1,400만원은 집행되고 3억 7,300만원은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7%임.

□ 재외공관장회의 사업 예산의 현실화 필요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의 내역사업인 「재외공관장회의」 사업은 세계 주요국에서 근무하는 재외공관장이 참석하여 재외공관장들의 국내정세 인식 제고, 주요 외교정책 및 지침의 직접 하달,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협의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본부와 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동 내역사업의 2024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은 15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책정된 예산의 63%에 해당하는 9억 8,400만원을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1)에서 자체전용하여 집행액은 24억 6,000만원임.

< 재외공관장회의 내역사업 비목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재외공관장회의	1,553	1,553	-	984	-	2,537	2,460	-	77
- 일반수용비(210-01)	15	15	-	10	-	25	23	-	2
- 임차료(210-07)	25	25	-	42	-	67	67	-	0
- 일반용역비(210-14)	30	30	-	107	-	137	137	-	0
- 국내여비(220-01)	228	228	-	105	-	333	311	-	22
- 국외업무여비(220-02)	1,129	1,129	-	720	-	1,849	1,799	-	50
- 사업추진비(240-01)	126	126	-	-	-	126	123	-	3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동 내역사업의 과도한 전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회의 참석 인원의 증가, 항공료 및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관련 예산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근거 대비 집행 세부내역을 볼 때, 참석자의 국내 체제비 및 항공료와 회의장 조성 용역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예산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편성근거	집행내역
■ 재외공관장회의(1회) : 1,553백만원 - 일정안내서 등 회의자료 제작/사무용품 구입/차량, 회의실 및 토론장 임차 : 40백만원 - 회의장 조성 용역 : 30백만원 - 참석자 국내체재비 및 항공료 : 1,356백만원 - 대통령 및 총리, 장관 주최 연회비, 지역별·그룹별 Catering : 126백만원	■ 재외공관장회의(1회) : 2,460백만원 - 일정안내서 등 회의자료 제작/사무용품 구입/차량, 회의실 및 토론장 임차 : 90백만원 - 행사장 조성 용역 : 137백만원 - 참석자 국내체재비 및 항공료 : 2,109백만원 - 대통령 및 총리, 장관 주최 연회비, 지역별·그룹별 Catering : 123백만원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경우 2023년에도 항공료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편성 예산 15억 100만원의 57%에 해당하는 8억 5,4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음.

재외공관장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회의 참석·개최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는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시 예산의 초과 집행과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19. 한국국제협력단

가. 개 요

KOICA는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으로 설립된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KOICA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출연·보조받아 운영함.

KOICA의 2024년 예산액은 2조 26억 4,100만원이며, 이 중 1조 9,067억 3,100만원을 집행함.

< 한국국제협력단 2024년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총 합 계	2,002,641	△55,946	1,946,695	1,906,731	10,065	29,898	97.9
□ 인건비	48,439	742	49,181	48,957	-	223	99.5
협력사업지원(인건비)	47,783	742	48,525	48,512	-	12	100.0
기금운영비(인건비)	656	-	656	445	-	211	67.9
□ 경상운영비	1,960	-	1,960	1,937	-	23	98.8
협력사업지원(경상비)	1,960	-	1,960	1,937	-	23	98.8
□ 사업비	1,950,912	△55,358	1,895,554	1,855,837	10,065	29,652	97.9
<출연사업>	1,246,796	△54,931	1,191,865	1,154,650	7,608	29,606	96.9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①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75,641**	**△17,825**	**257,816**	**249,271**	**3,140**	**5,406**	**96.7**
베트남(ODA)	49,646	△6,872	42,774	41,413	-	1,361	96.8
인도네시아(ODA)	20,971	△5,855	15,116	12,966	1,527	624	85.8
캄보디아(ODA)	22,864	△290	22,574	22,310	-	263	98.8
필리핀(ODA)	31,043	△9,223	21,820	21,414	339	68	98.1
방글라데시(ODA)	13,790	△4,290	9,500	9,349	-	150	98.4
몽골(ODA)	17,122	△36	17,086	16,772	225	89	98.2
라오스(ODA)	24,652	2,100	26,752	26,369	-	383	98.6
스리랑카(ODA)	12,232	6,653	18,885	18,821	-	64	99.7
네팔(ODA)	9,438	694	10,132	10,123	-	9	99.9
파키스탄(ODA)	9,239	△370	8,869	8,810	-	59	99.3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2,841	963	63,804	60,440	1,050	2,315	94.7
인도(ODA)	853	△663	190	189	-	1	99.3
미얀마(ODA)	950	△637	314	295	-	18	94.1
② 아프리카지역원조	**306,614**	**△12,211**	**294,403**	**282,575**	**2,416**	**9,412**	**96.0**
가나(ODA)	15,943	70	16,013	15,613	-	400	97.5
에티오피아(ODA)	30,643	△1,839	28,804	28,186	548	70	97.9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87,826	△5,424	182,402	174,739	1,685	5,978	95.8
르완다(ODA)	15,714	-	15,714	15,475	-	239	98.5
우간다(ODA)	14,501	△737	13,764	13,159	100	505	95.6
탄자니아(ODA)	18,927	△1,946	16,981	16,448	-	533	96.9
세네갈(ODA)	12,853	△486	12,367	11,262	-	1,105	91.1
이집트(ODA)	10,207	△1,849	8,358	7,693	83	582	92.0
③ 중남미지역원조	**73,671**	**1,011**	**74,682**	**72,893**	**127**	**1,662**	**97.6**
콜롬비아(ODA)	7,306	1,000	8,306	8,243	-	63	99.2
페루(ODA)	9,964	△2,863	7,101	6,970	-	131	98.2
볼리비아(ODA)	8,024	1,200	9,224	9,101	-	123	98.7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파라과이(ODA)	15,701	△663	15,038	14,873	-	165	98.9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32,676	2,337	35,013	33,706	127	1,180	96.3
④ 중동CIS지역원조	**133,274**	**△11,499**	**121,775**	**119,607**	**496**	**1,672**	**98.2**
우즈베키스탄(ODA)	23,767	△4,309	19,458	19,130	-	328	98.3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8,688	△6,714	81,974	81,235	496	242	99.1
키르기스스탄(ODA)	12,950	4,812	17,762	16,767	-	995	94.4
타지키스탄(ODA)	7,169	△5,287	1,882	1,775	-	107	94.3
우크라이나(ODA)	700	-	700	700	-	-	100.0
2. 글로벌프로그램	**313,652**	**△7,158**	**306,494**	**298,342**	**1,214**	**6,938**	**97.3**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128,756	△4,951	123,805	119,778	-	4,027	96.7
글로벌연수	67,378	△12	67,366	63,889	1,214	2,262	94.8
국제기구협력	81,915	△1,708	80,207	80,193	-	14	100.0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35,603	△487	35,116	34,481	-	635	98.2
3. 협력사업지원	**73,644**	**△3,457**	**70,187**	**66,983**	**214**	**2,990**	**95.4**
협력사업지원	73,644	△3,457	70,187	66,983	214	2,990	95.4
4. 전략적 협력 강화	**8,000**	**△2,158**	**5,842**	**5,206**	**-**	**636**	**89.1**
전략적 협력 강화	8,000	△2,158	5,842	5,206	-	636	89.1
5.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62,300**	**△1,635**	**60,665**	**59,774**	**-**	**891**	**98.5**
민관협력사업	57,000	△1,635	55,365	54,487	-	878	98.4
인도적지원(출연금)	5,300	-	5,300	5,287	-	13	99.8
<보조사업>	**703,400**	**-**	**703,400**	**700,907**	**2,457**	**36**	**99.6**
6.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703,400**	**-**	**703,400**	**700,907**	**2,457**	**36**	**99.6**
인도적지원(보조금)	703,400	-	703,400	700,907	2,457	36	99.6
<수탁사업>	**716**	**△427**	**289**	**280**	**-**	**9**	**96.9**
7.질병퇴치기금사업	**624**	**△384**	**240**	**232**	**-**	**8**	**96.4**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159	△132	27	26	-	-	98.4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295	△88	207	199	-	8	96.2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170	△163	7	7	-	-	95.9
8. 기금운영비	**92**	**△44**	**48**	**48**	**-**	**-**	**99.0**
기금운영비	92	△44	48	48	-	-	99.0
□ 예비비	**1,330**	**△1,330**	**-**	**-**	**-**	**-**	**-**
협력사업 지원(경평성과급)	**1,330**	**△1,330**	-	-	-	-	-

※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미배정액을 포함한 금액임

나. 국별 협력사업

「국별 협력사업」은 양자무상원조를 위한 것으로, 2024년도 본예산은 7,892억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및 전용액 등으로 인한 감액분 405억 2,400만원을 고려한 예산현액은 7,486억 7,600만원임.

이 중 96.8%에 해당하는 7,243억 4,600만원이 집행되고, 61억 7,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1억 5,200만원이 불용됨.

이에 국별협력사업의 집행률은 본예산 대비 91.8%, 예산현액 대비 96.8%로 나타나고 있음.

< 2024년도 국별협력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국별협력사업 (지역원조) 총괄	**789,200**	**△40,524**	**748,676**	**724,346**	**6,179**	**18,152**	**91.8**	**96.8**
① 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75,641	△17,825	257,816	249,271	3,140	5,406	90.4	96.7
② 아프리카지역원조	306,614	△12,211	294,403	282,575	2,416	9,412	92.2	96.0
③ 중남미지역원조	73,671	1,011	74,682	72,893	127	1,662	99.0	97.6
④ 중동CIS지역원조	133,274	△11,499	121,775	119,607	496	1,672	89.7	98.2

※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미배정액을 포함한 금액임

□ 신규사업의 초년도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국별 협력사업을 새로 편성할 때, KOICA는 '기획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제반 여건 및 타당성 분석 등을 조사한 후,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해 수원국/수원기관과의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관리기관(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을 선정해 KOICA의 위탁에 따라 사업관리를 총괄하도록 함. 이에 따라 선정된 사업관리기관은 협의의사록에 따른 사업에 착수함.

그런데 2024년도 신규 국별 협력사업의 초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총 집행액은 130억 900만원으로 71개의 신규 사업 중 33건의 집행액이 전혀 없으며,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세네갈 등 9개 국가[89]의 경우 해당 국가의 신규 국별 사업 중 집행액이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음.

<2024년 집행률이 0%인 신규 국별 협력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베트남 6개 지역 이주여성과 아동을 위한 효과적 재정착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사업(IOM)('24-'29/350만불)	989
베트남 법원 아카데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역량강화사업 ('24-'28/1,470만불)	347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 체계 개선사업('24-'27/500만불)	347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24-'28/550만불)	347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맹그로브 숲 복원 모델 수립사업('24-'28/850만불)	347
필리핀 중부 루손지역 한계농가의 생계 및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개발 사업('24-'29/600만불)	346
방글라데시 선진시장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차토그램 한방직업훈련원 직업훈련 체계 현대화('24-'27/1,000만불)	346

89)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DR 콩고, 세네갈, 이집트, 페루, 파라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내역사업명	예산액
라오스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24-'29/500만불)	346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UNFPA)('24-'28/431만불)	350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24-'30/1,120만불)	346
동티모르 영유아 교육사업(UNICEF)('24-'27/600만불)	1,417
DR콩고 북카탕가주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사업('24-'27/600만불)	500
케냐 청년 생산적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산업훈련청 아띠리버 센터 역량강화사업('24-'28/700만불)	346
수단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학습 기회 보장 사업(UNICEF)('24-'27/650만불)	1,009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24-'28/1250만불)	800
이집트 직업훈련원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고도화 사업('24-'30/1000만불)	773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24-`28/610만불)	383
페루 전역 조세제도 개편 및 전자세정 구현 사업('24-'27/1,076만불)	200
페루 아마존 지역 원헬스 기반 매개체 감염병 대응역량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24-'30/1,280만불)	225
볼리비아 쌀 생산성 증대 및 사회적 경제 체계 강화를 통한 중소농민 포용적 지원사업('24-'28/963만불)	387
볼리비아 감자생산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팜 적용 시범사업('24-'28/1,200만불)	178
파라과이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진단 및 감시 역량강화 사업('24-'29/1,450만불)	100
과테말라 경찰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고등교육원 개선 사업('24-'29/800만불)	200
엘살바도르 원격협진을 통한 소아보건 개선사업('24-'27/760만불)	400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 사업('24-'28/849만불)	346
아제르바이잔 숨가이트시 및 해방 지역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24-'28/1,000만불)	346
키르기스스탄 농산물 수확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가치사슬 강화사업('24-'27/600만불)	346
타지키스탄 정부기능 디지털 전환 이행 지원사업('24-'27/650만불)	346
타지키스탄 시설원예농업 현대화 기반 구축 사업('24-'29/800만불)	346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전력망 통합자동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4-'28/1,450만불)	50
우크라이나 정부 효율성 및 책무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사업(UNDP)('24-'26/533만불)	50
우크라이나 키이우-국경구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24-'27/800만불)	50
우크라이나 오데사-이즈마일-레니구간 철도용량 증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24-'26/600만불)	50
합 계	13,009

(자료: 외교부)

71개의 신규 협력사업 중 사업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연내 계획된 사업 추진 예정인 사업은 34건에 불과한데, 이 중 13개의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선

정이 2025년에 이루어져 초년도 사업 착수에는 차질이 있었음. 다른 37개 사업들은 협의의사록 미체결(17건) 또는 사업관리기관 미선정 단계이거나(13건), 사업이 취소된 경우 등(7건)도 있음.

KOICA의 신규 국별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의 관행에 대한 지적은 국회의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수년간 있었음. KOICA는 N-2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2차년도 7월 중순까지 협의의사록 체결 및 사업관리기관 선정이 지연되어 착수 사업이 과반에 못 미치는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KOICA는 초년도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통해 사업의 기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미얀마 · 우크라이나 대상 국별협력 사업의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미얀마와 우크라이나는 국가협력전략(CPS)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으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과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2024년 KOICA의 미얀마 대상 국별 협력사업은 본예산이 9억 5,000만원이고, 6억 3,650만원이 전용감되어 예산현액 3억 1,350만원 중 2억 9,507만원 집행된바,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31.1%이고, 우크라이나 대상 국별 협력사업은 본예산 7억원 전액 집행됨.

< 미얀마·우크라이나 국별협력사업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액	전용·조정	예산현액(B)	집행액(C)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A)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미얀마	950,000	△636,500	313,500	295,065	18,434	31.1	94.1
미얀마 직업기술교사 교육원 설립사업	200,000	△190,500	9,500	6,578	2,922	3.3	69.2
미얀마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사업	600,000	△366,000	234,000	230,522	3,478	38.4	98.5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 강화 사업	-	-	-	-	-	-	-
미얀마 자동차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	-	-	-	-	-	-
미얀마 ICT를 활용한 개발소외지역 참여적 농촌개발 사업: 사업취소	-	-	-	-	-	-	-
미얀마 라카인 마나웅섬 2.5MW 태양광전력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취소	-	-	-	-	-	-	-
미얀마 교량 안전관리 기술 역량강화사업: 사업취소	-	-	-	-	-	-	-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100,000	△100,000	-	-	-	-	-

사업명	예산액	전용·조정	예산현액(B)	집행액(C)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A)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건립 및 역량강화사업							
미얀마 철도 역량강화 사업 : 사업취소	-	-	-	-	-	-	-
미얀마 농식품 안전 및 식물검역 역량강화 사업 : 사업취소	-	-	-	-	-	-	-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사업	50,000	20,000	70,000	57,966	12,034	115.9	82.8
우크라이나	**700,000**	**-**	**700,000**	**700,000**	**-**	**100.0**	**100.0**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	450,000	△350,000	100,000	100,000	-	22.2	100.0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전력망 통합자동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50,000	△50,000	-	-	-	-	-
우크라이나 정부 효율성 및 책무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사업	50,000	△50,000	-	-	-	-	-
우크라이나 항공운송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리스필공항 현대화 사업	50,000	550,000	600,000	600,000	-	1,200.0	100.0
우크라이나 키이우-국경구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	50,000	△50,000	-	-	-	-	-
우크라이나 오데사이즈마일-레니구간 철도용량 증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50,000	△50,000	-	-	-	-	-

미얀마의 경우 국별협력사업 11개 중 5개가 취소되었으며, 취소되지 않은 6개의 사업 중 2개의 사업[90]은 본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1개의 사업[91]은 전액 전용감되었으며 1개의 사업[92]은 95% 이상 전용감되었음. 그 외의 2개 사업 중 '미얀마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사업'은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38.2%로 집행이 저조한 상황임.

90)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 미얀마 자동차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91)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사업

92) 미얀마 직업기술교사 교육원 설립사업

이에 대해 KOICA는 2021년 미얀마 내 군부 쿠데타 이후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간 연장이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등 정세불안으로 사업추진이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교통일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검토 과정[93]에서 '미얀마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KOICA는 최소 예산만을 제외한 채 사업 예산을 감액하도록 하고, 미얀마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지적하여 정부제출안에 비해 최종 본예산이 10% 수준으로 감액되었으나, 그마저도 2024년에 집행되지 못하였음.

우크라이나의 경우 국별협력사업 6개 중 4개의 사업[94] 예산 전액과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 예산(4.5억원) 중 3.5억원 등 총 5.5억원이 '우크라이나 항공운송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리스필공항 현대화 사업'으로 전용되었음.

동 사업은 본예산(0.5억원) 대비 집행액(6억원)이 12배 수준인데, 이에 대해 KOICA는 2024년 12월 PMC 선정 이후 선금 지급 과정에서 다른 사업과 달리 기자재 투입을 바로 요하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선금의 지급 비율[95]이 높아

93) 2024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2023.11., p.199

94)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전력망 통합자동관리시스템 구축사업(0.5억원), 우크라이나 정부 효율성 및 책무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사업(0.5억원), 우크라이나 키이우-국경구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0.5억원), 우크라이나 오데사-이즈마일-레니구간 철도용량 증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0.5억원)

95)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PMC와의 총 계약 금액이 약 9억 7,000만원으로 그 중 약 10% 수준인 1억원이 선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우크라이나 항공운송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리스필공항 현대화 사업'은 PMC와의 총 계약 금액 13억 2,000만원 중 약 45%인 약 6억원이 선금

불용이 불가피한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특성은 사업 계획 과정에서 기초조사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판단됨. 특히 다른 사업에서 전용감되지 않았을 경우 선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었던바, 이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을 고려할 때 더욱 유의했어야 할 것임.

향후 외교부와 KOICA는 정세가 불안한 지역인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서 추진하는 ODA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으로 지급됨.

다. 글로벌 프로그램

「글로벌 프로그램 」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파트너십을 통한 개도국 인적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글로벌연수(ODA)」, 「국제기구협력(ODA)」,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3,136억 5,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4억 400만원, 미교부액은 75억 6,200만원이며, 집행액은 2,983억 4,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95.1%임.

< 글로벌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사업	128,756	128,756	-	-	△4,951	123,805	119,777	-	4,027	93.0	96.8
글로벌연수	67,378	67,378	404	-	△416	67,366	63,889	1,214	2,262	94.8	94.8
국제기구협력	81,915	81,915	-	-	△1,708	80,207	80,193	-	14	97.9	100.0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35,603	35,603	-	-	△487	35,116	34,481	-	635	96.8	98.2
합 계	313,652	313,652	404	-	△7,562	306,494	298,342	1,214	6,938	95.1	97.3

□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의 목표와 실적의 일치 필요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는 월드프렌즈코리아(WFK)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들이 해외개발협력 현장 등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파견사업과 함께 원격봉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임. 2024년 기준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총 5,255명이 활동하였으며, 예산액은 1,287억 5,600만원, 미교부액은 49억 5,100만원이고 집행액은 1,197억 7,7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집행률은 93.0%임.

<최근 5개년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실적>

항목 구분 (시행기관)		파견 인원 실적 · 목표('20~'24)(명)						합계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실적	'23년 실적	'24년 실적	'25년 목표	
WFK 해외 봉사단	KOICA 봉사단	1,647	762	1,195	1,159	1,531	1,700	6,294
	ㄴ일반봉사단	1,465	370	585	726	844	1,000	3,990
	ㄴNGO봉사단	134	143	311	231	231	250	1,050
	ㄴ청년중기봉사단	4	197	248	151	406	400	1,006
	ㄴUNV 봉사단	44	52	51	51	50	50	248
	KOICA 자문단	48	3	8	12	25	35	96
	NIPA 자문단	11	28	32	14	29	69	114
	청년봉사단	-	824	1,002	1,528	1,960	2,220	5,314
	IT 청년봉사단	-	94	170	208	249	400	721
	과학기술지원단	30	21	5	6	12	25	74
	한방봉사단	-	33	56	52	54	72	195
개발 협력 인재	영프로페셔널(YP)	466	408	626	654	1,052	1,048	3,206
	코디네이터	176	146	230	179	240	298	971
	다자협력전문가	49	66	64	70	91	80	340
	글로벌의료진	21	12	14	13	12	22	72
합 계		2,448	2,397	3,402	3,895	5,255	5,969	17,397

(자료: 외교부)

그런데 KOICA가 제출한 최근 각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의 목표 인원과 실적을 비교해보니 사업현장에서의 수요와 파견 계획간의 불일치로

인해 인원 파견의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였음.

<인원 파견의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봉사단/해외개발인재 현황>

(단위: 명)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월드프렌즈코리아 NIPA 자문단	77	32	41.6%	69	14	20.3%	69	29	42.0%	69
월드프렌즈코리아 과학기술지원단	34	5	14.7%	25	6	24.0%	25	12	48.0%	25
글로벌협력의료진	23	14	61.0%	22	13	59.0%	22	12	55.0%	22

(자료: 외교부)

상술한 3개의 사업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의 달성률이 최근 3개년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의 목표도 예년과 유사하여 달성률의 저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상기 사업 중 '월드프렌즈코리아 NIPA 자문단'과 '월드프렌즈코리아 과학기술지원단'은 각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연구재단(NRF)을 시행기관으로 하며, '글로벌협력의료진'은 KOICA가 직접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KOICA는 시행기관이 별도로 있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의, 협조하여 개발도상국의 맞춤 수요(특정분야, 적격자 등)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파견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 및 선발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파견 목표에 맞게 파견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 할 것임.

□ 학위과정연수에서의 연례적 이월액 발생 관행 시정 필요

「글로벌 연수(ODA)」는 협력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개발 경험을 다른 국가에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국별/다국가연수를 통칭하는 '일반연수'와 다수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연수생의 석·박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연수인 '학위연수'로 이루어져 있음.

동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96]와 「글로벌연수사업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2024년 예산액은 673억 7,800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12억 1,400만원, 불용액이 22억 6,200만원이며, 집행액은 638억 8,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94.8%임.

<2024년 글로벌 연수 과정 수 및 인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계획		실적		계획대비 참가율 (C=B/A)
		과정 수	인원(A)	과정 수	인원(B)	
일반연수	국별연수	198	3,704	192	3,105	83.8%
	다국가연수	44	880	43	1,413	160.6%
	특별연수	5	100	5	76	76.0%
학위연수	석사	43	1,270	43	1,244	98.0%
	박사	12	36	12	34	94.4%
계		302	5,990	295	5,872	98.0%

(자료: 외교부)

KOICA는 '학위연수'를 운영함에 있어 최근 이월액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점차 늘어나 최근 3개년 누적액이 약 16억 6,300만원임.

96)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연수 사업

<최근 3개년 학위연수의 이월액 발생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이월액(석사)	이월액(박사)
2022년	45,000	-
2023년	395,000	9,000
2024년	1,179,070	35,084
계	1,619,070	44,084

(자료: KOICA)

이에 대해 KOICA는 '학위연수'는 계약 기간 5년 동안 석사과정별 17개월, 박사과정별 36개월로 운영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연수기관(대학)의 학사일정 및 회계 정산으로 인해 이러한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임.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97]에 따라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 이월액을 발생시키지 않는 취지의 제도로, KOICA의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학위연수'의 경우 계획 대비 참가율이 매년 90%대 중반 이상으로 사전에 회계연도와 대학의 학사일정 간 불일치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의 잔금 예상이 충분히 가능함.

97)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 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최근 3개년 학위연수의 계획대비 인원 참가율 현황>

(단위: %)

구분	석사	박사
2022년	97.6	93.3
2023년	96.3	95.2
2024년	98.0	94.4

(자료: KOICA)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98]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내 사업 일정 관리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향후 KOICA는 '학위연수' 운영에 있어 다음연도 이월이 반복되는 관행이 지속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아래에 사업 예산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9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라. 전략적 협력강화

「전략적 협력강화」는 정상급 외교 공약사업 및 기타 중요 국정과제 지원 등의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 협력강화(ODA)」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세부사업 내에 「전략사업비」와 「융합 ODA 연계 지원」사업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80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억 8,100만원, 미교부액은 23억 3,900만원이며, 집행액은 52억 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65.1%임.

「전략사업비」는 60억원이 편성되고 40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융합 ODA 연계지원」은 20억원이 편성되고 11억 6,046만원이 집행되었음.

< 전략적 협력 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전략적 협력강화	8,000	8,000	181	-	△2,339	5,842	5,206	-	636	65.1	89.1
전략사업비	6,000	6,000	181	-	△1,949	4,232	4,046	-	186	67.4	95.6
융합 ODA 연계 지원	2,000	2,000	-	-	△390	1,610	1,160	-	450	58.0	72.0

□ 전략사업비 효과성 제고 필요

「전략사업비」는 정상급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예산임. 일반적인 ODA 사업이 사업 시작 1년 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를 거치는 것에 반하여, 전략사업비는 사업 수행 당해연도(N년도)에 예산을 바로 배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수시배정 성격의 예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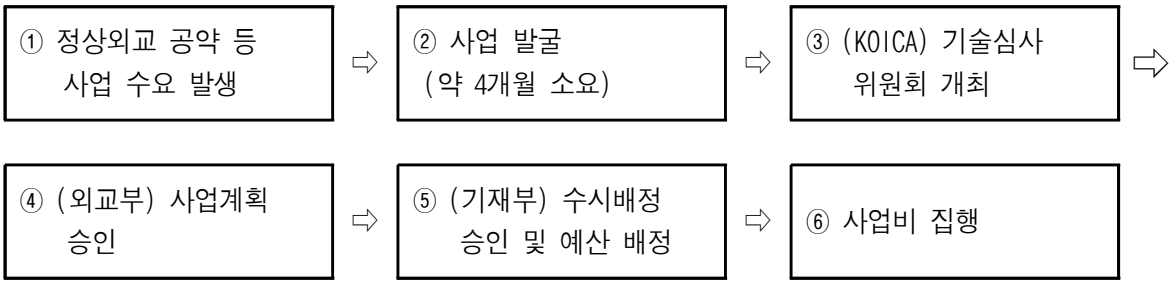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사업 수행 절차도 일반 사업에 비해 다소 상이한데, 일반적인 ODA 사업이 예비조사(N-2), 사업심사(N-1), 예산심의·국회승인(N-1), 집행계획 수립(N년 초)의 절차를 걸쳐 추진되는 반면, 전략사업비를 통하여 집행되는 사업은 사업이 우선 선정된 후 공식사업요청서(PCP)를 접수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됨.

< 일반적인 국별협력사업 수행 절차 >



※자료: KOICA 홈페이지

< 전략사업비 추진 절차 >



(자료: 외교부)

2024년에는 전략사업비를 통하여 7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40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략사업비를 통한 사업 추진 내역(2024) >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추진경위	2024년도 예산		진행단계 (2025.6.)
			배정액	집행액	
1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아동 긴급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23-'24/125만불)	'23년 한-우 정상회담 계기 추진	1,463	1,227	종료
2	우크라이나 전쟁피해지역 긴급 식수 지원 사업('23-'24/150만불)		1,683	1,344	종료
3	우크라이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바실키브 직업학교 재건 사업('24-'27/1,490만불)		50	41	사업수행자(UNOPS) 약정체결 완료
4	우크라이나 온라인교육 플랫폼 개선 지원사업(UNICEF)('24-'26/500만불)		610	858	사업수행자(UNICEF) 약정체결 완료
5	아이티 안전한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지원사업('23-'25/155만불)	'23년 한-아 총리 간 양자회담(CARICOM) 계기 추진	245	575	스쿨버스(26대) 지원완료
6	콜롬비아 다목적 지적을 위한 공간 정보 역량강화 체계 구축사업('24-'26/600만불)	'23년 UN총회시 한-콜 정상회담 계기 추진	-	-	PMC선정 입찰완료
7	베트남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사업('24-'33/3,000만불)	'23년 대통령 베트남 순방 계기 추진	-	-	R/D체결 협의중

(자료: 외교부)

전략사업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아동 긴급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은 소규모 단순 물자지원 사업으로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우려가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아동 긴급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과 ‘우크라이나 전쟁피해지역 긴급 식수 지원 사업’은 2023 한-우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이티 안전한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지원사업’은 2023 한-아 총리 간 양자회담 계기로 추진된 사업임.

그런데 동 사업들은 단순 물자지원 사업으로 KOICA의 「물자 및 자금지원 지침」의 절차에 따르게 되는바 연차점검과 종료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연차점검과 종료평가는 사업의 진행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는 절차인데, 소규모 단순 물자지원 사업들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

둘째, ‘콜롬비아 다목적 지적을 위한 공간 정보 역량강화 체계 구축사업’과 ‘베트남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사업’은 2023년에 이루어진 정상회담 및 순방을 계기로 추진된 사업이나, 2024년에도 본격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콜롬비아 다목적 지적을 위한 공간 정보 역량강화 체계 구축사업’은 집행

계획 수립 및 협의의사록(RD) 체결을 위한 수원국 측 협의가 당초 계획보다 길어지며 집행이 순연된 측면이 있고,

‘베트남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사업’은 수원국인 베트남의 조직개편으로 사업계획 재조정이 필요하여 협의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KOICA의 설명임.

전략사업비의 취지가 사업 수행 당해년도에 예산을 바로 배정받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사업 수행 초년도인 2024년에 예산을 배당받지 못한 것은 해당 취지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함.

셋째, ‘우크라이나 온라인교육 플랫폼 개선 지원사업’은 2024년도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기간 동안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동 사업은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주도 하에 추진 중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All Ukrainian School Online; AUSO)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교사와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실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① AUSO 교육콘텐츠 활용자 수와 ② AUSO 회원가입자 수가 있음. 그런데 사업 첫해인 2024년의 성과달성률이 ① AUSO 교육 콘텐츠 활용자 수는 17.4%, ② AUSO 회원가입자 수는 12.8%에 그침.

< 정량 평가지표 >

구분	지표	2024 목표치	2024 성과	달성률(%)
성과 (Outcomes)	1. AUSO 교육콘텐츠 활용자 수	100,000	17,448	17.4
	2. AUSO 회원가입자 수	80,000	10,200	12.8
산출물 (Outputs)	1. W3C 웹접근성 지침 준수율	N/A	N/A	-
	2. 개발된 컨텐츠 수 (학교급별/교과별)	200	219	109.5
	3.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자 수	N/A	N/A	-
	4. 인식제고 활동 참여자 수	200,000	0	0

(자료: 외교부)

KOICA는 이와 같은 저조한 성과에 대해, 사업 예산이 4분기에 교부되어 실제 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여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향후에는 사업 기간 중 추진이 순연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당국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전략사업비가 적기에 수시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마. 인도적지원(ODA)

「인도적지원(ODA)」은 긴급재난 지역 및 만성위기 지역에 대한 현금·현물 지원,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장비 구매 및 역량강화 실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이 중 출연금으로 실시되는 사업은 「인도적지원 파트너십 구축」 사업으로, 동 사업에서는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수행함.

2024년도 예산액은 53억원이고 이 중 52억 8,700만원을 집행함.

< 인도적지원(ODA)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인도적지원(ODA)-출연	5,300	5,300	-	-	-	5,300	5,287	-	13	99.8	99.8
인도적지원 파트너십 구축	5,300	5,300	-	-	-	5,300	5,287	-	13	99.8	99.8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이란 국내 민간단체(NGO)들의 인도적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 사업·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해당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KOICA 분담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4년 동 사업의 참여 단체와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참여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체명	수행 연도	사업명	사업구분	사업 지역	총 사업비
아디	'22 ~'24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및 수용 공동체 여성 심리사회적 회복역량강화 사업 5단계	만성재난 (성장형/ 3년)	방글라 데시	675
팀앤팀	'22 ~'24	우간다 라이노 및 임베피 난민 정착촌 교육 환경에서의 WASH 개선사업	만성재난 (성장형/ 3년)	우간다	1,040
더 멋진세상	'22 ~'24	우간다 북부 팔로리냐 남수단 난민 정착촌 WASH 및 보건 위생환경 개선사업	만성재난 (성장형/ 3년)	우간다	1,170
굿 네이버스	'22 ~'24	우간다 차카II 난민정착촌 내 젠더기반폭력 위험 경감 및 난민 여성 역량 강화 사업	만성재난 (성장형/ 3년)	우간다	1,299
월드비전	'22 ~'24	케냐 칼로베예이 정착촌 난민 및 수용공동체의 가뭄 대응 역량 강화 사업	만성재난 (성장형/ 3년)	케냐	1,413
굿 네이버스	'23 ~'24	2023-2024 튀르키예 임시 정착촌 조성 및 이재민 지원 사업	긴급재난	튀르키예	3,945
세이브더 칠드런 코리아	'23 ~'24		긴급재난	튀르키예	5,214
한국국제 기아대책 기구	'23 ~'24		긴급재난	튀르키예	3,945
한국국제 기아대책 기구	'24	2024 마다가스카르 남부지역 기근 대응 긴급구호 사업	긴급재난 (RAPID)	마다가 스카르	452
굿 네이버스	'24	2024 말라위 시콰와, 발라카 군 기후변화로 인한 급성식량위기 긴급구호 사업	긴급재난 (RAPID)	말라위	464
세이브더 칠드런 코리아	'24	2024 부르키나파소 북부 누르드 지역 분쟁으로 인한 춘궁기 식량위기 대응 사업	긴급재난 (RAPID)	부르키 나파소	453
월드비전	'24	2024 앙골라 남서부지역 엘니뇨 기반 식량위기 대응 식량 바우처 지원 사업	긴급재난 (RAPID)	앙골라	464
어린이 재단	'24	2024 잠비아 루사카 및 중부 주 식량위기 대응 영양지원 긴급구호사업	긴급재난 (RAPID)	잠비아	464

(자료: 외교부)

□ 잦은 사업 유형 변경 지양 필요 등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은 사업 유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사업 신설 이후 연도별 사업 유형 변경이 잦은데,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2021년은 만성재난 사업만 공모를 실시하였고, 2022년은 긴급재난과 만성재난 모두, 2023년은 긴급재난 사업만 공모를 실시하였음.

2024년은 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이전의 ① 긴급재난지원사업과 ② 만성재난지원사업을 ① 긴급재난대응사업, ② 긴급재난(RAPID) 사업, ③ 만성재난(HDP-NEXUS) 사업으로 재편하고, 재편 첫 해로 RAPID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RAPID'와 'HDP-Nexus'라는 사업을 시작하였음.

< 연도별·유형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추진 현황 >

사업 시작 연도	사업 유형	사업 수	참여 기관 수
2021	만성재난	3	3
2022	긴급재난	6	5
	만성재난	7	7
2023	긴급재난	8	5
2024	RAPID	5	5
2025	RAPID	5	5
	HDP-Nexus	8	9

(자료: 외교부)

기존 사업과 변경된 사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유형별 비교 >

사업명	만성재난지원사업	HDP-Nexus 사업
사업 내용	국가 간 전쟁이나 내전, 혹은 기근 등 장기화된 재난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내 최취약계층(난민, 국내실향민, 호스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사업 기간	다년도(2~3년)	
지원 규모	- 2021년도 사업당 연간 4억원 - 2022년도 사업당 연간 2~4억원 - 2023년, 2024년 공모 진행 X	- 진입형 사업 연간 3억원(신규기관 1억원) - 성장형 사업 연간 5억원(컨소시엄 7억원)
예산 구성	- KOICA 및 파트너 분담금 예산 항목별 별도 구성	- KOICA 및 파트너분담금 통합 구성 - 사업현장파견인력 체재비 편성
사업명	**긴급재난지원사업**	**RAPID 사업**
사업 내용	재난 발생 이후 이재민의 존엄성 유지 및 기본적인 필요 충족, 고통 경감을 위해 긴급성을 가지고 수행되는 사업	
사업 기간	단년도(1년 이내)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KOICA, 사업수행기관(NGO)	민관협력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 (KOICA, 신한은행, 대한적십자사, RAPID 사업 수행 NGO 5개 기관)
수행 단체 자격유지기간	1년	2년(자격 유지 조건 신설)
분담금 구성	KOICA 분담금 100%	신한은행 지원금, KOICA 분담금, 수행기관(NGO) 분담금 (KOICA 분담금의 최소 20% 이상)

(자료: 외교부)

동 사업과 같이 민간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에서 그 유형이 빈번히 조정되는 것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파트너들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어 민간의 준비와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업의 변동성에 대하여 외교부와 KOICA는 예산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만성재난은 사업 기간이 2~3년인 다년도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2021년과 2022년에 시작된 만성재난 사업이 2023년, 2024년까지 계속되며 2023년과 2024년에는 만성재난 사업을 공

모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그러나 예산 사정에 따른 사업 유형 변경은 사업의 연속성 약화, 민간 파트너의 역량 강화 저해, KOICA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파트너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사업의 위탁 수행기관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도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사업 구조의 반복적이고 단기적인 변경은 사업 참여자 간 혼란, 행정 비효율, 인수인계 오류 등을 초래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음.[99]

둘째, 2024년도에 RAPID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그 준비가 철저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사업 공모 시점인 2024년 1월까지도 RAPID 사업의 분담금 규모, 사업관리 지침, 공동 성과지표 등 핵심 운영 요소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99)

2. 향후 과제

나. RAPID 및 HDPN 사업의 안정적 운영 체계 정립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은 2012년 이후 운영 구조와 명칭, 세부사업 형태의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왔음. 그러나 **사업 구조의 반복적이고 단기적인 변경은 사업 참여자 간 혼란, 행정 비효율, 인수인계 오류 등을 초래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냄.
- 향후 RAPID 및 HDP-N 사업이 지속 가능한 구조 속에서 전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간 역할과 책임(예: KOICA의 정책·관리 감독, KCOC의 실행관리, NGO의 현장 실행 등)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따른 표준 운영지침 및 성과관리 기준의 통합이 필요함.
- 또한 **연례 단위의 사안별 조정보다는 중장기 사업 틀 내의 유연한 조정과 안정적인 사업환경 제공이 중요하며,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자료: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위탁 운영관리 용역 결과보고서」, KCOC

또한, 사업 공모 당시에는 긴급재난지원사업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긴급재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중 원하는 단체에 한하여 RAPID 사업(공모 당시 'K-HAND' 사업)에 참여하도록 공지하였는데, 2024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RAPID 사업만 추진되는 등의 변경도 발생하였음.

< RAPID(당시 K-HAND 트랙) 사업 공모 계획 >

구분	긴급재난대응사업	
	긴급재난대응 트랙	**K-HAND 트랙**
사업분야	긴급하게 발생하는 재난 상황(Rapid Onset) 식량안보 및 영양, 식수위생, 보건, 주거, 생계 및 물자지원, 보호 활동	
사업대상	재난 피해 지역 내 피해 인구(Affected People)	
자격유지 조건	인도적지원 전담팀의 50%이상 인도적지원 사업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담팀의 70% 이상이 인도적지원 교육 이수 경험 있어야 함 *자격유지 못하는 경우 즉시 통보해야 하며, 진행중인 사업 종료까지만 자격 임시 유지 **임시자격 기간 동안 K-HAND 사업 참여 불가 ***차기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재평가 시 감점 1점 부여	
지원규모	2024년 10억원 1개 기관당 2억원, 총 5개 단체 *2025년은 예산규모에 따라 변경	재난대응 규모에 따라 유동적
사업발굴 방식	자격기관의 우선순위, 수요 발굴 방식에 따라	KOICA가 정하는 재난에 대응하며, 사업 수요 조사 및 기획은 자격기관과 공동 수행
사업 신청기간	24년 약정 체결시부터 9월까지	유동적
사업기간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24년12월31일까지 사업 종료 필요	
지급방식	일괄 지급 *단,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지급	
지원비율	NGO 매칭 불요	KOICA 분담금의 20%를 매칭 필요, 매칭 산정시 기업 등 외부 유치 재원은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

※동 공모는 기관의 자격 심사를 통해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단체에게 부여되는 자격 유지 기간은 2년임. **선발된 단체는 긴급재난대응사업 참여 및 (가칭)K-HAND 사업 참여 자격을 동시에 부여받게 됨.**

※**(가칭)K-HAND의 브랜드명 및 세부 운영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확정 예정**.

이러한 상황은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이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을 유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민간 파트너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준비하지 않도록 핵심 운영 요소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공모를 진행해야 하며, 성급한 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함.

□ 참여 기관의 일반관리비 과다 지출 부적절

일반관리비는 직접사업비 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동 사업의 일반관리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첫째, 사업수행 연도 중 일반관리비 상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RAPID 사업에 한하여 일반관리비 상한이 없도록 하였음.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규정은 KOICA의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지침」에, 일반관리비의 비율 등 보다 상세한 규정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수행안내서」에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지난해 두 차례의 규정 개정을 거치며 RAPID 사업에 대한 일반관리비 규정이 변경되었음.

<RAPID 사업에 관한 일반관리비 규정>

구분	일반관리비 상한	비고
2024. 1. 개정규정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의 6%**	전체사업비 대비 약 6% 수준
2024. 7. 개정규정	**상한 없음**	나머지 사업(만성재난, RAPID 외 긴급재난)은 일반관리비 상한 유지
2024. 10. 개정규정	**전체 사업비의 10%**	

※주: 직접사업비 3억원 초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자료: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수행안내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 공모가 시작될 시기인 2024년 초 사업 공모 시점에는 사업 유형과 무관히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의 6~9%'[100]로 상한이 설정되었음.

100) 이는 전체 사업비 대비 5.6~8.2%에 해당함.

그러나 사업 연도 중인 2024년 7월 규정을 개정하여 RAPID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 편성에 상한이 없도록 하였음. 이후 같은 해 10월 규정을 재개정하여 일반관리비 상한을 전체 사업비의 10%까지로 확대하며 RAPID 사업도 다른 유형의 사업과 동일한 일반관리비 상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음.

< 일반관리비 규정 상세 >

2024. 1. 개정규정

	일반관리비 편성 상한선	
수행단체 분담금으로 편성	연차별 KOICA 분담금	수행단체
	1억원 이하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9%한도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8%한도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7%한도
	3억원 초과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6%한도
* 일반관리비는 수행단체 분담금으로 편성(수행단체 분담금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간 예산 기준이며, 연간 일반관리비 배정 비율은 자율 조정 가능 * 동일기관이 동일한 국가에서 2개 이상의 사업 수행시, KOICA와 일반관리비 편성 비율 사전협의 필수		

자료: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수행안내서(v.3.1)」, 코이카, 2024.1., p.56

2024. 7. 개정규정

○ RAPID 사업 일반관리비의 경우, 예산편성 기준은 지침을 준용하되, 정산 규정은 단체 내부 규정을 따라도 무방함

	일반관리비 편성 상한선	
수행단체 분담금으로 편성	연차별 KOICA 분담금	수행단체
	1억원 이하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9%한도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8%한도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7%한도
	3억원 초과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6%한도
* 일반관리비는 수행단체 분담금으로 편성(수행단체 분담금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간 예산 기준이며, 연간 일반관리비 배정 비율은 자율 조정 가능 * 동일기관이 동일한 국가에서 2개 이상의 사업 수행시, KOICA와 일반관리비 편성 비율 사전협의 필수 * RAPID 사업의 경우, KOICA 분담금의 최소 20% 이상을 수행단체 부담금으로 편성하며, 일반관리비 편성에 대한 상한 없음.		

자료: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수행안내서(v. 3.2)」, 코이카, 2024.7., p.56

2024. 10. 개정규정

다. 간접사업비 편성 기준 및 관리규정

1) 일반관리비 : 직접사업비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으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경비
2) 지급(이행)보증보험: KOICA 분담금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입(계약)하는 보험

1) 일반관리비

○ 편성 기준 :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초과불가) 연차별 자율 편성

○ RAPID 사업 일반관리비의 경우, 예산편성 기준은 지침을 준용하되, 정산 규정은 단체 내부 규정을 따라도 무방함

자료: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수행안내서(v. 4.0)」, 코이카, 2024.7., p.56

일반관리비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경비가 아닌, 사업의 간접비 성격으로, 이를 과도하게 계상할 경우 과다 이윤 추구 및 사업의 효과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일반관리비 상한을 확대하거나 이를 없애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

참고로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잦은 변경, 특히 사업공모가 완료된 이후 일반관리비의 상한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둘째, 지난해 RAPID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일반관리비 비율이 과다한 측면이 있음.

지난해 RAPID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월드비전은 직접사업비 대비 일반관리비가 15% 이상이며, 다른 단체들도 모두 10%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RAPID 참여 기관의 일반관리비 비율 >

(단위: 백만원, %)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세이브더 칠드런	한국국제기아 대책기구
일반관리비(A)	61	62	61	53	52
직접사업비(B)	399	385	400	400	400
총사업비(C)	460	447	461	453	452
A/B	15.4	16.1	15.2	13.3	13.0
A/C	13.3	13.9	13.2	11.7	11.5

※주: 집행액 기준임
※자료: 외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지난해 추진된 RAPID 사업에 한시적으로 일반관리비 상한이 폐지된 데 따른 결과로, 사업 공모 당시의 규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개정된 규정의 상한보다도 일반관리비가 많이 집행되었음.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예산 중 ODA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자금 비중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한 없이 과다하게 집행된 일반관리비는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관리가 필요함.

20. 한·아프리카재단

가. 개 요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임.

나. 수 입

2024년도 한·아프리카재단의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44억 2,500만원, 이자수입 및 잡수익을 합한 자체수입 1,000만원 등 총 44억 3,500만원임.

< 한·아프리카재단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증 감	예산현액 (A)	실 적 (B)
1. 정부출연금	4,425	-	4,425	4,425
2. 자체수입 (이자수입, 잡수익)	-	10	10	10
계	**4,425**	**10**	**4,435**	**4,435**

다. 지 출

2024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17억 1,800만원, 경상운영비 4억 6,100만원, 사업비 22억 4,600만원으로 총 44억 2,500만원이었으며, 그 중 4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500만원을 불용하여 전체 집행률은 93.8%임.

< 한·아프리카재단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증감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집행률 (E=(B+C)/A)
1. 인건비	1,718	-	-	1,718	1,530	-	188	89.1
2. 경상운영비	461	-	-	461	460	-	1	99.8
3. 사업비	2,246	-	-	2,246	2,160	-	86	96.2
가.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802	-	-	802	793	-	9	98.9
나.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882	-	-	882	816	-	66	92.5
다.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562	-	-	562	551	-	11	98.0
계	**4,425**	-	-	**4,425**	**4,150**	-	**275**	**93.8**

< 한·아프리카재단 사업비 등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집행률 (B/A)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사업출연금 합계	**2,246**	**-**	**2,246**	**2,160**	**-**	**86**	**96.2**	**96.2**
1.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802**	**-**	**802**	**793**	**-**	**9**	**98.9**	**98.9**
1.1 아프리카 경제 비즈니스 세미나/포럼	153	32	185	185	-	-	120.9	100
1.2 창업아이디어대회 및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교류	444	57	501	492	-	9	110.8	98.2
1.3 한-아프리카 중소기업 협력 강화	205	△89	116	116	-	-	56.6	100
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882**	**-**	**882**	**816**	**-**	**66**	**92.5**	**92.5**
2.1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및 청년교류 활성화	312	△30	282	264	-	18	84.6	93.6
2.2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육성 교육	270	30	300	291	-	9	107.8	97.0
2.3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아프리카동창회,Af-PRO)	39	-	39	15	-	24	38.5	38.5
2.4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등 사회문화 인식제고	261	-	261	246	-	15	94.3	94.3
3.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562**	**-**	**562**	**551**	**-**	**11**	**98.2**	**98.2**
3.1 아프리카관련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	291	△36	255	250	-	5	85.9	98.0
3.2 연례국제학술회의(서울아프리카 대화) 및 연구증진	271	36	307	301	-	6	111.1	98.0

라. 검토의견

1) 총괄

□ 결산보고서 상 감사의견서 미첨부에 따른 투명성·신뢰성 저해

한·아프리카재단은 「한·아프리카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동법 제19조[101]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한-아프리카재단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는 재단 감사의 의견서가 누락[102]되어 있음.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103] 하고 있으며, 감사는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9조제3호[104]에 따라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감사 의견을

---

101) **「한·아프리카재단법」**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2) 한·아프리카재단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Ⅶ. 감사의견서 부분(55p)
- 감사의견서는 비상근감사가 2024년 1월 31일자로 사직한 이후 후임 감사가 임명되지 않아 현재 비상근 감사직이 공석인 관계로, 한・아프리카재단의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03) **「한·아프리카재단법」**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한·아프리카재단 정관」
제12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상근이사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상근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작성하여야 함.

재단에 따르면 직전 감사가 2024년 1월 31일자로 사직한 이후 현재까지 감사직이 공석 상태임.

감사 의견서의 누락은 재단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감사 임명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회계연도 동안 감사가 궐원(闕員) 상태로 유지되어 결산 시 감사의견서를 첨부할 수 없었던 것인바, 명백한 임명 지연에 따른 관리 책임이 외교부에 있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검증받는 핵심 절차가 결여된 것으로, 공익법인으로서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한편, 재단의 「감사규정」은 감사의 보조기관으로 검사역을 두도록 규정[105]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감사 공백 기간 동안 검사역 또한

---

104)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105) **「감사규정」**
제7조(감사의 보조기관 등) ①이사장은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검사역을 두며, 비상근감사는 결산검사 및 중요사항을 제외한 업무는 검사역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검사역의 임용 및 전보 시에는 감사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검사역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보하여야 한다.
1. 재단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 및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2. 기타 감사가 검사역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검사역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수습 또는 조건부로 임용 중인 자
4.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결산 검토를 보완할 수 있는 내부 감사 기능이 전무한 상태에서 결산보고가 이루어진 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 임명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결산 시기 이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체계를 철저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단 차원에서도 검사역 등 내부 감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 운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특근매식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방식 개선 필요

2024회계연도 한-아프리카재단의 특근매식비 배정액 및 집행액은 총 4만원으로 초과근무 실적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편성 및 집행액이라고 하겠음.

<최근 5년간 특근매식비 배정액 집행액>

(단위: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1,000	152	1,000	702	1,000	829	2,000	1,109	40	40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2024년도 재단 초과근무 현황>

부서명	인원(명)	초과근무 인정시간 계	비고
경영기획실	4	460시간 14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 등
운영지원실	5	260시간 33분	2024 국정감사 준비, 계약/입찰 관련 업무 등
교류협력부	4	481시간 35분	결산업무, 출장 및 포럼 준비 등
조사연구부	6	307시간 21분	아프리카 통신원 자료 작성, 서울-아프리카대화 준비 등
교육홍보부	7	665시간 43분	2024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개최, 아프리카 외교관 역량강화 특별연수 실시 등
합 계	26	2,175시간 26분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단은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위해 특근매식비(1만원)를 사용하면,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집행방식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관행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특근매식비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함.

특근매식비 집행액이 저조한 데 대해 재단은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 공제를 피하기 위해 식사를 하지 않고 특근매식비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함.

실제 제도상으로는 특근매식비를 지급받을 경우 공제되는 시간외 수당은 30분 분량으로, 총 보상 측면에서 특근매식비 수령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식사를 생략하고 수당 전액을 수령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특근매식비 예산이 연말에 불용되고, 이를 근거로 차년도 배정 예산이 대폭 축소(2024년 4만원 편성)되는 악순환

이 이어지고 있음. 이는 본래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를 위한 특근매식비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 운영 왜곡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짐.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경우 특근매식비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해당 기관은 직원이 식사를 위해 특근매식비를 수령한 경우,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 복지 제공과 예산 집행의 일관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음.

이에 재단은 특근매식비 제도의 실질적 취지가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안내 강화 및 내부 운영지침 정비, 실제 수요 기반의 예산편성 기준 마련, 유사기관의 운영사례 검토를 통한 합리적 집행방식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 필요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아프리카동창회, Af-PRO)' 사업은 국내 아프리카 관련 전문가 및 유경험자들을 분야별로 조직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프리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간담회 개최, 에세이집 발간, 강연회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정례적으로 편성·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의 집행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예산액 대비 53.6%, 38.5%의 낮은 집행률을 기록함.

<최근 5년간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전년이월	전용 등					
2020	67	-	-	67	44	-	23	65.7
2021	67	-	-	107	99	-	8	147.8
2022	67	-	-	210	183	-	27	273.1
2023	67	-	-	67	36	-	31	53.7
2024	39	-	-	39	15	-	24	38.5

재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사업 추진방식을 개편하면서 에세이집 발간을 중단하고 파일럿 형태의 강연회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연례간담회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그런데, 2024년 강연회는 12월 18일 아프리카 관련 도서 저자 2인을 패널로 초청해 현지 경험과 아프리카 가치·철학, 한-아프리카 관계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온라인 참석자 35명, 오프라인 참석자 25명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으며, 연간 1회 개최가 전부임.

<2024 국내아프리카전문가(Af-PRO) 강연회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17:00 - 17:30	▶ 참가자 등록 및 온라인 접속 확인 - 현장 조기 등록하는 선착순 20명 대상 금번 강연회 패널 2인의 도서 제공
17:30 - 18:20	▶ 본인 소개 및 아프리카 경험담 공유 - (사회) 설재우 스몰데이즈 대표 / EBS 세계테마기행 "나미비아 대장정" 편 출연 - (패널) 강행구 前 나이지리아 라고스 총영사 / 저서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찾다" - (패널) 김성진 연합뉴스 우분투추진단 우분쿠콘텐츠팀장(前 연합뉴스 요하네스버그 특파원) / 저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읽다"
18:20 - 18:30	▶ 질의응답 및 폐회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또한 자체 평가 결과에서도 강연회 운영 방식 확정이 지연되며 일정관리와 사업수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된바, 향후에는 강연회 개최 시기, 방식 및 협업 기관 등을 보다 조기에 확정하고,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사업'의 집행 부진은 단순한 추진방식 전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동창회원 등 대상자 관리의 미흡, 콘텐츠 활용 계획 부족, 낮은 대국민 접근성과 파급력, 홍보전략 부재 등 기획과 운영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이에 재단은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자 관리 체계 정비, 프로그램 기획력 강화, 사전 홍보 확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강연회 일정 및 협업 방식의 조기 확정,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 등 체계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Ⅲ. 국제교류기금 결산

1. 총 괄

국제교류기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106]에 따라 설치되어 재단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있으며, 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외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가. 수 입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재원[107]은 국제교류기여금[108],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과 그 밖의 기금운용 수

---

10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③ <삭 제>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10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익금으로 조성됨.

2024년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은 총 1,565억 6,700만원이었으나, 계획 대비 153.4% 수준인 2,401억 9,3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수입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B)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 (B/A)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56,567**	**240,193**	**240,193**	**153.4**	**-**	**-**
자체수입	74,838	101,393	101,393	135.5	-	-
정부내부수입	28,840	-	-	-	-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52,889	138,799	138,799	262.4	-	-

당초 계획대비 수입이 초과 발생한 주요 원인은 자체수입 및 여유자금회수의 증가에 있으며, 자체수입[109](국제교류기여금, 기부수입,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은 계획 대비 135.5% 수준인 1,013억 9,300만원이 수납되었음. 특히 자체수입 중 민간출연금이 당초계획액 20억 1,300만원 대비 1,501.2%에 해당하는 302억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 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109) 자체수입액

구분	내용	금액
국제교류기여금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으로부터 모금(법정부담금)	683억 1,300만원
기부수입	국내법인 또는 개인이 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품	302억 1,800만원
이자수입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입	18억 8,600만원
기타 잡수입	재단이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판매대, 구독료 및 행사 관련 지원금 환입액 등	9억 7,500만원
합 계		1,013억 9,300만원

1,800만원으로 크게 증가[110]하면서, 자체수입 초과의 주된 요인이 되었음.

재단은 2022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음에 따라 그에 따른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은 발생하지 않음.

나. 지 출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지출부문 현황을 보면, 총 지출액은 2,401억 9,300만원으로 계획대비 153.4%를 집행하였고, 사업비는 810억 1,300만원으로 계획대비 150%를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영비[111](기관운영 경비)는 146억 3,200만원으로 계획대비 99.6%를 집행하였음.

< 지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56,567	185,244	240,193	153.4	-	71,739
사업비	54,017	82,694	81,013	150.0	-	1,681
기금운영비	14,690	14,690	14,632	99.6	-	58
정부내부지출[112]	70,000	70,000	-	-	-	70,000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여유자금운용	17,860	17,860	144,548	809.3	-	-

110) 한국 미술 전시 및 프로그램 사업($7,000,000, 이○○),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7,500,000, 정○○) 등에 총 29건, $21,410,204.69 규모의 기부 수입 발생

111) 기금운영비 : 임직원 인건비, 국제교류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112) 동 지출항목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액임. 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재단의 기금적립금 상황을 고려하여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공자기금 예탁금액을 편성함. 단, 실제 예탁계획 제출 시 기금 상황에 따라 예탁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여유자금 운용액은 1,445억 4,800만원으로 계획액 178억 6,000만원 대비 809.3%를 집행하였음. 집행률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재단의 2022년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113]에 따른 자산 이관 등의 사유에 의한 것임.

113) '완전위탁형'이란 말 그대로 기금 운용을 전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자산운용사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재단이 일부 직접 운용, 일부는 외부에 위탁하는 혼합형 구조였음. 재단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으로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연기금투자풀(Government Reserve Fund Pool)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면 위탁(완전위탁)함.

※ 완전위탁형 도입 관련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 및 결과

- (2021.7-9월) (KF) 완전위탁형 도입 관련 내부 검토
- (2021.9월) (기재부) 완전위탁형 참여 여부 조사
- (2021.10월) (KF) 기금운용심의회(이사회) 개최를 통한 제도 도입 의결

※ 관련 조문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4. "연기금투자풀"이라 함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로구성된 투자체계를 말한다.

다. 기금 재정 변동 상황

국제교류기금의 2024년도 자산은 889억 9,200만원으로 전년 839억 3,400만원 대비 50억 5,800만원(6%)이 증가하였음. 자산 증가의 주요인은 국제교류기금 운용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기금 재정상태[114] 변경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증감액(A-B)	전년도 대비 증감 비율 (A-B)/B
자산[115]	88,992	83,934	5,058	6.0 %
부채[116]	238	243	(5)	(2.1 %)
순자산[117]	88,754	83,691	5,063	6.0 %

2024년도 부채는 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4,300만원 대비 500만원(△2.1%)이 감소하였음. 부채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카드 미지급금[118]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114)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 지침」**, 기획재정부, p4
재정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재정상태표는 민간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와 같은 것이며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재무제표이다.

115) 자산(Assets) :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국가회계실체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되고, 미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거나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116) 부채(Liabilities)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됨.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117) 순자산(net assets)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을 말하며,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함.

118) 법인카드는 당월 사용분이 익월 15일에 결제되므로, 12월 사용분은 익년 1월 15일에 결제되며, 이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됨. 당해 연도 12월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미지급금 역시 소폭 감소한 것임.

2024년도 순자산은 887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836억 9,100만원 대비 50억 6,300만원(6%)이 증가하였음. 순자산 증가는 국제교류기여금 운용 수익 증가에 따른 것임.

라. 재정운영 변동 상황

국제교류기금의 2024년도 프로그램 순원가[119]는 전년도 733억 6,800만원 대비 179억 3,600만원이 증가(24.4%)한 913억 4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민간 지정 기부금 사업 집행의 증가 때문임.

<기금 재정운영[120] 변경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금 액(A-B)	증감 비율 (A-B)/B
Ⅰ.프로그램순원가	91,304	73,368	17,936	24.4
Ⅱ.관리운영비	4,998	4,868	130	2.7
Ⅲ.비배분비용	9	22	(13)	(59.1)
Ⅳ.비배분수익	6,945	2,363	4,582	193.9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89,365	75,895	13,470	17.7
Ⅵ.비교환수익 등	96,192	78,169	18,023	23.1
Ⅶ.재정운영결과(Ⅴ-Ⅵ)	(6,827)	(2,274)	(4,553)	(200.2)

관리운영비[121]는 전년도 48억 6,800만원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2.7%)

119) **「원가계산준칙」**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14호,
제14조(프로그램순원가) ①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징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2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21) 제15조(관리운영비) ①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② 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그 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함.

한 49억 9,8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것임.

비배분비용[122]은 전년도 2,200만원 대비 1,300만원이 감소(△59.1%)한 9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연말 환율상승으로 인해 외화평가손실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임.

비배분수익[123]은 전년도 23억 6,300만원 대비 45억 8,200만원이 증가(193.9%)한 69억 4,500만원으로, 이는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비교환수익[124]은 전년도 781억 6,900만원 대비 180억 2,300만원이 증가(23.1%)한 961억 9,200만원으로, 민간의 지정 기부금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재정운영결과는 △22억 7,400만원 대비 △45억 5,300만원 증가한 △68억 2,700만원임.

---

* 항목 :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여비 등

122) 제17조(비배분비용) ①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②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평가손실, 2. 자산감액손실, 3. 자산처분손실, 4. 이자비용, 5. 기타비용 등**

123) 제18조(비배분수익) ①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② 비배분수익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수익, 2. 평가이익, 3. 감액손실 환입, 4. 자산처분이익 등**

124)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 지침」**, 기획재정부, p.59
비교환수익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말함.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

마. 주요사업 개관

재단의 주요사업인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글로벌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네트워킹」, 「문화교류협력강화」, 「지정기부금 운영」, 「국제교류정보화」로, 총 5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총 계획액 1,565억 6,700만원 중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등 외교행정지원 계획액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 운용 계획액을 제외한 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주요사업인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계획액은 540억 1,700만원이고, 이 중 계획액의 150%에 해당하는 810억 1,300만원이 집행됨.

주요사업 계획액 집행내역(총액 대비 비율)은 '지정기부사업' 303억 8,300만원(37.5%), 인적교류 관련사업 및 정책연구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 「국제협력네트워킹」 사업 202억 7,500만원(25%),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 및 한국전문가 육성 등 한국학 관련 사업 177억 3,700만원(21.9%), 「문화교류협력강화」 사업 98억 400만원(12.1%),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28억 1,200만원(3.5%) 순으로 각각 지출되었음.

< 국제교류기금 주요사업 개관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 결산	2024			2025 계획액
				계획액(A)	결산(B)	B/A	
계			63,126	54,017	81,013	150.0	42,363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63,126	54,017	81,013	150.0	42,363
	[2632] 글로벌 한국학 진흥		17,947	19,634	17,737	90.3	14,773
		[401] 한국학기반확대	17,947	19,634	17,737	90.3	14,773
	[2633] 국제협력네트워킹		21,162	19,497	20,275	104.0	15,339
		[401] 글로벌인적교류	5,430	3,850	3,996	103.8	2,200
		[402] 정책공공외교강화	9,239	8,474	10,626	125.4	7,343
		[403] 공공외교기반확대	2,167	2,048	1,219	59.5	1,342
		[404] 글로벌 협력 강화	4,326	5,125	4,434	86.5	4,454
	[2634] 문화교류협력강화		12,055	10,361	9,804	94.6	7,683
		[401] 한국문화해외확산	6,572	5,507	5,413	98.3	3,765
		[402] 글로벌문화교류	5,482	4,854	4,390	90.4	3,918
	[2635] 지정기부금운영		9,196	1,759	30,383	1,727.3	1,802
		[401] 지정기부사업	9,196	1,759	30,383	1,727.3	1,802
	[2636] 국제교류정보화		2,766	2,766	2,812	101.7	2,766
		[401]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	2,766	2,766	2,812	101.7	2,766

2. 검토의견

가. 수 입

□ **기여금 요율 인하에 따른 법정부담금 및 적립금 감소에 선제적·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재단의 주요 수입원인 국제교류기여금(법정부담금)은 기여금 요율 인하[125]로 인하여 향후 수입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 회복의 영향으로 2023년도 기여금 수입은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소폭(1.16%) 상승하였음.

< 최근 10년간 법정부담금 권종별 수납건수 및 금액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복수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합계	
	10년 (15,000원권/$15)		5년 (12,000원권/$12)		1년이내 (5,000원권/$5)		임시 여권 (2000원권/$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2,106,229	31,620	434,713	5,226	155,051	777	6,277	13	2,702,270	37,636
2015	2,672,060	40,132	568,884	6,849	152,751	767	6,222	13	3,399,917	47,761
2016	2,944,374	44,277	555,874	6,708	131,402	663	5,921	13	3,637,571	51,661
2017	3,661,835	55,048	756,548	9,109	141,051	711	6,742	15	4,566,176	64,883

125)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3.27.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2024.6.4.)

※ 시행령 개정(2024.7.1.시행) 전·후 비교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복수여권 10년	15,000원	**12,000원**
복수여권 5년	12,000원	**9,000원**
단수여권	5,000원	**면제**
여행증명서	2,000원	**면제**

구분	복수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합계	
	10년 (15,000원권/$15)		5년 (12,000원권/$12)		1년이내 (5,000원권/$5)		임시 여권 (2000원권/$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3,461,947	52,032	695,101	8,363	116,405	586	7,885	17	4,281,338	60,998
2019	3,416,277	51,484	617,310	7,445	93,060	472	8,763	20	4,135,410	59,421
2020	1,035,431	15,738	182,181	2,223	22,596	117	3,856	9	1,244,064	18,087
2021	515,083	7,891	84,055	1,050	4,260	23	803	2	604,201	8,966
2022	1,721,317	26,090	224,042	2,764	12,841	68	773	2	1,958,973	28,924
2023	4,037,946	60,821	524,888	6,365	65,784	339	1,237	3	4,629,855	67,528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 2024회계연도 법정부담금 권종별 수납건수 >

복수여권(10년)		복수여권(5년)		단수 여권*	여행 증명서*	건수 합계	금액 (백만원)
요율 인하前	요율 인하後	요율 인하前	요율 인하後				
2,451,359	1,641,976	646,075	394,151	41,812	751	5,176,124	**68,313**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2024.7.1.이후 면제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편, 2024년에는 민간출연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지정기부사업 형태로,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임. 민간출연금은 외부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재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부담금 수입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함. 여권 수요에 따라 산정되는 기여금 수입은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이 있으며, 여전히 재단 수입 구조의 중심축이자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 수입결산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년				2025계획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총 계	210,812	199,318	156,567	185,244	240,193	129.7	**105,908**
기타재산이자수입	818	2,208	2,730	2,730	1,886	69.1	2,730
법정부담금	28,924	67,528	69,595	69,595	**68,313**	98.2	**54,470**
민간출연금	6,811	8,970	2,013	30,690	**30,218**	98.5	**2,013**
기타잡수입	654	712	500	500	975	195.0	50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5,077	119,899	52,889	52,889	138,799	262.4	45,860
기금예탁원금회수	78,070	-	28,000	28,000	-	-	-
기금예탁이자수입	458	-	840	840	-	-	335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최근 10년간 기금 적립금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전년도인 2019년(186,339백만원)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4년에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함. 2024년에는 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고, 지출은 다소 감소하면서 적립금이 2023년보다 소폭 증가함. 다만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금운용 전략 마련이 필요함.

과거 코로나19 이전(2015~2018년)에는 수입액이 지출액을 상회하여 적립금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면서 적립금이 감소세로 전환됨. 특히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은 수입액이 급감한 반면 지출액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적립금이 급격히 줄었음.

< 최근 10년간 기금 수입, 지출 및 적립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51,675	53,703	76,811	67,215	64,372	24,326	16,993	30,855	70,449	71,175
지출	45,884	46,680	49,581	57,415	65,556	55,886	62,421	65,564	68,704	65,261
적립금	**142,746**	**155,701**	**176,218**	**183,631**	**186,339**	**154,540**	**108,382**	**72,471**	**68,396**	**76,369**

※ 작성기준
- 수입: 자체수입(국제교류기여금, 운용 이자수입, 잡수입, 단, 지정기부금(민간출연금) 제외)
- 지출: 사업비(지정기부사업 제외), 기금운영비
- 적립금: 여유자금운용 기말 잔액(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포함)

이러한 재정상황의 근본 원인은 수입 급감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기여금 요율 인하에 따라 법정부담금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제한된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출 구조의 면밀한 점검과 조속한 개편 방안 마련이 요구됨.

나. 지 출

1) 총 괄

□ 조속한 지출 구조 조정 방안 마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노력 필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20% 이내 변경시에는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변경시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이는 예산에 비해 지출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국가재정법 시행령」[126]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127]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이 과다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재단은 2024년 총 5차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

12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127)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유의사항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요항목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과다하게 확대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증액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

연번	변경 보고 사유	변경 보고일
1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5.29.
2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8.27.
3	민간출연금 초과수입이 예상되어 관련된 수입 및 지출액 변경	11.19.
4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12.13.
5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12.23.

※자료: 재단 제출공문을 바탕으로 재작성

5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중 4차례는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변경이며, 1차례는 민간출연금 초과 수입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소요 반영을 위한 것으로, 수입 및 지출 규모를 조정한 것임.

이러한 변경 중 제3차 변경을 제외하고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28]에서 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재단은 기여금 수입 감소와 적립금 급감이라는 재정 여건 악화에 직면하여, 2024년도에 사업별로 빈번한 자체변경을 실시하였으며, 그 사유 대부분이 사업 구조조정 또는 사업 내용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128)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준수사항
◦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해당되는지 여부
-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긴급한 소요인지 여부
-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사업의 추진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기타 다른 사업과 중복 여부 등

이는 재단이 지출 구조 조정 및 사업 재설계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중이라고 보여짐.

따라서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확대·유지·축소·폐지 등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기획과 심층 검토를 강화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함께 제고하여야 함.

2) 국제협력네트워킹

「국제협력네트워킹」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글로벌 인적교류」는 해외유력인사 초청을 통해 각국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 및 지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차세대지도자교류를 통해 미래 지도층 청년과의 상호 교류로 양국 간 우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정책공공외교강화」는 해외정책연구소 지원을 통해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한미 동맹 발전과 대미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공공외교 기반확대」는 국민공공외교활동을 통해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공공외교아카데미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국민의 이해도 및 참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글로벌 협력강화」는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소통과 인적 네

트워크를 강화하고,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운영을 통해 對중앙아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외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도 계획액은 194억 9,7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으로 14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계획현액은 209억 2,000만원이고, 202억 7,500만원이 집행됨.

< 국제협력네트워킹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자체변경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글로벌 인적교류	3,850	4,062	-	212	-	4,062	3,996	-	66	2,200
정책공공외교강화	8,474	10,656	-	2,182	-	10,656	10,626	-	30	7,343
공공외교 기반확대	2,048	1,530	-	△518	-	1,530	1,219	-	311	1,342
글로벌 협력강화	5,125	4,672	-	△453	-	4,672	4,434	-	238	4,454
계	19,497	20,920	-	1,423	-	20,920	20,275	-	645	15,339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 과거 유사 사업의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IISS 코리아체어'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및 효과성 제고 필요

재단은 세부사업「정책공공외교강화」내 '해외정책연구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12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에 코리아체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129]하기 위해 총 175만달러를 집행하였음.

129)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국방·안보 분야 싱크탱크로서, 핵 억지 및 군비 통제 분야 연구 전문기관임. 1958년 영국에서 설립되어 현재는 런던 본부를 중심으로 워싱턴, 바레인, 싱가포르에 지부를 두고 있음. 2025.1.20. 싱가포르에서 IISS 코리아체어 설치를 위한 기관 간 서명식이 개최되었으며, 재단의 IISS 코리아체어는 유럽 정책연구소 내 최초로 설치되는 영구 석좌직임. 앞으로 한국과 영국 및 유럽간 군사·안보 분야 정책 연구,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 초청 행사, 마나마대화, 샹그릴라대화 등 주요 국제안보회의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KF 보도자료, 2025.1.23.)

< 영국 IISS 코리아체어(한국 연구 석좌식) 설치 및 운영 예산집행 내역 >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
2024.12.16.	체어 설치 기금(1/3차)	$800,000
	초기 운영비	$150,000
2024.12.24.	체어 설치 기금(2/3차)	$800,000
합계		**$1,750,000**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해외정책연구소지원' 사업의 비목별 예산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재단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130]을 통해 해당 사업의 재원을 마련함.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계획액 당초	2024년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5년 계획액
· 해외정책연구소지원	2,398	5,262	5,262	5,251	11	2,249
-해외경상이전(340-01)	**2,110**	**5,047**	5,047	**5,039 (96%)**	8	2059
-국외업무여비(220-02)	157	134	134	133	1	119
-일반수용비(210-01)	49	42	42	42	-	29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	1	1	1	-	5
-임차료(210-07)	10	11	11	10	1	10
-일반용역비(210-014)	40	-	-	-	-	-
-국내여비(220-01)	6	20	20	19	1	6
-사업추진비(240-01)	21	7	7	7	-	21

이와 같이, 재단은 2024년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코리아체어를 신규 설치하면서 175만달러의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해 확보한 뒤 해외경상이전[131] 방식으로 집행하였는데,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

130) 타 사업(한국학강좌운영, 한국전문가육성, 한국이해저변확대, 한국지식문화보급)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절감 재원을 해당 코리아체어 설치·운영에 전환하여 집행함.(2024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1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침」[132]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재단은, 예산 편성 이후인 2024년 하반기에 영국 IISS 내 코리아체어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양 기관(KF, IISS) 간 합의가 타결되었고, 이에 따라 지원금이 확정되어 12월에 지급되었다고 설명함. 이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사업 확정 간의 시차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임.

한편, 재단은 2017년 12월 미국 랜드연구소에 코리아체어를 설치하였으나, 석좌 채용절차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2019년 6월 채용된 초대 석좌가 1년여 만에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발생하였고, 후임자 임용도 2021년에야 이루어지는 등 사업 운영에 지속적인 차질이 있었던바[133],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과거 유사 사업의 한계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임.

< 美 랜드연구소 내 한국 석좌 현황 >

	구분	임용 기간
1	1대 석좌	2019.9.~2020.8.
2	2대 석좌	2021.7.~2023.7.
3	3대 석좌	2024.5.~現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또한, 랜드연구소의 실제 석좌 임용 현황을 보면, 10개월 및 9개월간 각각

132)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15
2.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준수사항
② 기금운용계획변경시 내용 관련 유의사항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요항목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133) 2020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 p291~292

공석이 지속되었고, 후속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였음. 이처럼 장기간의 공백이 반복되면서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적 연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의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IISS 코리아체어 사업의 경우, 재단은 24년 12월 집행예정이던 1차 기금 및 운영비에 더하여, 당초 2026년 2월 지급 예정이던 2차 기금까지 조기집행하였는데, 이는 2024년 3월 정부 부담금 정비로 인해 재단의 전체 사업예산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사업비 절감분 일부를 활용하여 조속히 집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나, 동 사업이 조급히 추진된 데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향후 재단은 IISS 코리아체어 설치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사업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체계를 갖추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3) 문화교류협력강화

「문화교류협력강화」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문화해외확산」은 재외공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 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한국문화교류확대' 사업, 해외 주요 박물관에 한국 소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해외박물관 한국문화 활성화' 사업, 한국을 소개하는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작·배포하여 한국에 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는 '한국소개자료발간' 사업, 해외 대학,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한국 관련 연구 자료 및 '한국문화 복합홍보관' 코리아코너 개설 등을 지원하는 '한국지식문화보급' 사업으로 구성됨.

< 문화교류협력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한국문화해외확산	5,507	5,501	-	△6	-	5,501	5,413 (98.3%)	-	88	3,765
글로벌문화교류	4,854	4,668	-	△186	-	4,668	4,390 (90.0%)	-	278	3,918
계	**10,361**	**10,169**	**-**	**△192**	**-**	**10,169**	**9,803 (96.4%)**	**-**	**365**	**7,683**

「글로벌문화교류」는 글로벌센터에서 주한공관, 외국 문화원 등과의 협력을 통한 쌍방향 문화예술사업을 시행하는 '글로벌센터' 사업, 한국과 아세안을 잇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한-아세안간 문화·학술·인적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아세안문화원' 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계획액은 총 103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자체변경으로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여 계획현액은 101억 6,900만원이고, 98억 300만원이 집행됨.

□ 「거리의 서」 전시 사업 관련 동일사업 내 용역계약 분할 및 집행 부적정에 따른 계약관리 개선 필요

재단은 2024년 광주비엔날레(GB) 30주년을 계기로 한·아세안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KF-GB 한·아세안 작가 협력 기획전「거리의 서(書)」'[134]를 추진하였음. 동 전시는 서울 KF갤러리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파빌리온에서 동시 개최되었으며, 이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의 순회전으로 연계됨.

< 「거리의 서」 전시 개요 >

사업명	주최	기간	장소	집행액(원)
KF-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거리의 서> Part 1	KF, 광주비엔날레	9.6.-10.18.	KF갤러리	85,127,220
KF-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거리의 서> Part 2	KF, 광주비엔날레	9.7.-12.1.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67,737,756
KF-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거리의 서> Part 3	KF, KF아세안문화원, 광주비엔날레	'24.12.13.-'25.3.14.	KF아세안문화원	69,836,060

(자료: 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34) 재단과 (재)광주비엔날레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주제로 한 협력 기획전 「거리의 서(書), The Book of Distance」를 공동 주최함.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2024.7.31.)을 바탕으로 기획된 동 전시는, KF갤러리(서울)와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광주)에서 각각 한·아세안 현대미술 작가(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총 13팀의 작품을 선보였음.(출처: KF 보도자료, 2024.9.4.)

2024년 9월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개최되고, 12월에 부산에서 순회 개최된 「거리의 서」 전시 사업은 동일한 기획 의도, 출품진, 행사 목적 및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는 계속성·일련성 있는 단일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동일 기획 하에 출품진과 주요 내용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수의계약보다는 통합계약 또는 일괄공모 방식의 추진이 행정 효율성과 계약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업체와 연속하여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계약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입찰을 통한 경쟁·심사·공개 절차를 회피하려는 취지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사업 관리에 비효율 초래, 책임소재 불명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거리의 서」 전시를 위한 용역계약체결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	계약 방법	비목	계약기간	계약 금액	계약업체	수의사유
1	<거리의 서> 전시 작품 설치 용역	수의	**일반 수용비**	8.29. - 9.6.	21,900	에이비군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	<거리의 서> 전시 공간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위탁용역	수의	**일반 수용비**	8.29. - 9.13.	40,000	㈜프론트킷	여성기업.
3	<거리의 서> 전시 진행 위탁용역	수의	**일반 수용비**	9.2. - 9.11.	45,730	**㈜아인아**	여성기업
4	<거리의 서> 부산 순회전시 조성 및 설치 용역	수의	일반 용역비	12.5. - 12.13.	33,750	**㈜아인아**	여성기업
5	<거리의 서> 부산 순회전시 작품 운송 및 설치 용역	수의	일반 용역비	12.5. - 12.13.	9,745	㈜아트 스퀘어무빙	추정가격2 천만원이하
합 계					151,125		

※자료: 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재단은, 「거리의 서」 일련의 전시는 서울·광주 전시와 부산 전시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담당 부서도 상이하고 구성 작품에도 일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또한 부산 전시는 아세안문화원의 2025년 사업으로 별도 기획되어 2024년 12월에 미리 개막한 것이라고 함.

이에 따라, 동일 업체와 연속으로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예산 집행 주체가 달라 계약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일부 전시 내용이 중복되어 기존 시행사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설명임.

그러나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기존 업체의 이해도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반복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용역 계약 각각의 업무 수행범위를 살펴보면, 과업 구분이 모호하거나 일부는 중첩됨을 확인할 수 있음.

< 「거리의 서」 전시 관련 용역 수행 범위 비교 >

전시 작품 설치	전시 공간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전시 진행	부산 순회전시 조성 및 설치	부산 순회전시 작품 운송 및 설치
·작품 설치(230여점) ·시트지 작업 ·재료 준비 및 폐기물 처리	·전시 홍보물 디자인 ·전시 디자인 ·구조물(벤치, 가벽 등) 제작	·작품 설치(18점) ·전시 공간 조성 (암실 조성 및 현장 시공) ·위탁 운영(전시 연계행사 등)	·작품 픽업 ·전시실 조성 ·작품 및 장비 설치 (철거 포함)	·국내외 작품 운송 (광주-서울-부산, 부산-서울-필리핀 등) ·작품 포장, 운송, 반입 및 설치

※자료: 재단 제출자료(계약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산 순회전시를 위한 두 건의 계약도 ‘조성 및 설치’와 ‘운송 및 설치’라는 작업 단위별로 각각 계약하였는데, 하나의 전시 행사 완성을 위한 용역으로서 본질적으로 연계된 용역을 인위적으로 작업 단위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재단은 ‘조성 및 설치’는 서울·광주 전시의 동일한 전시품 조성과 미디어 장비 설치 등 전시 실행에 관한 계약이며, ‘운송 및 설치’는 서울·광주 전시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작가의 별도 작품들을 일괄 보험 적용하여 운송 시점부터 설치, 철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과업을 맡은 사안으로, 구체적으로는 상호 간 명확히 내용이 구분된 계약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운송 및 설치 대상이 서로 다른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작품 운송’과 ‘전시 설치’라는 동일한 유형의 용역 수행에 있으며, 작품의 구성 차이 자체가 계약을 분리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려움.

또한, 「거리의 서」 서울·광주 전시의 경우, 예산과목을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음.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및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Ⅳ. 국제질병퇴치기금 결산

1. 총 괄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음.

동 기금은 한국국제협력단(국제질병퇴치기금팀)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질병 예방·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었음.

가. 수 입

「국제질병퇴치기금법」[135]에 따른 기금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136]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도 그 재원으로 명시되어 있음.[137]

---

135) 폐지되었음.

13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항공기 좌석 등급에 구분이 있는 경우 상위 등급의 좌석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
3. 기금운용수익금

< 수입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징수 결정액	수입액		계획액 대비 수입액비율
			24년	23년	
합 계	102,236	96,828	96,542	41,622	94.4
기타재산수입	130	541	541	330	416.2
법정 부담금	41,035	40,625	40,339	29,383	98.3
기타 경상이전 수입	14	-	-	110	-
기금 예수금	52,010	52,010	52,010	10,000	10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138]	9,047	3,652	3,652	1,799	40.4

2024년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은 총 1,022억 3,600만원, 징수결정액은 968억 2,800만원이며, 계획액의 94.4% 수준인 965억 4,200만원이 수납되었음.

138) 2019년 연중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수입과목을 신설한바, 이는 2017년도 외교통일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지적에 대한 조치로 2019년 1/4분기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여유자금을 중장기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조치임.

나. 지 출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지출부문 현황을 보면,

총 지출액은 965억 4,200만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94.4%를 집행하였고, 사업비는 912억 1,300만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99.9%를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영비[139]는 4억 9,300만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65.9%를 집행하였음. 여유자금 운용은 지출계획 대비 43.0%인 32억원임.

< 지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집행률 (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B)	2023년			
합계	102,236	102,236	96,542	41,622	94.4	-	2,941
사업비	91,333	92,816	91,213	36,095	99.9	-	1,603
기금운영비	748	748	493	555	65.9	-	255
기금간거래	2,719	2,719	1,636	1,320	60.2	-	1,083
여유자금운용	7,436	5,953	3,200	3,652	43.0	-	

※ 여유자금운용(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과목은 불용을 특정하지 않는 예산과목임.

139) 기금운영비: KOICA 국제질병퇴치기금팀 인건비 및 기금 운용 위한 행정성 경비

다. 기금 재정상태 및 운영현황

2024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자산은 75억 2,600만원, 부채는 1,115억원이고, 순자산은 △1,039억 7,300만원임.

기금 재정운영순원가(929억 9,300만원)에서 부담금수익(409억 2,9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20억 6,400만원임.

< 2024년도 기금 재정상태 >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순자산
7,526	111,500	△103,973

< 2024년도 기금 운영현황 >

(단위: 백만원)

과 목	총원가	수 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140]	91,324	-	91,324
Ⅱ.관리운영비[141](인건비)	-	-	247
Ⅲ.비배분비용[142]	-	-	1,957
Ⅳ.비배분수익[143](이자수익)	-	-	534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92,993
Ⅵ.비교환수익[144](부담금수익)	-	-	40,929
Ⅶ.재정운영결과(Ⅴ-Ⅵ)	-	-	52,064

14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2호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141)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142) 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143) 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144)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

라. 사업 개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1개 프로그램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바, 동 프로그램은 국제질병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에는 당초 계획 913억 3,300만원의 99.9%에 해당하는 912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음. 각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NGO 등과의 민관협력사업을 위해 2,700만원,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위해 150억 8,200만원,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에 744억 4,000만만원,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으로 16억 6,400만원이 각각 집행됨.

<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개관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계획
				계획(A)	결산(B)	B/A	
[2400] 국제개발협력			36,095	91,333	91,213	99.9	-
	[2439] 질병퇴치사업		36,095	91,333	91,213	99.9	-
		[401]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92	159	27	17.0	-
		[402]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11,388	16,427	15,082	91.8	-
		[403]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23,254	73,026	74,440	101.9	-
		[404]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1,361	1,721	1,664	96.7	-

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2. 검토의견

□ 환율 변동으로 인한 GAVI 지원 미흡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은 국제감염병 퇴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제보건기구(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펀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소아마비퇴치기구(GPEI)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감염병 예방 및 퇴치에 기여하는 사업임.

한편,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동 사업을 통해 정부가 기여하고 있는 국제보건기구에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개별 국제기구들의 조달 절차를 통해 공급하고 있음[145].

외교부는 동 사업에 730억 2,600만원의 지출을 계획하였고, 744억원을 집행하였음.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A)	수정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73,026	74,440	-	74,400	-	-	100.0

145) 감염병백신연합(CEPI)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대조백신 확보 등을 위해 2.6억불 상당을 지원하였고, 셀트리온, SD바이오센서 등은 글로벌펀드 제6위 필수 의료품목 공급자이자 제3위 진단키트 공급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LG화학은 글로벌소아마비근절이니셔티브(GPEI)와 8천만불 상당의 소아마비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GAVI에 대한 지원은 당초 계획한 500만불 대비 23.6%인 118만불만 지원되었음.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만불 %)

세사업 명	사업 내용	원화 기준			미화 기준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계획액)
UNITAI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HIV/AIDS, 결핵, 말라리아를 중심으로 한 진단방법 간소화, 백신 및 의약품 보급, 의약품 가격 인하, 질병 발생 모니터링 등	6,505	6,505	100.0	500	469	93.8
GAVI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21-`25/3,000만불)	**어린이들의 생명보존에 필수적인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의약품 시장 형성, 의약품의 가격 인하, 의약품 및 백신 보급 등**	**6,505**	**1,734**	**26.7**	**500**	**118**	**23.6**
Global Fun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활동	공공·민간 재원 공동 조성을 통해 ATM(AIDS(에이즈),Tuberculosis(결핵), Malaria(말라리아)) 치료 및 예방약·물품 관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저가로 물품을 구매한 뒤 지원 대상 국가에 조달	32,525	36,216	111.3	2,500	2,500	100.0
CEPI 백신개발 및 비축을 통한 신종감염병 대비 사업	메르스·라싸열 등 신종감염병 백신·플랫폼 기술 개발, 비축 지원을 통한 신종감염병 대비	23,418	26,075	111.3	1,800	1,800	100.0
GPEI 소아마비퇴치활동	소아마비 발병 모니터링, 정기적 소아마비 예방접종 및 백신 보급 등	3,903	3,903	100.0	300	273	91.0
합 계		**72,856**	**74,433**	**102.2**	**5,600**	**5,160**	**92.1**

※ 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2025.2.), 외교부

이는 편성환율(1,300원) 대비 시장환율이 급등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외교부가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자 기금 계획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GAVI에 대한 지원이 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반영되지 못하여 당초 지원 계획을 온전히 달성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

로 생각됨.

<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계획 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협의변경 (2024.12.2.)	340	02	국제부담금	958	편성환율(1,300원) 대비 시장환율 급등으로 인해 1,400원/USD 적용
자체변경 (2024.12.12.)	210	01	일반수용비	△64	편성환율(1,300원) 대비 시장환율 급등으로 인해 1,430원/USD 적용
	240	01	사업추진비	△3	
	260	01	일반연구비	△96	
	340	02	국제부담금	642	
자체변경 (2024.12.20.)	340	02	국제부담금	△24	편성환율(1,300원) 대비 시장환율 급등으로 인해 1,460원/USD 적용

※ 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2025.2.), 외교부

환율 위험에 대한 대비 미흡은 국회의 시정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외교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146]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 운용과 같은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함.

146)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정부, p. 628

Ⅴ. 외교부 통합 재무결산 분석

1. 총 괄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한 「국가회계법」이 제정(2007. 9)되고, 결산보고서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국가회계법」ㄴ이 개정(2008. 12) 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는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모든 기금에 대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국회제출이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의무화되었음.

이하에서는 외교부 일반회계, 국제교류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통합재무제표를 분석하고자 함.

2. 재정상태표[147]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산	일반회계	5,359,453	5,252,750	106,703	2.0
	국제교류기금	88,992	83,934	5,058	6.0
	국제질병퇴치기금	7,526	7,411	115	1.6
	계	5,455,971	5,344,095	111,876	2.1
부채	일반회계	57,115	55,698	1,417	2.5
	국제교류기금	238	243	△5	△2.1
	국제질병퇴치기금	111,500	59,319	52,181	88.0
	계	168,853	115,260	53,593	46.5
순자산	일반회계	5,302,338	5,197,052	105,286	2.0
	국제교류기금	88,754	83,691	5,063	6.0
	국제질병퇴치기금	△103,973	△51,909	△52,064	100.3
	계	5,287,118	5,228,834	58,284	1.1

가. 자 산[148]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자산은 전년도 5조 2,527억 5,000만원 대비 1,067억 300만원(2.0%)이 증가한 5조 3,594억 5,300만원이며, 그 주요 증가요인은 재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인해 유형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자산은 889억 9,200만원으로 전년 839억 3,400

147)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148)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하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성자산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만원 대비 50억 5,800만원(6.0%)이 증가하였음. 자산 증가의 주요인은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펀드 전환에 따라 유동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자산은 75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74억 1,100만원 대비 1억원 1,500만원(1.6%)이 증가하였음. 자산 증가의 주요원인은 출국납부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임.

나. 부 채[149]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부채는 전년도 556억 9,800만원 대비 14억 1,700만원(2.5%)이 증가한 571억 1,500만원이며, 그 주요 증가사유는 퇴직급여충당금 추정액 증가에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부채는 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4,300만원 대비 500만원(△2.1%)이 감소하였음. 부채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카드 미지급금 감소로 미지급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부채는 1,115억원으로 전년도 593억 1,900만원 대비 521억 8,100만원(88.0%)이 증가하였음. 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수에 따른 것임.

149)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등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다. 순자산[150](=자산-부채)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순자산은 전년도 5조 1,970억 5,200만원 대비 1,052억 8,600만원(2.0%)이 증가한 5조 3,023억 3,800만원으로 재정운영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순자산은 887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836억 9,100만원 대비 50억 6,300만원(6.0%)이 증가하였음. 순자산 증가는 주로 투자증권평가손익에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순자산은 △1,039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519억 900만원 대비 520억 6,400만원(△100.3%) 감소하였음. 순자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수에 따른 것임.

150)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함.

3. 재정운영표[151]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4(A)	2023(A)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프로그램 순원가	일반회계	3,603,081	2,831,015	772,066	27.3
	국제교류기금	91,304	73,368	17,936	24.4
	국제질병퇴치기금	91,324	36,416	54,908	150.8
	계	3,785,709	2,940,799	844,910	28.7
Ⅱ.관리운영비	일반회계	242,283	233,528	8,755	3.7
	국제교류기금	4,998	4,868	130	2.7
	국제질병퇴치기금	247	277	△30	△10.8
	계	247,527	238,673	8,854	3.7
Ⅲ.비배분비용	일반회계	51	1	50	5,000.0
	국제교류기금	9	21	△12	△57.1
	국제질병퇴치기금	1,957	1,444	513	35.5
	계	2,017	1,466	551	37.6
Ⅳ.비배분수익	일반회계	236,474	274,716	△38,242	△13.9
	국제교류기금	6,945	2,363	4,582	193.9
	국제질병퇴치기금	534	334	200	59.9
	계	243,953	277,413	△33,460	△12.1
Ⅴ.재정운영 순원가(Ⅰ+Ⅱ+Ⅲ-Ⅳ)	일반회계	3,608,941	2,789,827	819,114	29.4
	국제교류기금	89,365	75,895	13,470	17.7
	국제질병퇴치기금	92,993	37,804	55,189	146.0
	계	3,791,300	2,903,526	887,774	30.6
Ⅵ.비교환수익 등	일반회계	-	-	-	-
	국제교류기금	96,192	78,169	18,023	23.1
	국제질병퇴치기금	40,929	30,925	10,004	32.3
	계	137,121	109,094	28,027	25.7
Ⅶ.재정운영 결과(Ⅴ-Ⅵ)	일반회계	3,608,941	2,789,827	819,114	29.4
	국제교류기금	△6,827	△2,274	△4,553	△200.2
	국제질병퇴치기금	52,064	6,879	45,185	656.9
	계	3,654,178	2,794,432	859,746	30.8

151)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임.(「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152]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의 소모액을 의미하며 정부회계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 소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외교부 프로그램순원가 산출단위는 총 17개의 프로그램임.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2조 8,310억 1,500만원 대비 7,720억 6,600만원(27.3%)이 증가한 3조 6,030억 8,1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국재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6,459억원,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에서 520억원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910억 400만원 대비 179억 3,600만원이 증가(24.4%)한 913억 4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주로 지정기부사업이 증가한데 기인함.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364억 1,600만원 대비 549억 800만원 증가(150.8%)한 913억 2,4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해외보조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152)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정부행정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함.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2,335억 2,800만원 대비 87억 5,500만원(3.7%)이 증가한 2,422억 8,3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인건비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의한 것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48억 6,800만원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2.7%)한 49억 9,8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주로 인건비 증가요인으로 인한 것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2억 7,700만원 대비 3,000만원이 감소(10.8%)한 2억 4,7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주로 출연비 감소에 따른 것임.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의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산처분 손실과 같이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을 의미함.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100만원 대비 5,000만원

(5,000.0%)이 증가한 5,100만원이며, 이는 주로 대손상각비 증가 및 기타비용 증가에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2,200만원 대비 1,300백만원이 감소(△57.1%)한 9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전년도 대비 외화평가손실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14억 4,400만원 대비 5억 1,300만원 증가(35.5%)한 19억 5,7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수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자산처분이익, 평가이익 등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함.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2,747억 1,600만원 대비 382억 4,200만원(13.9%)이 감소한 2,364억 7,4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지출금 반납금 감소에 따라 기타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23억 6,300만원 대비 45억 8,200만원이 증가(193.9%)한 69억 4,500만원으로, 이는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펀드 전환에 따른 투자증권평가손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3억 3,400만원 대비 2

억원이 증가(59.9%)한 5억 3,400만원으로, 이는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마. 비교환수익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함.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의 비교환수익은 2024년과 2023년 모두 발생하지 않았음.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교환수익은 전년도 781억 6,900만원 대비 180억 2,300만원이 증가(23.1%)한 961억 9,2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비교환수익은 전년도 309억 2,500만원 대비 100억원 400만원 증가(32.3%)한 409억 2,9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출국납부금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바.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153]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뺀 것을 의미함.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2조 7,898억 2,700만원 대비 8,191억 1,400만원(29.4%)이 증가한 3조 6,089억 4,100만원이며,

153)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은 뺀 액수를 의미함.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22억 7,400만원 대비 45억 5,300만원 감소한 △68억 2,700만원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68억 7,900만원 대비 451억 8,500만원 증가(656.9%)한 520억 6,400만원임.

4. 순자산변동표[154]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기초순자산	일반회계	5,197,052	5,084,243	112,809	2.2
	국제교류기금	83,691	78,530	5,161	6.6
	국제질병퇴치기금	△51,909	△45,030	△6,879	15.3
	계	5,228,834	5,117,743	111,091	2.2
Ⅱ.재정운영 결과	일반회계	3,608,941	2,789,827	819,114	29.4
	국제교류기금	△6,827	△2,274	△4,553	△200.2
	국제질병퇴치기금	52,064	6,880	45,184	656.7
	계	3,654,178	2,794,433	859,745	30.8
Ⅲ.재원의 조달 및 이전	일반회계	3,613,551	2,817,787	795,764	28.2
	국제교류기금	-	-	-	-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계	3,613,551	2,817,787	795,764	28.2
Ⅳ.조정항목	일반회계	100,676	84,848	15,828	18.7
	국제교류기금	△1,765	2,887	△4,652	-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계	98,912	87,735	11,177	12.7
Ⅴ.기말순자산(Ⅰ-Ⅱ+Ⅲ+Ⅳ)	일반회계	5,302,338	5,197,052	105,286	2
	국제교류기금	88,754	83,691	5,063	6
	국제질병퇴치기금	△103,973	△51,909	△52,064	△100.3
	계	5,287,118	5,228,834	58,284	1.1

154)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前期)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임.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기초순자산은 5조 1,970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28억 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 기초순자산은 836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 6,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은 △519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억 7,900만원 감소한 규모임.

나.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표에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회수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지표로 앞의 재정운영표에서 증감요인을 설명하였음.

다. 재원조달 및 이전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도 2조 8,177억 8,700만원 대비 7,957억 6,400만원이 증가한 3조 6,135억 5,100만원이며 이는 국고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임.

라.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의 조정항목은 전년도 848억 4,800만원 대비 158억 2,800만원 증가한 1,006억 7,6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가원인은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의 증가에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조정항목은 전년도 28억 8,700만원 대비 46억 5,200만원이 감소한 △17억 6,500만원으로, 주요 감소 원인은 투자증권평가손익 감소에 따른 것임.

마. 기말순자산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빼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하는 개념임.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5조 1,970억 5,200만원 대비 1,052억 8,600만원이 증가한 5조 3,023억 3,800만원이며,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836억 9,100만원 대비 50억 6,300만원이 증가한 887억 5,400만원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기말순자산은 △1,039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9억 900만원 감소한 규모임.

Ⅵ. 외교부 성과관리 분석

1. 총 괄

「성과관리제도」란 기존의 투입 · 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제6호에서는 성과관리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 · 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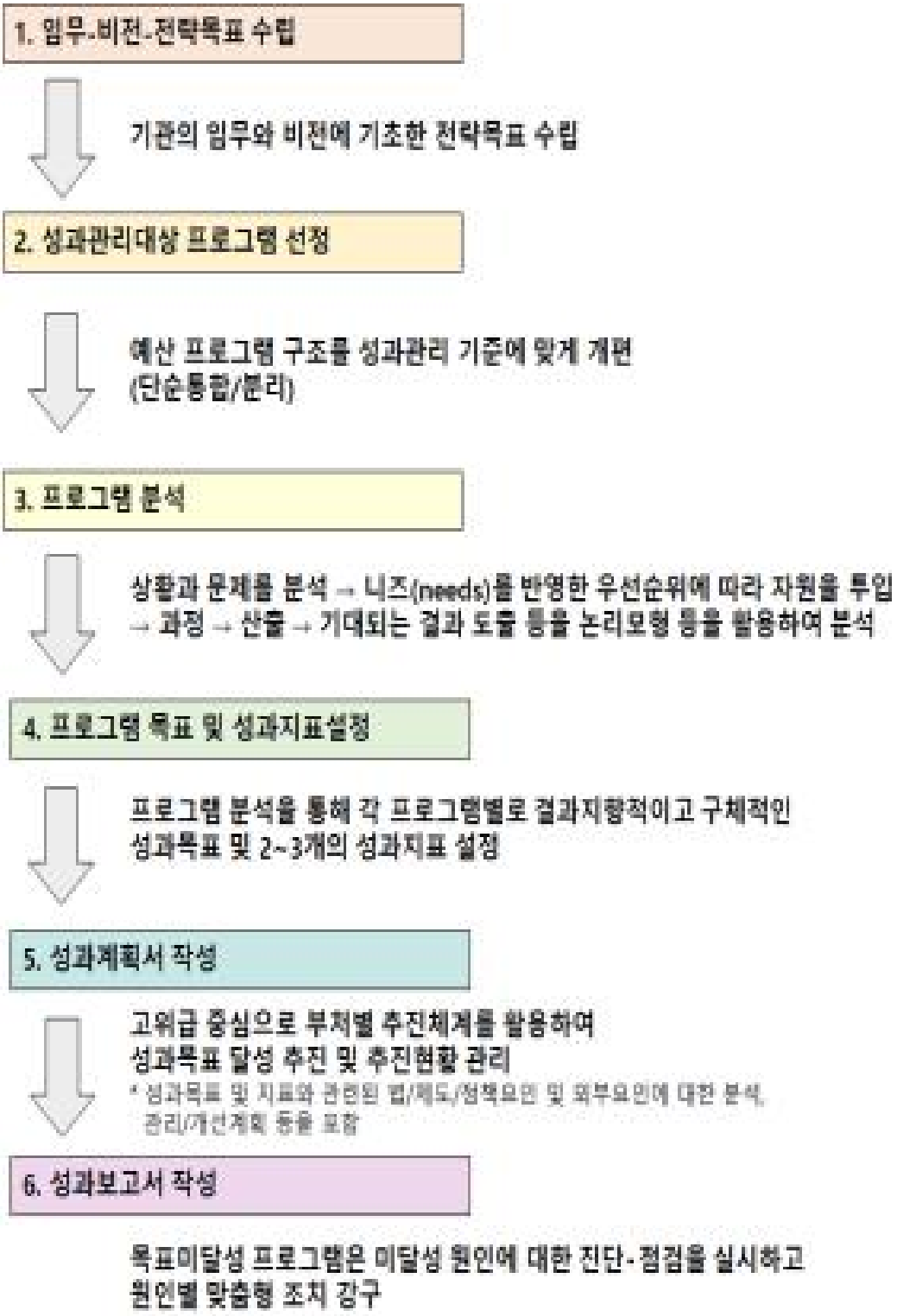
즉,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각 정부기관은 성과계획서에 그간의

정책성과, 해당연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 인원 등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성과목표체계에 따라 임무, 비전,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를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프로그램 목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임무,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 달성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 기여도와 목표달성 과정 및 성과미달성 원인분석과 향후 성과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성과목표관리 주요 절차 >


1. 임무-비전-전략목표 수립
기관의 임무와 비전에 기초한 전략목표 수립
2. 성과관리대상 프로그램 선정
예산 프로그램 구조를 성과관리 기준에 맞게 개편
(단순통합/분리)
3. 프로그램 분석
상황과 문제를 분석 → 니즈(needs)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투입
→ 과정 → 산출 → 기대되는 결과 도출 등을 논리모형 등을 활용하여 분석
4.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설정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각 프로그램별로 결과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2~3개의 성과지표 설정
5. 성과계획서 작성
고위급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성과목표 달성 추진 및 추진현황 관리
* 성과목표 및 지표와 관련된 법/제도/정책요인 및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
관리/개선계획 등을 포함
6. 성과보고서 작성
목표미달성 프로그램은 미달성 원인에 대한 진단-점검을 실시하고
원인별 맞춤형 조치 강구

2. 성과체계 현황

외교부의 임무는 “외교부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이며,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6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프로그램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교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6	12	29	92

외교부의 2024회계연도 예산 4조 3,645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 예산 총액은 2조 2,776억원이며, 결산액 기준으로는 2조 1,868억원임.

< 외교부 사업별 재정운용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35,059	34,028	43,645	42,646
성과관리 대상	일반재정	15,603	14,928	22,775	21,867
	정보화	0	0	1	1
	R&D	0	0	0	0
	소계(A)	15,603	14,928	22,776	21,868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	3,865	3,717	3,982	3,845
	기본경비	2,797	2,714	2,242	2,177
	교부금	0	0	0	0
	예비비	0	0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294	13	727	16
	보전지출	616	1,251	238	1,477
	기타	11,884	11,405	13,680	13,262
	소계(B)	19,456	19,100	20,869	20,778

2024년도 결산의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전략목표 3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에 2조 104억원(91.9%), “전략목표 4 :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에 813억원(3.7%) 등 외교부의 6개의 전략목표 중 상위 2개 전략목표에 전체 재원의 95.6%인 2조 917억원을 투입하였음.

<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액	비중
□ 전략목표 1 : 한반도 평화 · 번영 및 동북아 안정 · 협력에 기여한다.	131	0.6
□ 전략목표 2 : 상생 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493	2.3
□ 전략목표 3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20,104	91.9
□ 전략목표 4 :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813	3.7
□ 전략목표 5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216	1.0
□ 전략목표 6 :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11	0.5

< 외교부 2024년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외교부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전략목표 Ⅰ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전략목표 Ⅱ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
아세안·동남아·유럽지역 및 중앙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Ⅱ-2
중남미·아중동지역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협력 강화 및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전략목표 Ⅲ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구축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프로그램목표 Ⅲ-2
원자력·비확산·군축 분야 국제협력강화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Ⅲ-3
SDG 달성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프로그램목표 Ⅲ-4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Ⅳ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Ⅳ-1
글로벌 중추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를 확대한다.

프로그램목표 Ⅳ-2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영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략목표 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프로그램목표 Ⅴ-1
다자경제외교 및 주요국과의 지역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 Ⅴ-2
기후·환경·에너지·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략목표 Ⅵ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 Ⅵ-1
외교연구와 교육을 강화하여 역량있는 외교인재를 양성한다.

3.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외교부의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를 보면, 12개의 프로그램 목표에 총 15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15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130% 이상)은 2개, 달성(100~130%)은 13개, 미달성(100% 미만)은 0개임.

< 외교부 2024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6	12	15	2	13	-
		100%	13.3%	8%	-

< 전략목표별 달성 현황 >

전략목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실적	
Ⅰ.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152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Ⅱ. 상생 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521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Ⅲ.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20,855	성과지표 수	4
		달성 / 미달성	4 / 0
Ⅳ.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881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241	성과지표 수	3
		달성 / 미달성	3 / 0
Ⅵ.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25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연번	예산/기금	사업명	예산(억원)		최종 평가	
			'24년	'23년	점수	등급
1	일반회계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53	56	95.7	우수
2	일반회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67	74	95.5	우수
3	일반회계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98	55	95.1	우수
4	일반회계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3	31	94.8	보통
5	일반회계	국내외 교육훈련	74	80	89.8	보통
6	일반회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141	95	89.7	보통
7	일반회계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0	33	89.3	보통
8	일반회계	공공외교 역량강화	161	163	89.1	보통
9	일반회계	인도적지원(ODA)	7,401	2,994	88.9	보통
10	일반회계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7	41	88.8	보통
11	일반회계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6	37	86.9	보통
12	일반회계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54	80	86.7	보통
13	일반회계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5	33	85.2	미흡
14	일반회계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9	33	80.8	미흡
15	일반회계	글로벌 프로그램	3,137	2,296	96.8	우수
16	일반회계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737	972	93.3	보통
17	일반회계	민관협력사업(ODA)	570	479	93.0	보통
18	일반회계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3,066	2,385	91.8	보통
19	일반회계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2,756	2,426	88.9	보통
20	일반회계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1,333	816	87.3	미흡
21	일반회계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44	48	88.6	미흡
22	기금	한국문화해외확산	55	66	99.7	우수
23	기금	정책공공외교강화	85	93	96.9	보통
24	기금	글로벌 협력 강화	51	44	94.0	보통
25	기금	글로벌문화교류	49	55	93.9	보통
26	기금	한국학기반확대	196	181	92.4	보통
27	기금	글로벌인적교류	39	55	90.6	보통

Ⅶ.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시 외교부는 총 53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받은 바, 이에 대해 조치완료 47건 및 조치 중 6건이라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총괄표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제도개선	주의	시정	징계	변상	
조치완료	15	21	11	-	-	47
조치 중	4	2	0	-	-	6
소 계	19	23	11	-	-	53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1) 연례적, 관행적 예산 전용 문제	ㅇ[지적사항] 국외업무여비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임차료 등으로부터 약 80억원 이상의 전용 발생함. 특히 임차료 및 공공세제 등 경직성 항목에서 전용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고질적 문제로 판단됨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국외업무여비예산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ㅇ '24년도 예산 편성시 기관운영기본경비, 재외공관 운영 여비를 전년대비 각각 966백만원, 878백만원 증액 편성한 후, 집행효율화를 통해 편성환율 대비 4.7%를 상회한 연중 고환율하에서도 국외업무여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전용 규모를 '23년도 80억원에서 28억원 수준(12.13일 기준, 총 50억 예상)으로 감축하였음. ㅇ 외교부는 국외업무여비의 연례적인 예산 전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5년 예산 편성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25년도 예산에 국외업무여비를 4,10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서 불요불급한 여비 집행을 자제하고, 여비 규정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2)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	ㅇ[지적사항]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63.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체류국 정부와 현지 교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면밀한 집행계획을	제도개선	ㅇ 탈북민 수 증가 추세 하, ▲해외 탈북민 보호 여건 개선 및 지원 확대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한 관련국·기구와의 협조체계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4년 80.3%(잠정)의 예산 집행률을 기록하였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세워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		※ 2024년 탈북민 입국 인원(236명)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 2024년 의료 진료·심리 상담 총 12회, 보호시설 점검 10회, 유관인사 방한 초청사업·워크숍 4회 실시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3)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지적사항]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은 40~70%대이고, 2023년도의 경우 집행률이 61.8%로 전반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중국측 국내정세 변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주의	○ 최근 4년간 코로나 상황 및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의 사회·경제적 규제 강화 등으로 동 사업 집행에 애로가 많았으나, 2024년도의 경우 중측 국내정세 변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한 결과 동 사업 집행률이 약 80% 수준으로 크게 제고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4)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대행용역 조달수수료 이월 부적절	○ [지적사항] 외교부는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 대행용역' 계약대금으로 2023년 4월과 8월에 각각 선금과 잔금을 수탁기관에 지급하였으며, 조달수수료는 이월하여 2024년 1월 집행하였음 - 조달수수료는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외교부는 즉시 조달청장에 통보하고 조달수수료를 연내 납부했어야 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조달수수료의 부적절한 이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향후 용역 행사가 종료되는 경우 조달수수료 고지서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연도 내 집행함으로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 업무담당자 대상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중 ○ 조치완료일 : 2024년 9월 3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5)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사업을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부적정 집행	○[지적사항] 외교부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의 본회의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정상 및 총리외교 일반용역비에서 2억 8,682만원을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별도의 정상회의 세사업이 편성된 경우 개별 세사업에서 정상회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예산 집행 및 업무 수행을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의	○ 해당 사업 시행 이후에는 별도 정상회의 세부사업 예산이 편성된 경우, 관련 행사 일체를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과는 별개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적사항에 유념하며 별개 사업으로 집행해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6) 국제기구 분담금 자체평가에 대한 관리·보완 필요	○[지적사항]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가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피평가자인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존하고 있고, 개별 부처의 자발성 및 관점 차이로 인해 일관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분담금 납부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분담금 심의위원회는 ▲개별 부처 제출 자료, ▲재외공관을 통해 국제기구측에 확인한 내용, ▲관련 국제기구 담당 외교부 유관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바탕으로 개별 부처 자체평가 내용 및 납부 실적을 검증하고, 객관적·실질적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 중이며, 동 기능 지속 강화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8월 31일	조치완료
(7)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경비 집행 및 관리 강화	○[지적사항] -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가 중도에 사임을 하여 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교부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2021년과 2023년 JPO 조기 사임에 따라 국제기구측이 해당 금액을 반	제도개선	○ 국제기구별 JPO 잔여액 조사 수행(24.11월~), JPO 관련 국제기구와 양해각서 신규/수정체결 시 파견경비 잔액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하는 문안 협의 진행(24.4월~) 등 JPO 예산 집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치중임.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필요	납한 두 건에 대해서만 세입처리를 하였으며, 각 국제기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향후 JPO 파견 시 사용해 오고 있음 - 일부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에 정산 관련 내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연도별·기구별 집행액 및 정산 내역의 체계적 관리가 부재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을 위하여 새로운 국제기구와 양해각서를 맺을 시 파견경비 정산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집행액 및 정산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각 국제기구에서 반납액이 발생하거나,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경우에 기구측 예치 잔액을 신속히 국고로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조치예정일 : 2025년 중	
(8) 차차기이월금 과다 계상 및 이자수입 과소 추계	○[지적사항] 매년 상당액의 결산잉여금을 차차기년도 수입으로 편성하여 그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이 사업 수행에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자수입 추계방식이 최근 5개년 이자수입 평균값을 사용하여 직전 연도의 차차기이월금을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측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확정된 결산잉여금을 바로 차년도 수입에 반영하고,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이자수입을 추계함에 있어 직전 연도의 기준금리 변동 등 외부 환경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기재부와 협의하여 '25년도 수지차예산에 차기이월금 확대(차차기이월금 축소) 반영 조치 - 차기이월금 확대 : ('24) 7,088백만 → ('25) 12,617백만 (78.0%증) ○ '26년도 수지차예산 이자수입 또한 직전 연도 기준금리 변동 등 외부환경 변동 반영 및 확대 편성하여 제출 - (참고) 이자수입 확대 : ('25) 4,144백만 → ('26) 5,592백만 (35%증) ○ 향후에도 국회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과도한 차차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협의하여 수지차예산 편성 ○ 조치완료일 : 2025년 5월 24일	
(9) 디지털정부 ODA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 관련 후속 조치 필요	○[지적사항]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2023.08.)에 "현지국가에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정보시스템 설치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하며 '기관주의'를 통보한바, 이에 따라 디지털 정부 ODA사업은 중단된 상태임 - 추후 감사원은 일률적으로 현지의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관련 법령 개정 진행상황 등에 맞추어 추가대책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밝힘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감사원의 취지를 본부 및 48개 해외사무소 임직원들에게 조속히 공지하고, 디지털정부 ODA 신규사업의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미비를 이유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도개선	○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각 사무소에 해당 사항을 공지 - 관련 디지털정부 ODA 사업 신규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미비를 이유로 일괄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 예정 ○ 조치완료일 : 2024년 9월 9일	조치완료
(10) 한국국제협력단의 징계부가금 내부규정 마련 필요	○ [지적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징계가 있었음에도 징계부가금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제도개선	○ (조치사항) 국회 지적에 따른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에 대한 노무 법률 검토 완료 - (검토결과) 공공기관에서의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은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과의 충돌 가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ㅇ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을 내실화 할것		능성이 있어, 향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적용 검토 가능 * (참고) 공공기관 직원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법적 지위가 상이하여 규정 개정 시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여부 검토가 필요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1월 7일	
(11) 한국국제협력단의 내부감사 제도개선 필요	ㅇ[지적사항] 감사원이 발표한 '2022년도 공직 비리 기동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은 고위직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등 뇌물수수와 같은 비위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체 내부조사 뒤 별도의 인사 처분 없이 퇴직 처리하였음. ㅇ[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비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감사 제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ㅇ 내부통제 강화 조치 - 협력단은 조직 신뢰도 제고 및 청렴·반부패, 윤리적 조직문화 내재화를 위해 ▲ 청렴·반부패 시책 전반, ▲ 인사, ▲ 감사, ▲조직(편제) 부문 제도 개선이 반영된 '청렴·반부패 조직 강화 방안'을 수립 완료 - '청렴·반부패 조직 강화 방안'內 총 20개 세부과제(△청렴·반부패(3개), △인사(6개), △감사(6개), △조직(5개))를 설정하고, 부서별 세부과제 이행 결과 점검을 통해 기관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견제 체제 강화,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및 직원들의 조직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 ㅇ 임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불가하였으나 임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가능하도록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o 조치완료일 : 2022년 6월 8일	
(12) 부진한 인도네시아(ODA) 사업의 대책 마련	o[지적사항] 19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된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실집행 3% 미만이고, 28억 8천만원이 편성된 '인도네시아 재난대응 공공의료 훈련 역량강화사업'은 사업변경절차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 - 2023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두 사업과 관련하여 저조한 집행률이 지적되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외교부가 집행의지 피력으로 편성됨 o[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PCP(공식사업요청서) 등의 철저한 검토와 사업수행역량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주의	o (신규사업 PCP 검토 강화) '26년도 신규사업 제안서 검토 시, 사업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원국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 검토 강화 - 신규 후보사업 PCP 검토 시,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현지 정권 교체 등 현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 검토 실시 o (사업수행역량 강화)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연차별 점검 실시하여 연간 계획 대비 공정률 및 사업진행 과정상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수행역량 확보를 위하여 노력중 o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0일	조치완료
(13)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국가별 협력사업에 대한 신속한 후속 절차 마련	o[지적사항]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사업 추진 미비로 인한 사업취소 검토가 요구되었으나 2023년까지 집행 없는 예산편성이 지속된 후 2023년 4월 사업이 최종 취소됨 o[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향후 수원국의	주의	o KOICA에서는 수원국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경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변경 제도에 따른 절차와 외교부 승인을 거쳐 '사업취소'를 실시하고 있음 o '25년부터 연도별 예산편성시, 각 국별 사업현황 및 수원국 측 협조정도, 사업별 문제현황 등을 검토하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절차를 마련할 것		여, 문제가 있는 국가 혹은 사업의 경우 더욱 면밀한 예산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예정 o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0일(연중)	
(14)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o[지적사항] - 아이티 UNDP 취약계층 여성역량강화 및 소득증진 사업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현지 정세로 인해 전면 중단된 상태로, 2022년부터 편성액을 감액하였으나 매년 불용됨 -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외교부가 집행의지를 피력하여 편성됨 o[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아이티 지원사업 예산의 불용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주의	o 본 사업은 2022년에 대부분의 사업 활동이 종료되었으나, 국제기구 위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2023년 소규모 사업 모니터링 예산(5천만 원)을 편성하였음. o 그러나 2023년 아이티 내 갱단 폭력의 전국적 확산과 이에 따른 법치 약화 및 정부 통제력 저하 등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됨. o 앞으로는 현지 정세를 포함하여 예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o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20일	조치완료
(15) 인도적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o[지적사항] 인도적지원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을 위험과 체계적이고 시	제도개선	o 우리 정부는 2024년 2월 무상개발전략회의 계기 의결된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우리 인도적지원의 효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기적절한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인도적지원 계획과 인력, 조직 역량이 미흡할 수 있음 - 인도적지원 프로젝트별 성과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효과성 평가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의 도입과 인도적지원 예산 사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제3자 감사 시스템 도입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인도적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급격하게 증가된 인도적지원 예산이 체계적이고 적시에 집행되도록 주기적인 집행률 점검 등의 노력을 할 것		속 노력 중임. - 구체적으로는 ▲국제기구와의 정책협의를 통한 사업 집행관리 강화 ▲국제기구 이사국으로서 기구 운영·활동에 대한 관여 확대 활성화 ▲현지 모니터링 등을 진행 중임. ○ 우리 정부는 인도적지원 예산 집행률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23년 99% 이상의 집행률을 달성함. - 향후에도 우리 인도적지원 예산이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집행률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16)인플루언서 활용 해외안전홍보예산 확대 부적절	○[지적사항]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안전여행 홍보 사업은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이 2차례에 걸쳐 6천 5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안전여행 홍보 사업과 같이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경우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해외안전여행 홍보 사업 수행을 위해 편성된 2024년 예산을 면밀히 집행하였으며, 2025년 예산 내 편성된 관련 예산을 면밀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17)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	○[지적사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일부 세목조정 등 변동 및 국외여비 (220-02) 확보 명목으로 전용한 예산 총 5억 9,300만원이 발생함. 부산엑스포는 예산 편성 및 심의 당시에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같이 예상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시정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사업은 '23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나, 향후 해당 사업과 같이 예상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18)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의 집행부진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은 AI, 반도체 등 첨단과학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미・중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동 사업의 23년도 예산 18억 900백만원 중 6,700만원은 이・전용되었고 6억 8,300만원(약39%)이 불용처리되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과학기술 외교강화 사업의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중복 및 추진취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도에는 예산 현액(2024.12.31.기준) 1,140백만원 중 911백만원(80%)을 집행하여 전년(61%) 대비 집행률 제고 ○ 향후에도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나갈 예정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19)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 필요	○[지적사항]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 필요	제도개선	○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오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기본급 2.9% 인상 및 △60여 개 공관 주거보조비 인상, △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과 인건비 현실화 및 주거보조비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행정직원 운영지침 상 기본급 초임 인상 등의 처우개선 조치를 시행하였음. 또한, 금년 대비 2025년 정원이 23명 증원되었으며, 7.5% 예산 증액을 통해 내년도 처우 개선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0)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 이월 관행 시정 필요	○[지적사항] 외교부가 제출한 연도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이월이 있었으나, 결산상에는 이월이 없었던 것으로 표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내 이월 예산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상 규정의 취지를 감안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도 세출예산 관련,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④항(반납 특례규정)에 따라 이월된 재외공관 시설비의 이월명세서를 「국가재정법」 제48조에 근거하여 '25.1.24. 송부 완료 ※ '25년부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기재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변경되면서 재외공관 자체 이월처리가 아닌 연말 국고 일괄반납 후 이월 처리되므로, 재외공관 예산현황이 결산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1월 24일	조치완료
(21)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현실화 필요	○[지적사항]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4차례에 걸쳐 46억 9,300만원을 전용하였고, 자체 내역변경을 포함할 경우 52억원이 부족하였음. 과도한 기본경비의 이·전용은 기관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연례적 이전용을 지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제도개선	○ 매년 예산편성 시 실소요액보다 적게 교체여비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 이전용 등이 불가피하였으나, 그간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 및 예산당국과의 적극적인 예산증액 협의로 2025년도 교체여비는 예년 대비 상당 규모로 증액(총 139억, 약 35억(33.6%) 증액)되었음. - 내부적으로도 △주요 항공사와의 항공운임 우대계약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할 것		확대, △각 지역별 이전비 기준액 산정을 통한 이전비 상한선 설정,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 노력 중 - 다만, 항공·해상운임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사태 등 국제 정치·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 감안 필요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2) 예산 심의 당시와 다른 변칙 집행 부적절	○[지적사항] 재외공관장회의 개최를 위하여 약 8억 5천만원의 전용이 발생함. 행사장 조성 용역(2,500만원에서 9,900만원), 임차료(3,300만원에서 5,200만원) 등 예산 내역과 변동된 내역이 다수 발생한 바, 용역이나 임차료 등은 예상 및 계획이 가능한 예산 항목임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공관장회의 개최 사업과 같이 예산 변동 내역이 다수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예산 중 예측 가능한 비목(일반용역비, 임차료 등)은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주의하겠음. - 2026년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 변동이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23) 기여금 감면으로 인해 폐지·삭감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적사항] 최근 여권발급 비용 인하, 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이루어지는 등 국제교류기여금의 재원이 축소되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기반	제도개선	○ ▲타 기금 전입, ▲타 기관 협업 사업 추진, ▲민간 기부금 확대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재정 당국과 지속 협의하겠음.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확대 사업은 집행률 99.1%, 글로벌인적교류 98.8%, 한국문화해외확산 99.5% 등으로 높은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재단의 우수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재원 축소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 타기금 전입, 민간 기부금 확대 등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수입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중	
(24)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산 편성 근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할 필요	ㅇ[지적사항] 한국학 강좌 운영사업, 한국학 전문가 육성사업 등 국제교류재단 사업에서 예산 편성 근거와 집행 내역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편성 근거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국회 승인 사업은 감액시키고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도 함. 업무 위탁 계획이 무산된 것, 한국학 현황 조사 용역비를 다른 연구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 연구 성과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 등은 국회가 가진 정부 예·결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임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국제교류재단이 사업 계획과 집행 결과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ㅇ 재단 사업의 상당수가 공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기상 예산편성(정부안)이 완료된 이후에 공모를 시행하므로 편성 시 정확한 산출 근거(건수 및 단가)를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평균 수치를 활용하였음. ㅇ 외교부는 향후 재단 사업계획 수립 시, ▲과거 실적 및 차년도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출근거 산정에 정밀성을 높여 사업계획과 집행 결과 간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하겠음. 또한, ▲집행 과정에서 예산계획이 과도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 및 통제를 더욱 강화토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25) 외교센터 민간임대 공실률 개선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필요	○[지적사항] 국립외교원은 '19.11월부터 현재까지 온비드(국가공매포털)를 통해 유상사용허가 일반입찰 공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층 민간임대 공간의 경우 2020년 외교부가 외교타운을 환수하여 관리를 맡은 이후 2024년 현재까지 공실인 상황이며, 현재 민간임대 전 공간이 모두 공실임. ○[지적사항] 국립외교원 근무인원 1명당 사무공간이 상당부분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 사무실 입주현황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일부 본부 조직을 외교타운으로 입주시키는 방안, 임시조직인 기획단이나 TF의 활동 공간으로 외교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 외교타운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외교원 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근무인원 1인당 사무공간을 재조정할 것	주의	○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 공간 6실 중 4실은 유·무상사용허가로 민간업체, 유관 공공기관 등이 사용 중이며, 잔여 2실은 온비드 민간임대 공고 중 - 기임대 4실은 ①온비드를 통한 유상사용허가 1실, ②재외동포협력센터(재외동포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무상사용허가 2실, ③장애인단체 무상사용허가(카페 운영) 중 ○ 국립외교원의 연구기능(교수연구실, 연구센터 등) 및 교육기능(강의실, 세미나실 등) 공간을 제외하고 외무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7개 행정부서)은 1인당 권고기준 범위 내 적정 운영 중 ○ 조치예정일 : 2025년 중	조치중
(26) 국회 예산·결산심의권 침해하는 부당한 예산전용	○[지적사항] 외교부 아태국은 '한일관계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추진과정에 한일관계개선으로 국외여비 수요 폭증을 이유로 정책연구비 4,950만원을 국외여비로 사용함.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사업' 에서 99.5백만원을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증진」사업으로 전용,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내외여비, 행사장비용	주의	○ (사업 비목별 예산 편성 노력)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협의 수요 증가를 감안, 본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사업 비목별 예산에 맞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중임. ○ (2024년도 국외여비 편성) 2023년도 국외업무여비 부족분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한바, 규정에 맞게 집행 중임.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등으로 사용하고도 '출장보고서의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방이 공개 곤란함을 양해 바란다' 며 출장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한일관계 개선이 국외여비 수요 폭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올바른 한일관계사 대응에 사용해야 할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국회예산 심의권 침해뿐 아니라 국민 일반 정서에도 심히 어긋남 o[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한일관계사 대응에 사용해야 할 정책연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국회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시정하고 출장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		*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내 여비 - (23년) 185백만원 → (24년) 208백만원 o (출장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출에 협조) 출장보고서의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방이 공개 곤란하나, 우리부가 자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해 적극 협조하였음. o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7) 세목조정을 통하여 적합한 비목의 예산확보 후 광고요청 필요	o[지적사항]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의 정부광고는 집행목적에 적합한 비목의 잔액이 부족하였음에도 지출원인행위(광고의뢰)를 하여 「국고금관리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집행을 하였음. o[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지출원인행위 전 적합한 예산비목을 확인하고 잔액을 확보한 후 사업을 집행하도록 할 것	시정	o 향후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적절한 비목을 확인하고 사전에 세목조정할 의무를 충분히 다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사후 세목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대상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수시로 점검 중 o 조치완료일 : 2024년 9월 30일	조치완료
(28)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적극적 노력 필요	o[지적사항]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으로서 의무적 지출에 해당할 것이나, 2023년도는 환차손, 회계연도 불일치 또는 국제기구의 수	시정	o 2023년도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액은 2024년도 예산으로 전액 납부 완료하였으며, 2024년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또한 미납액 없이 납부함.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정예산안 제출 등으로 인해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하였음 - 기타 의무부담금은 예산 편성액을 전액 집행하였음에도 환차손 등으로 인하여 24억 9,800만원을 미납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의무분담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이용(移用) 등 현행제도를 활용하여 고지받은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노력할 것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29) 국제기구 분담금 분류기준의 일관성 미흡	○[지적사항] - 국제질병퇴치기금에 편성되었던 CEPI(감염병예방혁신연합), GPEI(글로벌 소아마비 박멸 이니셔티브), Global Fund(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에 대한 국제기구 분담금이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았음 - 동일한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분담금을 분할하여 각각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납부하거나 기금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분류하지 않음 ※ 2023~2024년 CEPI, GPEI, Global Fund 분담금 예산 편성액	주의	○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분담금을 분할하여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각각 납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기구 분담금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해 일관성을 제고해나갈 계획 - 국제기구분담금법 제3조*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바, 각 분담금 심의시 여타 법률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동 법 적용 및 심의의 일관성 제고 예정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5.5.31)</th></tr>
<tr><td></td><td>(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3년</th><th colspan="2">2024년</th></tr><tr><th>일반회계</th><th>국제질병
퇴치기금</th><th>일반회계</th><th>국제질병
퇴치기금</th></tr><tr><td>CEPI</td><td>31,687</td><td>-</td><td>-</td><td>23,418</td></tr><tr><td>GPEI</td><td>3,701</td><td>-</td><td>-</td><td>3,903</td></tr><tr><td>Global Fund</td><td>64,612</td><td>10,320</td><td>-</td><td>32,525</td></tr><tr><td>합계</td><td>100,000</td><td>10,320</td><td>-</td><td>59,846</td></tr></table>자료: 외교부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같은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분담금을 분할하여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각각 납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금 사업이라도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는 등 관리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할 것</td><td></td><td></td><td></td></tr>
<tr><td>(30)
소규모
무상원조사업(ODA)의 집행가능성 검토 및 집행절차 관련 법령 개정</td><td>○[지적사항] 아시아태평양지역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사업선정 시에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아 2023년도 예산액의 34.8%를 이월하였음.

○[지적사항]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집행절차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관련 절차를 규정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은 개정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회의 시정요구에 적합하게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td><td>시정</td><td>○ 외교부는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절차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 수립
- ‘25.3월 기준, 예산 집행 절차에 대한 원칙 및 예외 규정을 명시하는 등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 지침」 개정 절차 완료

※ 외교부는 금번 개정에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발굴 시 재외공관-KOICA 사무소 간 협의 규정 추가 ▲출연금 사업 취지에 맞게 KOICA의 사업 집행 근거 보완 등 사업 절차 개선

○ 2023년 아태지역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중 이월된</td><td>조치완료</td></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		사업은 2024년도 집행률 85.23% ○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21일	
(31) 소규모 무상원조(ODA)의 수원국별 지원한도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 기준 준수 필요	○[지적사항]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불특정 소규모 원조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세부내역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되며, 일반협력국에 대한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수원국별 지원한도가 크게 상향조정되고 예외에 해당하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및 현금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사업 집행 시 소규모 무상원조 수원국별 지원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예외적 배정기준을 명확화하며, 물자지원원칙을 준수할 것	제도개선	○ 외교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선정을 위해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외교적 수요 및 지원 원칙과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 심의 및 확정 중 - 특히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 : 국제기구 선거, 기업활동 지원, 재외국민 보호 또는 우리 ODA의 가시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도 검토 ※ 2023년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대상국 100개국 중 중점협력국은 18개국 - 아울러, 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여건상 물자 지원이 곤란하거나 원조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현금지원을 검토하고 있음. ※ 2023년 현금지원 비율은 4.0%로 2022년(0.2%)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5개년 현금지원 비율*은 감소 추세임. * 2019년 19.0% → 2020년 17.6% → 2021년 8.1% → 2022년 0.2% → 2023년 4.0%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ㅇ '25년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최종수요 조사시, 중점협력국에 대한 예외적 배정 방침을 명시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32) 국가별 협력사업(ODA) 예산의 조정 최소화 필요	ㅇ[지적사항] 일부 국가별 협력사업(ODA)은 전용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전액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낮음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연도 내 집행가능한 금액을 추계하여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과도한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것	주의	ㅇ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면밀한 사업기획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형성조사' 제도 개선 및 규정 개정 조치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2월 26일	조치완료
(33) 신규 ODA 사업 예산 편성시 수원국의 특성 고려 필요	ㅇ[지적사항] ODA 사업은 다년간의 사업 경험을 통해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신규 ODA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과정이 모호한 국가별 협력사업의 경우 1차년도에 사업기획단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주의	ㅇ '25년부터, 연도별 예산편성시, 각 국별 사업현황 및 수원국 측 협조 정도, 수원국 행정절차의 용이성, 사업별 문제현황 등을 검토하여, 일차적으로 신규사업 예산 차등 편성 추진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2월 17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34) 국가별 협력사업(ODA)의 철저한 사업관리방안 마련 필요	ㅇ[지적사항] 실제 집행단계에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확인되고 있으나, 명목집행률이 높게 나타나 국가별 협력사업의 명목집행률과 실제 사업추진상황 간에 괴리가 있음. 또한, 2023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의 집행이 저조함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 ODA 사업의 실질적 집행정보를 제공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 배정하는 방식을 시정하며, 사업의 지연요소를 면밀히 관리할 것	시정	ㅇ 개도국에서 다년간 시행되는 ODA 사업 특성상 취약한 수원국 환경변화에 따라 부득이 예산 이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내외부 요청시 현액기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연중) ㅇ KOICA에서는 사무소-본부간 모니터링, 연차점검, 집행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지연요소 발생시 적극 대응 중 (연중)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0일(연중)	조치완료
(35) 분쟁 및 취약국 지원(ODA)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 마련 필요	ㅇ[지적사항]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약정 체결 및 1차년도 약정액 지급이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원조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표면적인 집행률은 높으나 국제기구의 실집행은 저조한 경우가 있음 ㅇ[시정요구사항] 신규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ㅇ 국제기구 실집행률 강화 노력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현장 사무소 중심 사업 모니터링 강화 및 본부 주도 월별 점검 실시 △국제기구 재정보고서를 통한 정기적인 실집행률 확인 등으로 집행률 저조시 보완실행계획 요구 또는 약정액 규모, 지급 시기 등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 추진 중 ㅇ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 추진 방식 전면 개편을 통해 분쟁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사업관리 방안 마련 - 기존 사업 발굴 방식下 제안서 접수 후 국제기구와의 약정 체결까지 통상 1년이 소요되어 당해 신규사업이 연말에 착수될 수밖에 없었던 한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계를 극복하고자 단발성 프로젝트 방식의 사업 발굴을 지양하고, 3년 단위 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함.(24년 신규사업 3분기 내 약정체결 완료) - 장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내 대상국가를 최소 2개국 이상으로 두어, 대다수 분취 사업의 예산집행률 리스크였던 수원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중단의 위험성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적 방안 마련 - 프로그램형 사업 운영 시, 연도별 실집행률이 우수한 사업에 다음 단계 프로그램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으로, 국제기구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 중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0일(연중)	
(36) 민간기업 및 비영리기구를 지원하는 ODA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지적사항]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내역사업 중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파트너 기업의 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고,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은 해외민간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어 자금의 집행 및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계속사업의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예산이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상에 공개되지 않아 사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CTS	시정	○ CTS 및 IPS 사업의 집행점검 강화 - (CTS) 동 사업 참여 대상이 중소·스타트업 기업 대상인 바, 기업의 채무불이행, 체납 등 기업 부실 발생전조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파트너기업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사업 참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수시 모니터링 중 * NICE 기업신용변동 조기경보 시스템, 신용보증기금 기업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BASA) 기업정보 조회 시스템 등 활용 - (IPS) 금년부터 사업 선정단계에서 파트너기관의 검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사업 및 IPS 사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CTS 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사업수행기반 마련과 IPS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원투입에 따른 효과성을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다년도에 걸친 계속사업의 사업내역을 공개할 것		증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실사(Due Diligence) 제도를 정규화('24.7.12)하고, 참여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 o CTS 사업 수행기반 강화 - 외교부-중기부 및 산하기관(KOICA-창업진흥원-기술보증기금) 간 MOU 병행 체결('24.4.1.) 계기 CTS 기술 현지실증 및 사업화 단계를 통합한 Fast Track을 신규 마련하는 등 우수한 국내 혁신벤처기업이 CTS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o IPS 성과평가 체계 고도화 - KOICA는 사업별로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공여 재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사업 효과성을 검증,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평가체계를 지속 고도화 o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사업내용 공개 - 동 사업은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현행화된 사업명, 기간, 총사업예산 등을 공개 및 분기마다 업데이트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중 o 조치완료일 : 2024년 7월 12일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5.5.31)</th></tr>
<tr><td>(37)해외긴급구호(ODA) 사업 평가시기 조정</td><td>ㅇ[지적사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고 있는바, 결산 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해당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2019-2022년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 국회 보고일
<table><tr><td>구분</td><td>2019년도
결과보고</td><td>2020년도
결과보고</td><td>2021년도
결과보고</td><td>2022년도
결과보고</td></tr><tr><td>일자</td><td>2020. 12. 4.</td><td>2021. 11. 12.</td><td>2022. 8. 31.</td><td>2023. 11. 30.</td></tr></table>자료: 외교부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 결과를 국회에 상반기에 보고하도록 시기를 조정해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td><td>제도개선</td><td>ㅇ 시정요구사항을 감안, ’ 24년도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중</td><td>조치중</td></tr>
<tr><td>(38)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의 수의계약 부적절</td><td>ㅇ[지적사항]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의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목적으로 과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음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과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공개입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진행할 것</td><td>시정</td><td>ㅇ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25.3.26.)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26일</td><td>조치완료</td></tr>
</table>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5.5.31)</th></tr>
<tr><td>(39) 재외공관 직원 개인차량 공용사용비의 차등지급 부적절</td><td>○[지적사항] 재외공관의 직원 개인차량의 공용사용에 대한 지원금은 직무등급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직무등급에 따라서 사용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공적 사용의 정도와 직무등급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음.

※ 직원차량 공용사용 지원비
<table><tr><th>직무등급</th><th>월지급액</th></tr><tr><td>고위공무원 나등급, 9등급, 3급 이상</td><td>$292
※ 공용차량을 제공받으며, 개인차량을 소유한 경우 $145 지급(공관장 등)</td></tr><tr><td>8등급(4급) 이하</td><td>$192</td></tr></table>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직원 개인차량의 공용사용 지원금에 대한 차등지급 방식을 개선할 것</td><td>주의</td><td>○ 재외공무원 직원차량 공용사용 지원비의 직무등급별 차등 지급 방식을 개선, 2025년도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타당한 단일 지급액 기준을 마련함.

- 현재 직무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을 직무등급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월 $210 지급으로 변경

※ 공용차량을 제공받으며, 개인차량을 소유한 경우 $145 지급(공관장 등)

- 2025.1월 중 전 재외공관 대상 재외공무원 직원차량 공용사용비 지급액 변경 공지 및 2025년 상반기 정액지원경비 지급 시부터 시행 예정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td><td>조치완료</td></tr>
<tr><td>(40)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장애인 고용 확대 필요</td><td>○[지적사항] 국가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경우,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으나,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국가예산으로 납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인사 소요 발생시 이를 고려</td><td>제도개선</td><td>○ 외교부는 재외공관 근무환경의 특수성을 감안,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음.

- 외교부 재외공관을 단일 사업장이 아닌 개별 재외공관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 필요

※ 재외공관은 각 공관장이 행정직원 채용 등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공관으로</td><td>조치중</td></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한 인력수급 방안과 함께 장애인 고용 독려방안을 마련할 것		의 전임 등이 불가하고 채용된 공관에서만 근무 o 외교부는 장애인 채용을 적극 독려하는 등 고용의 무부담금 납부액을 줄이는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 중임. o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41)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방안 마련 필요	o[지적사항] 다수의 재외공관에서 리모델링 사업 지연으로 교부된 사업비가 실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연례적으로 공관으로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이 과다함 o[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실소요수준의 예산을 반영할 것	주의	o (이월사유)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서 △국가별 사업 추진 환경이 상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발생 등 해외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차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o (실소요 예산 반영) 이월액을 보다 최소화하도록 타당성 조사 실시 등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2025년 실소요 예산 반영함. o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0일	조치완료
(42) 실제 공사기간 및 사전 행정절차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지연	o[지적사항] 외빈차고지 개축사업은 외빈차량운영팀 사무실 및 외빈차량 보관·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동시에 계상하여 예산현액 중 60.1%를 이월하였고, 관련 행정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주의	o 공사비 등 관련 예산 집행을 금년내 완료하였음. - 향후 이와 같은 공사사업 추진시 사전에 사업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해나가겠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않아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이루어짐.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외빈차고지 개축사업 등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 공사, 감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27일	
(43)국회 감액 사업의 증액 집행 부적절	○[지적사항]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통 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업 예산은 정부안(1억 8,400만원) 대비 5,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나, 외교부는 2023년 제2회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를 위해 5,650만원을 동 사업으로 전용 증액하여 행사장 조성 및 방송 연출 용역 비용으로 집행한바,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을 증액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반하는 동시에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도 위반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소통 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업의 사례와 같이 국회 감액 사업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외교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예산 집행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관 사업에 대한 국회 감액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국회 감액사업의 증액 집행 사례는 없었음 ○ 앞으로도 국회 감액사업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그리고 예산 이·전용과 집행에 있어 국가재정법을 고려하고, 국회의 예산 의결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44)홈페이지 개편 사업의 미추진 및 교체여비로의 전용 부적절	ㅇ[지적사항] 외교부는 2023년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예산(일반연구비 5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당분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동 예산을 재외공관 직원 이부임을 위한 교체여비로 전용함 - 이에 대해 외교부는 내부 직원들의 노력으로 홈페이지 개편 사업으로 계획한 일부 기능을 개선함에 따라 일반연구비 예산 5억 9,400만원을 불용하고 불용액 중 5억 9,000만원을 재외공관 발령 직원의 이부임 항공료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는 당초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예산을 홈페이지 개편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재외공관 직원의 이부임을 위한 교체여비로 융통했다는 점에서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가 있음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홈페이지 개편 사업 미추진 및 전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시정	ㅇ 홈페이지 개편 예산(5.9억)은 당초 용역 사업으로 계획했으나, 자체 인력 등을 통한 개선 성과 등으로 용역 시행 필요성이 부족하여 조기에 불용 결정 ㅇ 교체여비는 재외공관 이부임 및 전임 등 직원 인사이동 관련 필수적인 경비로 매년 예산편성 시 실소요액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반영되어 전용이 불가피하였음 ㅇ 향후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예산 목적에 맞는 집행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0월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45)무상 ODA 주관기관으로서 리우마커 표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ㅇ[지적사항] 우리나라 무상 ODA의 '농림수산(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운송 및 저장', '환경보호' 분야 일부 사업에서 리우마커가 미표기됨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보고되는 ODA 지원규모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집계되었음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무상 ODA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리우마커의 미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우마커 표기실태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ㅇ 무상원조 시행기관 대상 그린 분과 회의 개최(11.20.) - 그린 ODA 현황 및 추진계획 설명 - 기후변화 ODA 통계지침 및 리우마커 가이드라인 안내 - 향후 시행계획 제출시 그린 ODA 표기 누락 방지 요청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1월 20일	조치완료
(46) 차차기이월금 규모의 감축 필요	ㅇ[지적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매년 상당액의 결산잉여금을 차차기년도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사업수행에 활용하지 않음 - 결산잉여금에서 차차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클 경우 결산잉여금 발생 시점부터 수입계상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됨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차차기이월금의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가결산 과정을 통해서 결산잉여금을 추계하고, 이를 차기이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시정	ㅇ해외ODA사업 특성상 환율 및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가결산을 통한 결산잉여금 추계는 변동 가능성이 높은바, 기재부와 협의하여 '25년도 수지차예산에 차기이월금을 확대하여 차차기이월금 규모를 축소함. - 차기이월금 확대 : ('24) 7,088백만 → ('25) 12,617백만 (78.0%증) ㅇ향후에도 국회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과도한 차차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지차예산 편성 예정 ㅇ 조치완료일 : '24년 12월 10일(국회예산안 확정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47) 이자수입 추계방식의 개선 필요	ㅇ[지적사항] 2023회계연도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의 이자수입 예산(23억 7,300만원)보다 실제 수납된 결산 규모(85억 400만원)가 61억 3,100만원 만큼 더 큰 상황으로, 이자수입 추계가 면밀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5개년 평균값을 사용하는 기계적인 이자수입 추계방식 대신에 직전 연도의 기준금리 변동 등 외부환경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주의	ㅇ ’26년도 수지차예산 이자수입 편성시 직전 연도 기준금리 변동 등 외부환경 변동 반영 및 확대 편성하여 제출 - (참고) 이자수입 확대 : (’25) 4,144백만 → (‘26) 5,592백만 (35%증) ㅇ 향후에도 국회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이자수입이 과소편성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지차예산 편성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5월 24일	조치완료
(48) CTS Seed 2 및 Seed 3에 대한 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ㅇ[지적사항]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은 Seed 0-3 단계별로 설정한 목표수준이 상이하여 Seed 1의 성공만으로는 수원국의 사회경제발전과 같은 성과를 직접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시정요구사항]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Seed 2 및 Seed 3에 대한 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ㅇ Seed2·3 단계에 대한 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4년 사업공모 시 자격요건에 Seed1을 거쳐야 한다는 제한을 삭제하고, ▲CTS Seed1·2 통합형(현지실증 및 사업화 단계) Fast Track 단계를 신설하여 혁신벤처 기업의 ODA 참여 확대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0일(연중)	조치완료
(49) 한국미술 전담 큐레이터에 대한 급여지원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ㅇ[지적사항] 한국전문 기금큐레이터직 설치 지원사업은 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조성한 후에 큐레이터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재원투입 시점과 채용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제도개선	ㅇ 국회 지적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단과 협력하고 있는 해외 주요 박물관/미술관은 급여지원형 사업의 경우 지원 종료 후 고용 지속 보장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보다 안정적인 기금형 사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2024년 7월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인해 재단 수입이 감소하면서 차년도 신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시정요구사항]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미술을 전담하는 큐레이터에 대한 급여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규 기관 지원 공모가 불가능하여 해당 프로그램 도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평가됨. 단, 향후 신규 공모를 위한 예산 확보 시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50) 예상 가능했음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예산 전용	○[지적사항]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유치교섭 출장, 행사 개최 등으로 18억 5,700만원 계상 -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타 사업에서도 예산이 소요됨 ○[시정요구사항] 외교부 예산으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예산 소요 내역 일체,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 및 분석자료, 외교부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BIE회원국들의 2030세계박람회 지지표명 현황 파악 후,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총리, 기업, 국회의 전방위 교섭 전략 수립' 활동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	시정	○ '23년 12월 국회 부산엑스포 특위 보고를 위해 투표 결과와 분석 결과가 담긴 보고자료를 국회에 송부한 바 있으며, 외통위에 당시 유치교섭 상황과 정부의 대응 과정을 상세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8.29.) 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8월 29일	조치완료
(51) 미국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노력 강화 필요	○ [지적사항] 정부는 미국 내 15,000개의 전문직 비자(E-4) 쿼터를 신설, 우리 국민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n Act)」을 추진 중이며, '미국 경제동향 대응' 사업으로 미 의회 내 지지의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도개선	○ 해외 자문회사에 대해 객관적 평가지표를 통해 매년 실적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 23년 724백만원에서 ' 24년 1,014백만원, ' 25년 951백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운용중임. ※ (' 19) 688백만원 → (' 20) 654백만원 → (' 21-' 23) 724백만원→ (' 24) 1,014백만원 →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그러나 2019년 이후 관련 예산은 매년 약 56만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미국 내 반이민 정서로 법안 발의 서명에 동참하는 의원의 수는 감소하고 있음 o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해외자문회사 실적 점검 및 예산 증액, 정상외교와 해외투자 시 안건 반영 등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에 노력을 강화할 것		('25) 951백만원 o 외교부는 한·미간 정상급을 포함한 각급 교류(우리 측 고용회사가 주선하는 미 상·하원 의원 등 관련 인사 면담 포함) 및 미 재계, 학계 인사 아웃리치 계기마다 「한국동반자법」 지지를 계속 요청중이며, 우리 국민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에 필요한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o 조치완료일 : 24년 1월 1일부터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 집행중	

< 예비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1) 연례적 예비비 사용 및 예비비 과다 배정 지양 필요	ㅇ[지적사항]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및 2023년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사용한 문제가 있음.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예비비 규모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시정	ㅇ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여건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정상외교 수요 증가를 감안, 본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예비비 규모 축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중임.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2024년의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2) 예비비 과다 배정 지양 필요	ㅇ[지적사항]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및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회의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예비비 중 상당액이 이월 및 불용됨 ㅇ[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과도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비비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 및 집행에 주의할 것	주의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ㅇ 2023년도에 차년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낙찰차액 등은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웠는바, 추후 유사 행사 개최 과정에서 예비비 신청 시 면밀한 사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ㅇ 올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약 96% 기록(24.12.31 기준) **(참고)**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예비비 이월 및 불용 내역 - **(이월)** ▲연구용역 잔금(30백만원) ▲홍보대행용역 잔금(917백만원) - **(불용)** ▲낙찰차액(444백만원) ▲기획단 사무실 보증금 면제(300백만원)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5.31)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 24년도에는 예비비의 과도한 편성 방지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예산 편성 및 행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위해 주의를 기울임. ○ 올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약 92% 기록('24.12.31. 기준)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문 의 처
이규희 입법조사관 (6788-5263)
조가영 입법조사관 (6788-5264)
노세현 입법조사관 (6788-5266)
박철호 입법조사관 (6788-5270)
안미옥 입법조사관 (6788-5270)